

# 맞춤형 공간전략 도출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진단체계 연구: ‘현안 체크리스트’와 ‘지역 Space-MBTI’의 개발과 적용

A Study on a Diagnostic System for Population Decline Areas to Develop Customized Spatial Strategies

박성남 Park, Sungnam

최가윤 Choi, Gayoon

류수연 Ryu, Suyeon

장민영 Jang, Minyoung

(auri)

[기본연구보고서 2023-10](#)

**맞춤형 공간전략 도출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진단체계 연구:  
‘현안 체크리스트’와 ‘지역 Space-MBTI’의 개발과 적용**

A Study on a Diagnostic System for Population Decline Areas to Develop Customized Spatial Strategies

지은이 박성남, 최가윤, 류수연, 장민영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02. 18.)

인쇄 2023년 10월 26일, 발행: 2023년 10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4

<http://www.auri.re.kr>

가격: 25,000원, ISBN: 979-11-5659-427-7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진

| 연구책임

박성남 연구위원

| 연구진

최가윤 연구원

류수연 연구원

장민영 부연구위원

| 외부연구진

김선영 PLQ파트너스 대표

조지영 문화공간연구소 대표

추용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횡병춘 Newcastle University 박사과정

채정은 Newcastle University 박사과정

성민기 Newcastle University 박사과정

박상우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주찬영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차하림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 연구심의위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조영진 연구위원

성은영 연구위원

조형선 행정안전부 과장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구자문위원

권용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김기현 동서울대학교 교수

김은정 계명대학교 교수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

박주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변나향 충북대학교 교수

변혜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송하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준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호 한밭대학교 교수

이제승 서울대학교 교수

임윤택 한밭대학교 교수

임준홍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지영 문화공간연구소 대표

추용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제1장 서론

2020년 우리나라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되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하면서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위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대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2017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이 확대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통합지원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였다. 2020년 12월, 2021년 6월에 인구감소지역의 정의와 지원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2021년 11월 인구감소지수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을 지정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제29조가 신설되면서 중앙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을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도입되었다. 2022년 6월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지역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향과 체계를 마련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처럼 인구감소 위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지원 정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자치체는 여전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투자계획의 평가결과(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에 따라 재원을 차등 지원받는다.

인구감소지역들은 인구 ·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경제적 특성 등으로 인해 각기 다른 인구감소 양상들을 보인다. 따라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전략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현안에 대한

객관적, 전문적 분석의 한계, 공간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지원체계 미미 등으로 해당 지역적 특성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업의 적절성, 다양성, 현실성을 저하시키며, 지역 여건 및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 효과적인 국비지원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마다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현안 및 가치 분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공간전략을 수립하여 실제 투자 사업에 적용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사회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감소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지역진단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아래 두 가지 연구 질문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지역특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한 진단체계 및 공간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 연구 질문1 : 인구감소지역의 현안과 지방소멸 대응 사업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
- 연구 질문2 : 인구감소지역의 현안과 특성을 맞춤형으로 진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 제2장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맞춤 공간전략 필요성

지역의 인구감소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지역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수 구성 지표를 활용해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개의 군집으로 구분하였다. 군집1은 총 5개 지역이 속한 유형으로, 연평균인구증감률은 가장 낮으나 주간인구와 인구밀도는 가장 높은 비교적 규모가 큰 대도시 지역(부산 서구, 대구 남구 등)이다. 군집2는 총 27개 지역으로 수도권에서는 인천 옹진군과 경기 연천군, 가평군을 포함하며, 유소년비율이 가장 높고 고령화율은 낮은 지역으로 생산가능인구 수가 비교적 많은 지역이다. 군집3은 33개 지역이 속한 유형으로, 최근 인구감소 추세가 비교적 덜한 지역이나 인구밀도나 주간인구 등은 하위에 속하는 지역이다. 군집

4는 24개 지역이 속한 유형으로, 유일하게 수도권을 포함하지 않으며 모든 지역이 충청과 전라, 경상도 등 비교적 소규모 지역에 속해 있다. 고령화율이 가장 높고, 조출생률과 유소년비율은 가장 낮으며, 청년층의 유출이 가장 큰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생산가능인구 수가 적고 주간인구와 재정자립도, 인구밀도가 모두 낮은 지역이다.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4개의 군집유형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업 방향에 대해 도출하였다. 군집1은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확보하여 지역 인구를 유지”, 군집2는 “신산업 발굴 등 경제기반 구축, 생활 및 여가 서비스 확충, 출산 및 보육 서비스 강화를 통한 지역 청년 정착 유도 및 인구 유지”, 군집3은 “인접 도시와의 연계 및 인프라 중심의 공간 재구조화, 인구 유출 최소화 및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정착기반 마련, 지역특화 사업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 군집4는 “인근 지역과 연계한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고령인구 대상 정주환경 개선하고 전원도시,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구 및 생활인구 유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현안 이슈와 각 이슈를 고려한 공간전략을 도출하고 관련하여 투자계획 내용을 분석하였다. 인구감소지역의 현안은 사람과 장소측면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사람 측면에서의 현안은 총 6건(하위 17개)으로, ‘1. 경제활동인구 감소’, ‘2. 저출산 · 고령화 사회’, ‘3. 배타적 지역사회’, ‘4. 인구 · 사회적 불균형’, ‘5. 미흡한 교육 및 양육 환경’, ‘6. 기타’ 순으로 도출되었다. 장소 측면에서는 총 6건(하위 22개)의 현안으로, ‘1. 물리적 환경 낙후’, ‘2.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 악화’, ‘3. 도시행정 비효율화’, ‘4. 지역 공동화’, ‘5. 이동성 감소’, ‘6. 기타’ 순으로 도출되었다. 인구감소지역 현안에 따른 공간전략으로는 8개 부문 35개 공간전략이 도출되었는데, 8개 부문은 ‘1. 거점 조성 및 재구조화’, ‘2. 경제활동 기반 마련’, ‘3.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 ‘4.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5. 특화주거 공급 및 환경 개선’, ‘6. 지역특화 사업’, ‘7. 공간 장소성 강화’, ‘8. 연계정책 촉진’ 순으로 도출되었다. 각각의 공간전략들은 사람 및 장소 현안과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89개 자체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기반으로 키워드 빈도분석을 시행한 결과, 사업명으로는 ‘조성사업’, ‘플랫폼’, ‘일자리’ 등의 키워드가 빈도가 높았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일자리’, ‘활성화’ 등의 키워드가 빈도가 높았다. 이는 물리적 하드웨어 시설에 대한 비중이 높을 것이며,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과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비중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앞서 도출된 공간전략에 따른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 기초지원계정(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하드웨어 시설 공급과 운영상의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융합되어 있으며, 생활인구 및 인구 유입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수의 지역이 1순위로 인프라와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그 다음으로 지역 특화, 인구 유입 및 생활인구 정착 지원, 공간 장소성 강화 사업이나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등을 계획하였다. 광역지원계정(15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생활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부분도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 제3장 인구감소지역의 공간적 특성 진단도구 개발

지역 특성 진단도구는 정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현안 체크리스트’와 지역의 정성적 가치를 분석하는 ‘지역 Space-MBTI’로 구성된다. ‘현안 체크리스트’는 지역의 인구, 공간, 경제·사회·행정 부문에 대한 현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내부의 현황분석은 가장 현실적이고 심도 깊은 판단을 제공하지만, 경우에 따라 기본적이거나 중요한 요인들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할 우려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과 계획 수립의 주체인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와 간접적으로 비교된 정량데이터들을 참고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공공에서 개방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각 지자체 간 현안들을 비교 및 진단하여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구 부문은 인구변화, 인구구성, 인구특성과 관련된 79개의 지표들로 구성하였다. 공간 부문은 공간구조, 주거환경, 도시인프라, 교육인프라, 문화·복지 인프라, 안전 관련 지표들로 구성하였다. 경제·사회·행정 부문은 고용, 사업체, 삶의 질, 사회서비스, 행정 관련 지표들로 구성하였다.

‘지역 Space-MBTI’는 지역 주체들이 체감하고 희망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진단지를 As-is와 To-be로 구분하여 지역의 특장점에 대한 인식과 향후 지역의 성장 방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 주체들이 체감하는 계획 수립 및 참여를 유도하고, 광역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효율적인 기금 집행과 투자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 가능하다. 진단 틀은 지역을 버티는 사회경제적인 파워로 판단되는 ‘인구(Energy)’, 물리적인 환경의 특징인 ‘입지(Position)’,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 및 특장점과 가장 긴밀한 ‘지역가치(Value)’ 및 ‘특수성(Lifestyle)’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측면을 양분하여 8개의 속성을 독립적으로 배치하였으며, 8개의 속성은 2개씩 그룹화되는 구조로 총 경우의 수에 따라 총 16개로 구성하였다. ‘인구’ 측면은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인구 비중으

로 방문 인구(관광객 등)와 정주인구 중 많은 비중에 따라 E 또는 I로 구분하였으며, ‘입지’는 지역을 대표하는 입지적 특징이 자연적 요소(Nature)가 많은지, 경제적 거점이나 도시적 인프라(Structure)를 구축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지역가치’는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가치가 전통적 유산(Tradition) 관련이 많은지, 근대 및 현대 산업시설 등 새로운 경제적 엔진을 조성하는 미래 가치(Future) 요소가 중점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특수성’은 한시적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쓸어 내거나 계절성이 강한 일을 영위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Temporary)과 일반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며 계획적이고 일상성이 기반이 되어 있는 루틴적 스타일의 지역(Journey)으로 구분된다.

## 제4장 진단도구의 시범 적용: 강원도 사례

3장에서 개발한 지역 특성 진단 도구의 효용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강원도 내 12개 인구 감소지역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시범설문을 진행하였으며, 별도로 구축한 지역 현안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 및 정체성을 진단하였다. 아울러 진단 결과를 2022년 및 2023년에 각 지역이 제출한 투자계획과 비교해 보고 지역 진단의 필요성과 지역 맞춤형 계획의 방향성을 토의하였다. 유형 지표는 125개 체크리스트(속성 질문 5개, 진단 지표 질문 120개)로 구성된 질문지 형태로 2023년 6월 동안 진행하였다. 조사결과는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응답 샘플 444개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정성 데이터의 적용 척도를 3가지 방법으로 적용하여 각각의 차이점을 반영한 최종 진단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모든 응답을 긍정 배점으로 하는 ‘척도1’과 응답자의 최종 응답을 선택하는 ‘척도2’, 긍정과 부정 응답에 대한 배점을 각각 플러스와マイ너스로 적용한 ‘척도3’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척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지역은 해당 지표에 대한 해석을 추가하여 최종 진단 결과를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강원도 인구감소지역 전체 진단 결과, Space-MBTI가 ENFP로 도출되었다. 이는 외부 생활인구에 대한 니즈가 강하고(E) 자연적 요소가 풍부하며(N), 미래산업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며(F) 물리적 개발 및 투자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이고 콘텐츠적 투자(P)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진단 항목에서 현재(As-is)와 미래(To-be)에 대한 인식 조사를 구별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S’항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경제적 및 산업적 요소에 대한 부족과 니즈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었다. 강원도 내 대부분의 지역이 유사한 분석 결과를 보이지만, 지역마다 또는 지역 내 속성 그룹마다

차별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재분석 및 기금 사업 기획 연계를 재검토하여 사업의 안정적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진단도구를 적용해 본 결과 통합 지표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해 볼 수 있었다. 정량지표에서 도출된 부분이 정성지표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두 가지 접근 방법에 신뢰도가 확인된다는 반증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금사업들이 지역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 주민 그룹 간 의사소통의 정도와 정보의 전달, 그리고 사업 방향성에 대한 인지, 지역 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그룹간 지향하는 사업 방향과 지역 가치가 달랐다. 따라서 진단도구를 활용 시 이러한 점을 분석 및 반영하여 하향식(Top-down) 기획을 상향식(Bottom-up)으로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황과 니즈, 그리고 향후 지향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통해 지역의 니즈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지역 그룹 커뮤니티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방향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수한 목적과 일부 행정의 의도가 아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기획을 정교화하는 합리적인 도구로써 활용성이 기대된다.

## 제5장 결론

본 장은 연구의 요약, 시책제안, 정책 추진 방향, 연구의 의의로 구성되는데, 연구의 요약은 앞서 정리한 내용들을 요약한 부분으로 시책제안과 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내용부터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책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지방소멸기금 투자계획 수립 체계 및 평가 개선안이다. 평가과정에 현안 체크리스트와 지역 Space-MBTI를 추가하여, 개별 지역 중심의 차별화된 평가틀을 제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지방소멸대응 기금 배분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광역차원의 장기 로드맵 계획 수립에 대한 시책이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은 지역의 인구적,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 인구감소 양상이 상이하므로, 다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인구 감소대응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 문제로 개별 지역의 사업에 앞서 전반적인 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기본방향은 크게 7가지 방향으로 ‘1. 인구감소 원인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2. 지역별 전략 차별화’, ‘3. 도시 관리 차원의 공간계획 연계 필요’, ‘4. 도시 생산성 및 자립성 향상’, ‘5.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전략 마련’, ‘6.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7. 중앙 및 지자체 역할 정립’이다.

본 연구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과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의 관리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관리를 지역의 현안 및 강점과 약점, 특성 및 정체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체계를 개발하였다. 둘째,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 사업의 지역 맞춤형 방향제시를 위한 진단도구를 제공하였다. 셋째,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지역 파트너십이 함께 공유하고 의견의 차이와 합의점을 공론화할 수 있는 진단 과정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의의와 함께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연구에서 도출한 공간전략 중 일부는 공간 부문이 아닌 경제적, 정책적 전략에 해당하는 점이다. 둘째, 2022년, 2023년 도의 투자계획의 분석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토의함에 따라 한정된 기간에만 해당하는 시사점으로 머물 수 있다. 셋째, 진단체계의 개발은 연구진의 브레인스토밍에 의존하여 보편적 합리성을 지녔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진단 목적,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진단도구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매년 신규 투자계획의 종합분석을 통해 시계열적인 대응 방안의 흐름을 분석하고 정책 발전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진단체계가 지역의 종합적인 현황과 잠재력 및 가치를 진단하는 도구인 점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 외 다른 지역에도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도시진단 도구로써 활용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진단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고려하고, 필요한 기준 설정과 적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역의 대응 노력은 더욱 발전할 필요가 있다. ‘사람’과 ‘장소’의 측면에서 지역의 현안, 잠재력,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공간전략’을 처방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제안들이 인구감소지역들이 우려하는 ‘지방소멸’의 과정을 역전시킬 엉킨 실태래를 푸는 도구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주제어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공간전략



---

# 차례

CONTENTS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1
1) 인구감소 위기 문제에 대한 지원 정책 확대	1
2) 지방소멸의 실태	3
3) 지역 현안 및 정체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공간전략의 필요성	7
2. 공간전략과 진단체계의 개념	8
1) 공간전략	8
2) 도시관리	8
3) 공간진단체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 주요내용	10
2) 본 연구의 차별성	10
4. 연구 목적,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13
3) 연구의 방법	13
4) 연구 질문	15
5) 연구의 흐름	16

## 제2장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맞춤 공간전략 필요성

1. 인구감소지역 유형화와 실태의 차이	18
1) 인구감소지수 구성 지표 기반 개략 유형화	18
2) 군집 유형별 특성의 차이	19
3) 사례로 본 인구감소지역 실태의 차이	21
2. 유형별 대응의 차이	32
1) 투자계획 분석에 따른 군집별 대응의 차이	32
2)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대응방향 차이	33
3. 위기 현안 이슈 분석	39
1) 사람 측면에서의 인구감소지역 현안	39
2) 장소 측면에서의 인구감소지역 현안	42
4. 장소 단위 공간전략	45

---

# 차례

## CONTENTS

5. 공간전략 기준 투자계획 내용 분석	51
1) 기초지원계정(89개 인구감소지역)	51
2) 광역지원계정(15개 광역지자체)	55
6. 소결	59

### 제3장 인구감소지역의 공간적 특성 진단도구 개발

1. 인구감소지역 진단도구의 개발 필요성	64
2. 지역 ‘현안 체크리스트’의 개발	66
1) 현안 체크리스트의 의의	66
2) 현안 체크리스트 이용 데이터	66
3) 데이터 셋 (Data set) 구축 및 분석 과정	67
3. 지역 정체성 자가 진단 도구 ‘지역 Space-MBTI’ 개발	69
1) 유형 지표의 항목 구성	69
2) 지역 특성 유형 지표 최종 차트 구성 및 진단 툴킷 개발	74
4. 소결	76

### 제4장 진단도구의 시범 적용: 강원도 사례

1. 현안 체크리스트의 시범 적용	80
1) 강원도 12개 인구감소지역 현안 비교	80
2) 지역별 세부 분석 결과: 강원도 H군	83
3) 지역별 세부 분석 결과: 강원도 K군	87
2. 지역 Space-MBTI 시범 적용	91
1) 지역 Space-MBTI 시범적용 개요	91
2) 강원도 분석 결과	93
3) 분석 결과 종합(적도 1,2,3 적용의 비교)	94
4) 최종 진단 결과	100
3. 지역별 세부 진단 결과	101
4. 소결	118

---

## 차 례

CONTENTS

### 제5장 결론

1. 연구 요약	121
2. 시책 제안	125
1) 지방소멸기금 투자계획 수립 체계 및 평가 개선안	125
2)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관련 정책 개선 제안	132
3. 정책 추진 방향	134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37
참고문헌	139
Summary	143
부록 1. 투자계획 사업 사례	151
2. 지역 특성 진단표	165

---

#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	2
[표 1-2] 인구 부문 통계 비교 결과	4
[표 1-3] 공간 부문 통계 비교 결과	5
[표 1-4] 경제·사회·행정 부문 통계 비교 결과	6
[표 1-5]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 사업의 분야별 구분(사업건수)	7
[표 1-6] 선행연구 검토 결과	11
[표 2-1] 군집분석 결과	18
[표 2-2] 군집별 인구감소지수 지표의 평균값(원 데이터) 및 최종 군집중심(정규값)	19
[표 2-3] 군집분석 결과 군집별 차이 요약	21
[표 2-4] 그룹 간 차이 비교 결과	26
[표 2-5] 동일 그룹 간 차이 비교 결과	31
[표 2-6] 1차 전문가 의견 수렴에서 도출된 사람 측면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현안	40
[표 2-7] 1차 전문가 의견 수렴에서 도출된 장소 측면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현안	43
[표 2-8] 1차 전문가 의견 수렴에서 도출된 장소단위 공간전략	47
[표 2-9]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역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공간전략별 구분 사업 수	53
[표 2-10] 89개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 순위별 사업의 공간전략 구분	54
[표 2-11] 15개 광역지자체 지역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공간전략별 구분 사업 수	57
[표 2-12] 89개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 순위별 사업의 공간전략 구분	58
[표 3-1] 체크리스트 구성을 위한 사용 기초 통계(통계청 자료)	67
[표 3-2] 현안 체크리스트 구성에 활용한 현안 지표	68
[표 3-3] 질문 항목 요약	75
[표 4-1] 강원도 인구 관련 지표분석(12개 인구감소지역)	80
[표 4-2] 강원도 공간 관련 지표분석(12개 인구감소지역)	81
[표 4-3] 강원도 경제·사회·행정 관련 지표분석(12개 인구감소지역)	82
[표 4-4] 강원도 H군 인구 관련 지표분석	83
[표 4-5] 강원도 H군 공간 관련 지표분석-1	84
[표 4-6] 강원도 H군 공간 관련 지표분석-2	85
[표 4-7] 강원도 H군 경제·사회·행정 관련 지표분석-1	85
[표 4-8] 강원도 H군 경제·사회·행정 관련 지표분석-2	86
[표 4-9] 강원도 K군 인구 관련 지표분석	87
[표 4-10] 강원도 K군 공간 관련 지표분석-1	88
[표 4-11] 강원도 K군 공간 관련 지표분석-2	89
[표 4-12] 강원도 K군 경제·사회·행정 관련 지표분석-1	89

---

##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4-13] 강원도 K군 경제·사회·행정 관련 지표분석-2	90
[표 4-14] 사례 분석 지역 분석 데이터 개요	91
[표 4-15] 데이터 분석 방법 및 상세	92
[표 4-16] 강원도 진단 결과(척도1 반영)	95
[표 4-17] 강원도 진단 결과(척도2 반영)	97
[표 4-18] 강원도 진단 결과(척도3 반영)	99
[표 4-19] 태백시 지표 분석	101
[표 4-20] 삼척시 지표 분석	103
[표 4-21] 홍천군 지표 분석	104
[표 4-22] 횡성군 지표 분석	106
[표 4-23] 영월군 지표 분석	107
[표 4-24] 평창군 지표 분석	109
[표 4-25] 정선군 지표 분석	110
[표 4-26] 철원군 지표 분석	111
[표 4-27] 화천군 지표 분석	113
[표 4-28] 양구군 지표 분석	114
[표 4-29] 고성군 지표 분석	116
[표 4-30] 양양군 지표 분석	117

---

#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6
[그림 2-1] 부산시 영도구 고령인구 비율 추이	22
[그림 2-2] 군집별 사업명 키워드 빈도 워드클라우드	32
[그림 2-3] 군집1 유형의 사업방향	34
[그림 2-4] 군집2 유형의 사업방향	35
[그림 2-5] 군집3 유형의 사업방향	37
[그림 2-6] 군집4 유형의 사업방향	38
[그림 2-7] 사람 측면에서의 인구감소지역 현안	41
[그림 2-8] 장소 측면에서의 인구감소지역 현안	44
[그림 2-9] 장소단위 공간전략	50
[그림 2-10] 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명 키워드 빈도 워드클라우드	51
[그림 2-11] 사업내용 키워드 빈도분석 워드클라우드	52
[그림 2-12] 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명 키워드 빈도 워드클라우드	55
[그림 2-13] 사업내용 키워드 빈도분석 워드클라우드	56
[그림 2-14] 사람 및 장소 측면의 현안 연계 장소단위 공간전략	61
[그림 3-1] 지역특성 기반 유형 지표 개발 프로세스	70
[그림 3-2] Category1 인구 항목 특성 진단 차트	70
[그림 3-3] Category2 입지 항목 특성 진단 차트	71
[그림 3-4] Category3 지역가치 항목 특성 진단 차트	72
[그림 3-5] Category4 라이프스타일 항목 특성 진단 차트	73
[그림 3-6] 지역특성 유형 지표 종합 차트	74
[그림 3-7] 지역특성 유형 지표 진단 툴킷(Toolkit)	75
[그림 4-1] 강원도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93
[그림 4-2] 강원도 진단 결과(척도1 반영)	94
[그림 4-3] 강원도 진단 결과(척도2 반영)	96
[그림 4-4] 강원도 진단 결과(척도3 반영)	98
[그림 4-5] 강원도 지역 진단 방향성 분석(척도1 반영)	100
[그림 4-6] 태백시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101
[그림 4-7] 삼척시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103
[그림 4-8] 홍천군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105
[그림 4-9] 횡성군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106
[그림 4-10] 영월군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108
[그림 4-11] 평창군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109

---

##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4-12] 정선군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111
[그림 4-13] 철원군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112
[그림 4-14] 화천군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113
[그림 4-15] 양구군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115
[그림 4-16] 고성군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116
[그림 4-17] 양양군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117
[그림 5-1] 진단체계의 적용 방안	126
[그림 5-2] 정책 추진 방향	136
[그림 5-3] 정책 기본방향과 공간전략 간 관계	136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 2. 공간전략과 진단체계의 개념
  -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 4. 연구 목적, 범위 및 방법
- 

## 1. 연구의 배경

### 1) 인구감소 위기 문제에 대한 지원 정책 확대<sup>1)</sup>

2020년 우리나라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되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하면서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위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대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2017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이 확대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통합지원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였다. 2020년 12월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sup>2)</sup>」 제2조제9호가 신설되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를 법률상에 규정하였으며, 2021년 6월 1일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21년 11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소멸 선제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방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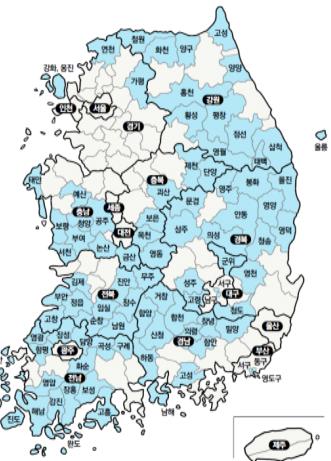
1) 박성남, 류수연, 최가윤, (2023). 인구감소지역 균집분석에 따른 균집별 대응방향.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4(4), 39-52.에 게재된 내용이고, 해당 논문은 본 연구과제의 중간 산출물을 활용해 작성 · 게재한 논문임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2023년 6월 9일에 폐지되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통합되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에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 주도, 중앙 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제안이 제시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또한 지역의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이 제안되었으며, 범정부 협업 국고보조사업(2022년 기준 52개, 총 2조 5,600억 규모) 시 우대 지원하는 사항이 제안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수<sup>3)</sup>」를 개발하여 2021년 10월 소멸위기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과 관심지역 18개 지역을 지정하였다.

[표 1-1]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

구분	지정 지역
인구 감소 지역 (89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 회군, 용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 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 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 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 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 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 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 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 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 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관심 지역 (18개)	대구 동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경 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대전 중구, 경북 경주 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 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 포천시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rtf/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검색일: 2023.01.26.)

2021년 12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제29조가 신설되면서 중앙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을 10년(2022~2031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입되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sup>4)</sup>에 설치되며, 조합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운영한다(행정안전부, 2022a).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되며, 자자체는 예산 편성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해 지방소멸에

3) 인구감소지수: 연평균 인구증감율,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rtf/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검색일: 2023.01.26.)

4) 기존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해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조합(출처: 행정안전부, 2022a. p.1)

대응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역이 주도적으로 전략과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며,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우수한 지역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성과 지향적 성격을 가진다.<sup>5)</sup>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행정안전부, 2022c). 지원대상은 광역 15개(서울, 세종 제외), 기초 10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총 122개 지자체이며 인구감소지역에 95%, 관심지역에 5%를 배분한다. 기초는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며 광역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한다.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종합적으로 지원 할 근거가 마련되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지역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향과 체계를 마련하는 기반이 구축되었다. 또한, 지자체 주도로 지역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도는 시·군·구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국가는 시·군·구와 시·도의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도록 하였다.<sup>6)</sup> 또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한 투자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례 지원,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되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2) 지방소멸의 실태<sup>7)</sup>

### ① 인구 부문

인구감소지역의 연평균인구증감률은 -0.012%로 이외 지역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입 및 전출인구 비율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이외 지역보다 전반적인 수치는 낮으나 이외 지역은 전입인구 비율이 전출인구 비율을 상회하는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전출인구 비율이 전입인구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를 예상해 볼

5)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irt/sub/a06/b06/localextinctionFund/screen.do>(검색일: 2023.01.26.)

6)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https://www.gaok.or.kr/gaok/bbs/B0000010/view.do?nttId=14439&menuNo=200090> (검색일: 2023.01.26.)

7) 통계적 수치를 기반으로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세종, 제주 제외)의 인구 및 공간, 경제·사회·행정적 상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와 현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문별 통계 지표값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2023.05.11.)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축하였다.

수 있다. 천명당 순인구 이동 및 청년 순이동률 또한 인구감소지역은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며, 만명당 유치원 원아수 및 초등학생수도 이외 지역의 거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인구감소지역이 이외 지역보다 조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가임기 여성 인구를 바탕으로 한 수치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 대비 실제 출생아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유아인구(0~5세) 비율은 이외 지역이 인구감소지역보다 1.5 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의 고령인구비율은 이외 지역의 2배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수치로만 보았을 때 인구감소지역은 초고령사회 기준(20% 이상)을 상당 부분 넘긴 것으로 볼 수 있어 인구구조 상 고령화로 인한 문제 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내 고령층의 증가 및 청년층의 유출, 유아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연령은 이외 지역보다 약 10년 높게 나타났다.

독거노인가구비율 또한 인구감소지역은 전체 1/4 정도로, 1/10 수준인 이외지역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 비율은 인구감소지역과 이외 지역 모두 30%대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지역 인구구조 및 특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인구감소지역은 1인 가구 중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외 지역보다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소멸 대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과 다문화 혼인 비중의 경우, 천명당 외국인 수는 이외 지역이 더 높았으나 다문화 혼인 비중은 인구감소지역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1-2] 인구 부문 통계 비교 결과

통계 지표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	통계 지표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
연평균인구증감률	-0.012	0.002	신혼부부수 비율	3.134	5.042
전입인구 비율 (전입/주민등록)	10.411	14.268	유아인구(0~5세) 비율	2.449	3.994
전출인구 비율 (전출/주민등록)	10.936	14.125	평균연령	52.072	43.452
천명당 순인구 이동	-5,248	1,430	합계출산율	1.013	0.835
청년 순이동률	-0.052	0.001	1인가구 비율	38.010	33.467
고령인구비율	32.453	17.112	다문화 혼인 비중	8.143	7.009
만명당 유치원 원아수	62.156	113.411	독거노인가구비율	18.498	8.318
만명당 초등학생수	354.880	520.697	인구 천명당 외국인수	18.392	22.367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2023.05.11.)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② 공간 부문

이외 지역의 도시지역 면적은 인구감소지역의 3배 이상이며,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인구 감소지역 대비 1.8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포장률 및 상·하수도 보급률 역시 이외 지역이 인구감소지역보다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편, 1인당 녹지지역 면적은 인구감소지역이 이외 지역보다 약 3배 정도 높았으며 녹지 비율 또한 인구감소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의 인구 이동 및 감소, 지방소멸 수준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빙집비율 및 노후주택비율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이외지역의 2 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 수와 규모를 알 수 있는 대학교 재학생 수는 인구감소지역이 이외 지역의 1/10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반면, 만명당 유치원수 및 초등학교수는 인구감소지역이 이외지역보다 2배 또는 그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인구감소지역의 만명당 유치원 원아수와 초등학생수가 이외지역의 절반 정도에 그친 것을 고려했을 때, 교육 수요 대비 시설 공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관련 시설의 증가보다는 지역 인구의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의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는 이외 지역 대비 약 3.5배 더 많았으며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와 요양기관수 역시 인구 감소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공간 부문 통계 비교 결과

통계 지표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	통계 지표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
1인당 녹지지역 면적	945.528	316.777	만명당 초등학교수	3.296	1.205
1인당 주+상+공 면적	267.810	109.954	유0·천명당 보육시설수	16.455	17.461
녹지 비율	72.065	59.377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15.328	4.436
도시지역 면적	32,895.889	103,983.578	문화기반시설수	8.910	16.044
도시지역인구	33,755.697	317,132.927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19.584	6.561
도시지역 인구비율	54.747	94.083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27.270	15.398
노후주택비율	41.043	20.629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병상수	16.513	14.804
빙집비율	13.787	7.436	요양기관수	104.652	497.438
빙집수	3,360.708	7,667.759	인구 십만명당 요양기관수	18.528	16.312
도로포장률	90.742	97.982	교통사고	3.371	2.781
상수도보급률	85.660	97.766	화재	3.371	2.781
하수도보급률	73.984	95.298	범죄	2.697	3.219
대학교 재학생수	1,545.506	16,282.471	생활안전	3.461	2.723
만명당 유치원수	3.444	1.701	김암병	3.393	2.766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2023.05.11.)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③ 경제·사회·행정 부문

인구감소지역과 이외 지역 간 가장 두드러진 차이 중 하나는 거주지 내 및 거주지 외 통근 취업자 비율이다. 이외 지역의 경우, 거주지 내 및 거주지 외 통근 취업자 비율이 6:4 의 비율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거주지 내 통근 취업자 비율이 90% 대로 매우 높고, 거주지 외 타 지역 통근 취업자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 통근이나 업무를 위해 방문 및 체류하는 생활인구가 이외 지역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활인구의 유입을 위해 산업 부문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은 이외 지

역보다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다소 높고, 실업률은 낮으며 청년 고용률은 이외 지역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용직 비중은 이외 지역이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보다 이외 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체당 고용규모는 이외 지역이 다소 높으며 제조업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사업체 비율도 모두 인구감소지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사업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은 이외 지역보다 3차 산업을 위한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 서비스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미충족 의료율이 더 높으며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시설 및 인력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구조 특성상 고령층이 많은 것을 고려했을 때, 보건 및 사회복지와 함께 의료 인프라의 양적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사회복지 예산비중은 이외 지역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재정 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 역시 이외 지역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외 지역 대비 비교적 높은 재정 자주도를 고려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한 자체적 사업 수립 및 예산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4] 경제·사회·행정 부문 통계 비교 결과

통계 지표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	통계 지표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
고용률	67.687	59.918	서비스사업체 비율	56.186	67.182
취업자수	31.027	175.701	제조업 사업체수	697.663	3,732.942
거주지내 통근 취업자 비율	90.932	57.969	제조업사업체 비율	8.749	9.230
거주지외 타지역 통근 취업자 비율	9.068	42.031	제조업 종사자수	4,258.281	27,763.869
경제활동참가율	68.601	61.853	제조업종사자 비율	14.859	17.243
상용직 비중	65.190	76.204	스트레스 인지율	23.380	26.799
실업률	1.394	3.150	주관적 건강수준인지율	47.927	48.636
전체산업 종사자수	26,038.584	161,590.336	인구 심만명당 자살률	33.692	26.685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	473.998	525.274	인터넷 이용률	89.815	92.926
청년고용률	42.374	43.381	미충족의료율	6.452	5.128
사업체수	7,693.854	38,455.036	보건및사회복지사업체 비율	2.655	2.720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141.144	126.018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종사자 비율	11.924	10.144
사업체당 고용규모	3.361	4.078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수	0.826	1.575
도소매업 사업체수	1,708.944	9,897.453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2.326	3.219
도소매사업체 비율	21.391	25.389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비중	24.270	45.226
도소매업 종사자수	3,268.056	24,179.285	재정자립도	10.182	25.422
서비스업사업체수	4,384.281	26,154.781	재정자주도	55.457	48.928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2023.05.11.)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3) 지역 현안 및 정체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공간전략의 필요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해야 할 시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등 각종 국비 지원 사업 등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 여건 및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사업 추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추진 방식은 예산집행의 용이성과 단기적 결과 중심의 사업을 유도하고 있어 특정 유형의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2022년,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총 880건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의 70% 이상이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행정안전부, 2022b). 즉,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에 따른 해당 지역의 계획들은 공간정책 전략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며, 워케이션 공간 조성, 지역청년 일자리 제공, 생활 인프라 조성 등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유사한 전략들을 활용하여 제안하고 있다.

[표 1-5]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 사업의 분야별 구분(사업건수)

구분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노인·의료	보육	교통	기타
사업	'22	226	190	167	84	47	43	24
건수	'23	232	221	193	85	44	47	24

〈분야별 기금사업 예시〉

- (문화·관광) 산책로·캠핑장 개발, 예술·공연·여행 프로그램 등
- (산업·일자리) 기업 유치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청년층 창업·취업 지원 등
- (주거) 노후주택·빈집 리모델링, 골목재생사업 등
- (교육) 교육 시설 건립, 청년 정착 및축형 교육 등
- (노인·의료) 요양병원·건강센터 등 운영, 건강관리사업, 의료인력 정주 환경 개선 등
- (보육) 육아나눔터·놀이터 카페 등 보육 시설 조성, 각종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 (교통) 교통약자 보행로 조성, 대중교통인프라 구축 등
- (기타)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생활인구 확대 사업 등

출처 : 행정안전부. (2022b). p.3.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효과적인 국비지원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마다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행정안전부, 2022a, p.3).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구, 가족, 환경,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 파악할 뿐만 아니라 지역 정체성 측면에서 지역의 정성적 가치를 분석하여 지역의 인구감소 원인, 현안,

잠재력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현안 및 정체성 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에 따른 공간전략을 수립하여 실제 투자 사업에 적용 가능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공간전략과 진단체계의 개념

### 1) 공간전략

공간전략은 도시, 경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련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과 방향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개념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도 적용되었는데,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 전체나 일부 지역, 또는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및 유형·무형의 지역 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의미한다.<sup>8)</sup> 즉,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전략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sup>9)</sup> 또한, 민성희 외(2019)의 연구에서는 공간전략을 균형발전이라는 계획목표를 위해 우리 국토공간을 구조화하고 구조화된 공간(점, 선, 면)별로 균형발전을 위한 기능 배분 및 발전 방향을 만들어 가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sup>10)</sup> 이처럼 공간전략은 지역이 발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의 경제적, 물리적, 자연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한정된 자원과 공간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식과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 2) 도시관리

도시관리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정책, 계획,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에 대한 정의는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은 지역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9)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홈페이지. <https://www.city.go.kr/mobile/info/urban/policy03/link.do> (검색일 2023.09.22.)

10) 민성희 외. (2019).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p.24.

지, 안보, 문화 등에 지역의 다양한 영역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도시관리는 사회와 도시의 변화에 따라 관리의 목적과 대상이 변화하게 되며, 기존의 도시관리는 고성장 시대에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문제 관리가 주 목적이었다면, 현 시점에서는 지역의 쇠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침체, 인구감소,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문제가 도시관리의 주된 목적으로 변화하였다.<sup>11)</sup> 그렇다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도시관리는 쇠퇴 및 축소하는 지역의 기능과 정주환경을 유지 및 효율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과 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 3) 공간진단체계

공간진단은 인구, 산업경제, 토지이용, 주거환경 등에 해당하는 지역의 특성, 문제점, 잠재력에 관한 정보들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활성화지역 진단, 쇠퇴지역진단 등이 이루어진다. 공간진단은 진단영역 설정-진단지표 설정-진단지수 개발-공간 진단-결과 해석에 이르는 절차를 걸쳐 진행되는데, 진단체계는 이러한 진단과정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간진단체계는 일관된 기준과 절차를 바탕으로 지역의 현 상황과 잠재력을 진단 및 평가하여 다양한 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간, 진단영역 간 비교·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공간전략 수립 및 도시관리 추진이 가능하게 한다.

공간전략, 도시관리, 공간진단체계는 양적 도시성장에서 질적 도시성장으로의 도시변화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개념들이다. 특히 고령화, 저출산, 지역경제 쇠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속가능성은 지역의 도시기능의 유지와 발전 측면에서 중요하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간진단을 기반으로 수립되는 공간전략은 이러한 대응방안 마련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공간진단은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잠재적인 발전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진단은 결과적으로 인구감소 대응이라는 일관된 방향 아래 각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맞춤형 공간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하며, 이 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

11) 김종근 (2020), 도시쇠퇴에 따른 지역발전 정책 방안: 도시관리비용 부담완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9(1), p. 148.

###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sup>12)</sup>

#### 1) 선행연구 주요내용

선행연구 검토 결과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구분되는데, 지방소멸 및 축소도시 진단 분야와 소멸지역의 유형화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소멸 및 축소도시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성장 시대의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과 관련한 지표 및 지수를 살펴보거나 축소도시 차원에서 정책 및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방향 및 공간전략을 제안하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김현호 외(2021)는 지방소멸 측정지표를 구성하고 위기지역을 선정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 지자체 사례 및 정책 분석과 지방소멸 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연구이며, 차미숙 외(2021)는 인구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인구변화를 살펴보고 지자체 대응 정책 및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 및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형수 외(2016)와 성은영 외(2015)는 축소도시 측면에서 균린 공간환경 특성 및 국내 축소 메커니즘 특성을 분석하여 공간구조 재편 및 공간계획 과제를 도출하였다.

소멸지역의 유형화 분야는 우선 인구감소 및 소멸위기 진단을 위한 지표를 활용하여 소멸지역의 인구감소 특성에 따라 유형화를 하고, 이후 각 유형에 대응하는 유형별 정책과 제 및 도시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주원·이아라(2022)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발표된 89개 지역을 대상으로 유형화하고 그에 대응하는 지자체 정책을 분석하였다. 구형수 외(2018)와 제현정(2018)은 인구감소지역 도출 및 유형화하고 유형별 공간계획 및 대응정책을 제안하였다.

#### 2)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우리나라 도시의 공간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또는 도시재생 차원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구적 특성 및 광역 단위 중심의 공간분석, 도시차원의 정책 방향 제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별로 다양한 인구감소 양상 및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지역 유형별 지방소멸 대응 공간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현안과 특성에 대한 정량적,

---

12) 박성남, 류수연, 최가윤. (2023). 인구감소지역 군집분석에 따른 군집별 대응방향: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 설계, 24(4), 39-52.에 게재된 내용이고, 해당 논문은 본 연구과제의 중간 산출물을 활용해 작성 · 게재한 논문임

정성적 진단체계를 마련하는 연구이다. 지역의 인구적,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 등 다방면에서 지역 현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정체성 및 가치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도구를 마련하여,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유형 파악 및 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한다. 또한,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공간 정책의 기본 방향과 사업 효과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표 1-6] 선행연구 검토 결과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지방 소멸 및 축소 도시 진단	1 김현호 외.(2021).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 지전략의 개발	· 국가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지방소멸을 방지 하기 위한 대응 전략 개발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지방소멸 관련 이론적 고찰 · 지방소멸 측정지표 구성 및 분석을 통 한 지방소멸 위기 지역 선정과 특성 분석 · 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사례 분석 및 국 내외 지방소멸 관련 정책 분석 · 지방소멸 방지 시책 제시
	2 송미령 외.(2021). 2020 지역발전 지수	· 지역별전지수를 통한 분 석결과 제시	· 문헌연구 · 통계자료 분석 · 멤버이 조사	· 2020 지역발전지수 분석 및 10년 간 변화 비교 · 지역발전 특별지수로서 지역잠재력 지수에 따른 공간분포 및 특징 분석
	3 차미숙 외.(2021). 지방소멸 대응대책 수립 연구용역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 하기 위한 지원시책 발굴 및 제도개선 방 안을 검토하고,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 법안 구축 논의와 법 정부 계획 수립에 활 용 가능한 대안 제시	· 빅데이터분석 · 소셜네트워크분석 · 메타분석 · 전문가자문 · 심층면담 · 정책세미나	· 지방의 인구 변화와 청년 등 인구이 동패턴 분석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원시책 발 굴 및 수요 조사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단기 제도 개선과제 검토 · 해외 지방소멸 대응 시책 사례와 국 내 적용 가능성 검토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 구 축 및 재원 조달 등 실행방안 · 지방 주도성을 강화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기본체계 구축
	4 구형수 외.(2016). 저성장시대 축소 시대 실태와 정책 방안 연구	· 우리나라 도시축소 실 태와 메커니즘을 분석 하고, 이를 토대로 공 간구조 재편전략 및 도 시계획체계 개선방안 제 시	· 문헌연구 · 기초통계 및 공간분석 · 경로분석 · 설문조사	· 축소도시 관련 이론적 고찰 · 우리나라 도시의 축소 메커니즘 특 성 분석 · 국외 정책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관련 정책 평가 및 정책 개 선방안 제시
	5 성은영 외.(2015). 지역특성을 고려 한 스마트 축소도 시재생 전략 연구	·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 대에 맞는 지속성 있 는 도시재생 방안 및 정책을 모색하고 한국	· 문헌연구 · 현지조사 및 담당자 면담	· 도시 쇠퇴와 축소에 대한 개념적 논의 · 우리나라 도시축소 현황 진단 및 국 외 도시재생 계획·정책 사례 분석 · 축소하는 균린의 공간환경 특성 분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형 스마트 축소 도시 재생전략 제시	· 통계 및 지표분석 · 축소 근린 예측 · 전문가 자문회의	석을 통해 토지이용(용도, 규모) 및 관리계획, 수단 모색 ·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을 위한 공간 계획 과제 도출 및 수립 방향 제시
소멸 지역 유형화	6 정주원·이아라. 지역 유형에 따른 특성 분석	정부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수를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의 시·군·구를 4개 군집으로 분류하고, 군집별 특성 분석	· 문헌연구 · 군집분석	· 인구감소 및 감소지역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인구감소지수 구성 지표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89곳 군집분석 · 4개 인구감소지역 유형에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 정책 분석
	7 구형수 외. (2018). 저성장시대 소멸 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유형별 대응 방안 연구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개념 정립 및 실태 분석, 유형별 대응 방안 마련	· 문헌연구 · (집계구 단위) 태분석, 유형별 대응 방안 마련	·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 현황 분석 · 해외 정책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국내 관련 정책 검토 및 한계점 도출 ·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 유형별 정책과제 도출 및 실천방안 제시
	8 제현정. (2018), 인구감소지역의 유형별 실태와 지역의 도시계획적 대응 비교	인구감소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변화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인구감소 유형별 문제점과 대응정책을 분석	· 문헌연구 · 군집분석 · 넷마이너 분석 · 현장답사 · 유관기관 담당자 인터뷰	· 인구감소지역을 5개 유형으로 구분 · 유형화 결과를 바탕으로 3개의 사례지역 선정 및 문제점 실태 분석 · 사례지역별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정책 고찰 ·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인구문제와 시설 및 서비스의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시사점 도출
본 연구	맞춤형 공간전략 도출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진단체계 연구	지역의 인구감소 원인, 구감소지역의 현안 및 특성을 대한 진단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유형별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전략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 제안	· 문헌연구 · 전문가 의견수렴 · 투자계획 분석 · 통계 분석 · 공무원 및 지역 주민 설문조사	· 인구감소지역의 현안 이슈 및 공간 전략 도출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내용 분석 · 인구감소지역 군집 분석 및 군집별 대응방향 도출 · 인구감소지역 지역현안 및 지역 정체성 진단 키트 개발 및 시범적용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추진 방향 및 제도개선안 제시

출처 : 연구진 작성

## 4. 연구 목적,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목적

- 인구·사회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감소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효과적 도시관리를 위한 지역진단체계를 개발
-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2) 연구의 범위

#### □ 공간적 범위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대상인 인구감소지역 89개 기초지자체 및 15개 광역지자체
- 강원도 내 12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진단 도구 시범 적용

#### □ 내용적 범위

-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및 15개 광역지자체의 2022년, 2023년 지방 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 및 시책에 한하여 제안

###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양적 데이터로 지역통계를 바탕으로 한 인구, 공간, 경제·사회·행정 관련 통계지표와 지역 정체성 진단 도구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리커트 척도로 수집하였으며, 질적 데이터로 인구감소지역의 투자계획과 전문가 의견 수렴조사 내용을 수집하였다. 이를 다차원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혼합방법분석(Mixed-method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질적 데이터의 분석은 NVivo12를 활용하여 코드화 및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하였고, 양적 데이터 분석은 Excel과 SPSS를 활용하여 군집분석과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인구감소지역 현안과 공간전략에 대한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자문단 그룹은 총 15인으로 건축, 도시, 문화관광 분야 학계 전문가 7인, 건축·도시

분야 국책연구기관 및 지방연구원 박사급 연구자 8인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의견 수렴은 3차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1차 의견수렴은 2023년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조사되었다. 1차 조사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사람 및 장소 측면에서 인구 감소지역의 현안에 대한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공간전략과 각 전략별 중요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는 사람과 장소 측면으로 인구감소지역의 현안을 범주화하고, 공간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코드화하여 8개 전략 범주로 범주화하였다. 범주화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바탕으로 코드화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주화된 현안 및 공간전략은 관계(Relationships) 설정을 코드화하여 네트워크 시각화를 수행하여 현안과 공간전략 간의 연계성을 이론화하였다.

둘째,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출한 2022년 및 2023년 투자계획서를 자료로 하여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광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서를 바탕으로 내용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먼저 투자계획의 내용과 사업명을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여 키워드의 빈도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사업 순위에 따른 공간전략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1차 전문가 멘파이를 통해 도출한 공간전략 범주 및 세부 전략별로 분류 코딩을 실시하여 전략별 빈도를 비교하였다.

셋째, 행정안전부가 지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인구감소지수 구성 지표값 분석을 통해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지역별로 그룹화하여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8개 인구감소지수 지표와 함께 지역 인구의 전체적 이동 추이를 나타내는 순이동률 등을 고려하여 11개 지표값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활용한 지표는 ①20년간 연평균인구증감률, ②5년간 연평균인구증감률, ③고령화율, ④고령화, ⑤유소년비율, ⑥조출생률, ⑦순이동률, ⑧청년 순이동률, ⑨주민인구, ⑩재정자립도, ⑪인구밀도이며, 2020년 기준 인구 통계 및 주간인구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다.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진 지표들 간의 비교를 위해 지표 정규화 과정을 거쳤다.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를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수 지표 데이터를 바탕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군집의 개수는 군집별 케이스 수의 분포 등 분석을 위한 적합성을 판단하여 4개로 설정하였다.

넷째, 설정된 군집별로 지역이 제출한 2022년 및 2023년 투자계획을 분석하여 사업명 및 사업내용을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 및 사업성격 분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질적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NVivo12를 활용하여 코드화 및 키워드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섯째, 인구감소지역 군집분석을 통해 구분한 4개의 군집유형에 대한 설명 및 정보를 전문가 15인에게 서면으로 전달한 후 2023년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각 군집별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였다. 취합된 의견에 대한 분석은 NVivo12를 활용하여 코

드화하여 유사 답변들의 범주화를 수행하였다.

여섯째, 인구, 공간, 경제·사회·행정 관련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현안 체크리스트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지역 정체성 자가 진단도구인 ‘지역 Space-MBTI’를 연구진의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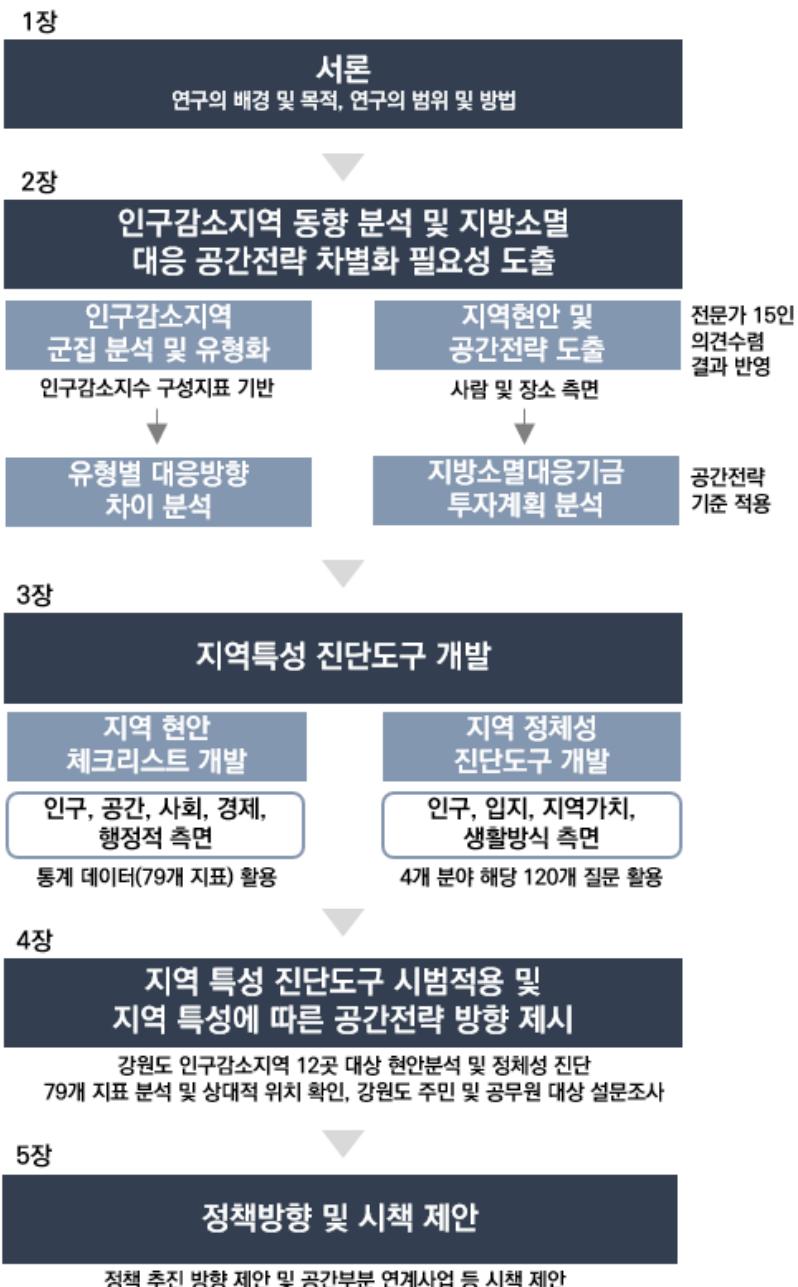
일곱째, 개발된 현안 체크리스트와 지역 정체성 자가 진단도구의 시범 적용을 위해 강원도 12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역 Space-MBTI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강원도 인구감소지역들은 지역에 따라 관광인구 유입 지역, 탄광산업 쇠퇴지역 등 지역 특성에 차이가 있어 지역 간 비교가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시범적용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강원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주민 388명, 공무원 101명 총 489명을 대상으로 취합된 진단 도구 시범 적용 결과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2022년, 2023년 투자계획 내용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 4) 연구 질문

본 연구를 전개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지역특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한 진단체계 및 공간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 ➔ 연구 질문1 : 인구감소지역의 현안과 지방소멸 대응 사업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
- ➔ 연구 질문2 : 인구감소지역의 현안과 특성을 맞춤형으로 진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 5) 연구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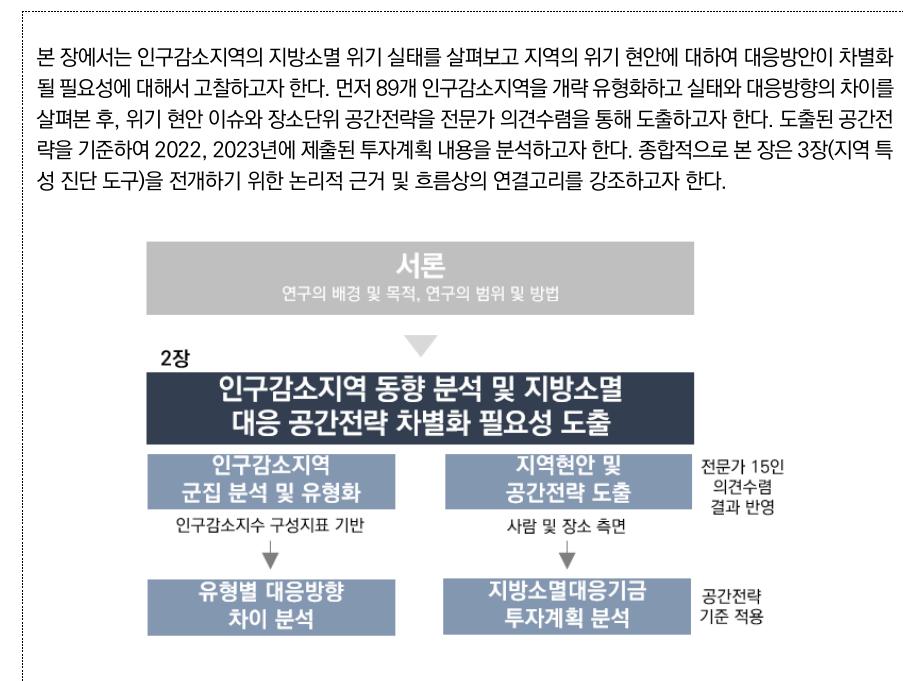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출처: 연구진 작성

# 제2장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맞춤 공간전략 필요성<sup>13)</sup>

1. 인구감소지역 유형화와 실태의 차이
2. 유형별 대응의 차이
3. 위기 현안 이슈 분석
4. 장소 단위 공간전략
5. 공간전략 기준 투자계획 내용 분석
6. 소결

본 장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실태를 살펴보고 지역의 위기 현안에 대하여 대응방향이 차별화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89개 인구감소지역을 개략 유형화하고 실태와 대응방향의 차이를 살펴본 후, 위기 현안 이슈와 장소단위 공간전략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도출된 공간전략을 기준하여 2022, 2023년에 제출된 투자계획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본 장은 3장(지역 특성 진단 도구)을 전개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 및 흐름상의 연결고리를 강조하고자 한다.



13) 박성남, 류수연, 최가윤. (2023). 인구감소지역 군집분석에 따른 군집별 대응방향.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4(4), 39-52.에 게재된 내용이고, 해당 논문은 본 연구과제의 중간 신출물을 활용해 작성·제작한 논문임

# 1. 인구감소지역 유형화와 실태의 차이

## 1) 인구감소지수 구성 지표 기반 개략 유형화

인구감소지역 간 대응 방향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논제에서 개략적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인구감소지수 구성 지표<sup>14)</sup>과 순이동률 등을 고려하여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SPSS를 활용하여 K-평균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별 케이스 수 분포 등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4개의 군집으로 구분하였다. 군집1은 5개 지역, 군집2는 27개 지역, 군집3은 33개 지역, 군집4는 24개 지역이 해당된다.

[표 2-1] 군집분석 결과

구분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부산(3)	서구 동구 영도구			
대구(2)	서구 남구			
인천(2)		옹진군	강화군	
경기(2)		연천군 가평군		
강원(12)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6)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괴산군
충남(9)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예산군 태안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전북(10)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부안군	임실군 고창군
전남(16)		화순군 해남군 영암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구례군 강진군 완도군 진도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신안군
경북(16)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진군	상주시 문경시 고령군 성주군 울릉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경남(11)		밀양시 함안군 거창군	창녕군 고성군 함양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N(89)	5	27	33	24

출처: 군집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표 2-2]는 전체 평균 대비 군집별 인구감소지수 지표의 평균값과 정규값을 나타낸 것으로 군집 별 인구감소 실태를 파악하고, 상대적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지역의 인구활력과 행정수요를 알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인구 증감률은 최근 20년과 5년 간 각각 -1.20%, -1.23%로 나타났다. 지역의 복지수요와 생산성 저하 정도를 나타

14) ①20년간 연평균인구증감률, ②5년간 연평균인구증감률, ③고령화율, ④고령화, ⑤유소년비율, ⑥조출생률, ⑦순이동률, ⑧청년순이동률, ⑨주민인구(2020년), ⑩재정자립도, ⑪인구밀도

내는 고령화율은 28.83%, 향후 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지역 침체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유소년 비율은 17.83%, 인구의 자연적 증감 추이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5.0924이다. 또한, 지역 청년들의 사회적 이동 추이를 나타내는 청년 순이동률은 -5.22%, 지방재정의 여건을 반영한 재정자립도는 10.3234%, 집적된 경제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인구밀도는 580.0461명/km<sup>2</sup>이다.

[표 2-2] 군집별 인구감소지수 지표의 평균값(원 데이터) 및 최종 군집중심(정규값)

군집분석 지표	전체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연평균인구증감률 (20년)	-0.0120	-0.0210 0.0276*	-0.0082 0.095*	-0.0110 0.0801*	-0.0157 0.0554*
연평균인구증감률 (5년)	-0.0123	-0.0207 0.1194*	-0.0111 0.1828*	-0.0104 0.1868*	-0.0145 0.1603*
고령화율	0.2883	0.2253 0.4783*	0.2429 0.534*	0.2930 0.6921*	0.3461 0.8595*
고령화	3.5707	4.4743 0.1736*	4.1659 0.1457*	3.4346 0.0793*	2.9001 0.0309*
유소년율	0.1783	0.1598 0.1771*	0.2114 0.3479*	0.1760 0.2308*	0.1479 0.1378*
조출생률	5.0924	4.4520 0.1269*	6.2414 0.2833*	4.8636 0.1629*	4.2475 0.109*
순이동률	-0.0056	-0.0165 0.1321*	-0.0069 0.2023*	-0.0033 0.2284*	-0.0047 0.218*
청년순이동률	-0.0522	-0.0303 0.2863*	-0.0416 0.2405*	-0.0545 0.1883*	-0.0655 0.144*
주민인구(2020년)	58399.9447	138223.4976 0.1215*	75492.53 0.0625*	46188.88 0.0349*	39331.1 0.0285*
재정자립도	10.3234	11.9920 0.1255*	12.6437 0.1364*	10.2569 0.0964*	7.4566 0.0495*
인구밀도	580.0461	8933.5762 0.3339*	103.8743 0.0032*	79.0816 0.0022*	64.2467 0.0017*

주) 최종 군집중심은 군집별 특성 비교·분석을 위해 인구감소지수 지표별 평균값을 정규화하여 나타내었으며, 정규화 값은 \*표기

## 2) 군집 유형별 특성의 차이

군집1(대도시형)에 포함된 지역은 총 5곳으로 부산과 대구에 속해 있으며 비교적 규모가 큰 대도시 지역이다. 인구밀도와 주간인구, 청년 순이동률은 각각 8933.5762명/km<sup>2</sup>, 138,223명, -3.03%로 4개 군집 중 가장 높고 고령화율은 22.53%로 가장 낮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역 인구의 이동 추이를 나타내는 순이동률 지표는 -1.6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 내 인구감소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부정적인 요소는 연평균인구증감률(20년, 5년)이 4개 군집 중 가장 낮다는 점으로 이는 인구감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군집2(중소도시 가능성형)로 분류된 인구감소지역은 총 27곳으로 수도권에서는 인천 용진군과 경기 연천군, 가평군을 포함한다. 인구밀도와 순이동률 지표가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표들은 모두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소년비율은 21.14%, 조출생률은 6.2414%로 4개 군집 중 가장 높았으며 고령화율은 24.29%로 전체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났다. 지역 내 청년인구의 유출 비율은 4개 군집 중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즉, 군집 2는 다른 유형의 인구감소지역과 비교했을 때 유소년과 청년의 인구 비율이 높고, 고령 인구 비율은 낮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긍정적 요소로는 재정자립도가 12.6437%로 군집 중 가장 높고, 지역의 활력을 알 수 있는 주간인구도 전체 평균보다 높다는 점이다. 최근 20년간 연평균인구 감소율이 군집 중 가장 낮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군집2는 4개 군집 중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구밀도가 전체 평균의 1/6 수준이고, 순이동률이 -0.69%로 전체 평균 대비 낮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집3(중소도시 일반형)에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33곳이 속해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군이 포함된다. 고령화율과 유소년비율, 재정자립도, 청년 순이동률 지표는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순이동률 지표는 -0.33%로 4개 군집 중 가장 높으며 이는 전입 대비 전출 인구의 비율이 다른 유형의 인구감소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최근 5년간의 연평균인구 감소율이 4개 군집 중 가장 낮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상대적 인구규모를 나타내는 인구 밀도가 전체 평균의 1/7 수준으로 매우 낮고, 주간인구 또한 전체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는 점은 부정적인 요인들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감 추이를 나타내는 조출생률 지표는 4.8636%로 전체 평균 대비 낮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유소년비율의 감소, 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야기하므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군집4(소도시 위기 극복형)는 4개 군집 중 유일하게 수도권을 포함하지 않으며 모든 지역이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등 비교적 소규모 지역에 속해 있다. 연평균인구증감률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인구감소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4개 군집 중 인구감소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령화율은 34.61%로 군집 중 가장 높으며 유소년비율은 14.79%, 조출생률은 4.24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청년순이동률은 -6.55%로 지역 내 청년 인구의 유출이 가장 빠르다. 즉, 유소년과 청년의 인구 비율은 줄고 고령인구 비율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인구감소가 4개 군

집 중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의 소비와 경제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주간인구가 4개 군집 중 가장 낮으며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재정자립도 또한 7.456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구밀도 역시 전체 평균의 1/9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이를 종합해봤을 때 군집4는 지방소멸의 위협이 비교적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군집4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3] 군집분석 결과 군집별 차이 요약

구분	내용	명칭
군집1	분석 인구밀도와 주간인구, 청년 순이동률이 가장 높고(↑), 고령화율과 순이동률, 20년·5년간 연평균인구증감률이 가장 낮은(↓) 지역	대도시형
	결과 연평균인구증감률은 가장 낮으나 주간인구와 인구밀도는 가장 높은 비교적 규모	
	특징 가 큰 대도시지역	
군집2	분석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유소년비율과 조출생률이 가장 높으며(↑), 20년	중소도시 가능성형
	결과 간 연평균인구증감률이 가장 높은(↑) 지역	
	특징 유소년비율이 가장 높고 고령화율은 낮은 지역으로 생산가능인구 수가 비교적 많은 지역	
군집3	분석 5년간 연평균인구증감률이 가장 높고(↑), 순이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	중소도시 일반형
	결과 최근 인구감소 추세가 비교적 덜한 지역이나 인구밀도나 주간인구 등은 하위에	
	특징 속하는 지역	
군집4	분석 고령화율이 가장 높고(↑), 유소년비율과 조출생률, 청년 순이동률이 가장 낮으며(↓), 인구밀도와 주간인구,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	소도시 위기극복형
	결과 고령화율이 가장 높고, 조출생률과 유소년비율은 가장 낮으며, 청년층의	
	특징 유출이 가장 큰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생산가능인구 수가 적으며 주간인구와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모두 낮은 지역	

출처: 연구진 작성

### 3) 사례로 본 인구감소지역 실태의 차이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그룹간 비교를 위해 대도시권의 인구감소지역(군집1-대도시형), 시 지자체(군집2-중소도시 가능성형) 각 1개씩, 같은 그룹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군 지자체(군집4-소도시 위기극복형) 2개를 포함하여 총 4개 지역을 추출하여 각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공간, 경제·사회·행정적 상황 및 현안을 살펴보았다. 다각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실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인구적 측면을 앞서 군집분석 시 활용한 결과 차이 이외에도 추가로 공간, 경제·사회·행정적 부분을 추가하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 ① 그룹간 차이 비교: 군집 1(대도시형) vs. 군집 2(중소도시 가능성형)

### □ 부산 영도구(군집 1-대도시형)

부산시는 전국 7대 대도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원도심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부산의 섬 지역인 영도구는 고령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것과 동시에 2022년 기준 사망자 수는 1447명, 출생아 수는 324명으로 고령화뿐만 아니라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이다.<sup>15)</sup> 영도구는 1960년~1970년 대 대표적인 조선 산업기지로 1984년 22만 1천 명으로 인구에 정점을 찍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22년에는 인구가 절반(10만8천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림 2-1] 부산시 영도구 고령인구 비율 추이

출처: 최혁규. (2022). 영도 고령층 30% 돌파…인구 출자 학교 등 감소 '악순환'. 국제신문. 11월 16일 기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1117.22003005005>  
(검색일: 2023.08.21.)

영도구는 전출인구 비율이 비교적 양호한 편인 것에 비해 전입인구 비율은 매우 낮으며, 연평균 인구증감률도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천명당 순인구 이동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이며 청년 순이동률 역시 낮아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성 측면에서는 만명당 유치원 원아 수가 매우 적어 지난 몇 년간 출생아수가 매우 적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초등학생 수, 유아인구(0~5세) 비율, 신혼부부 비율 등 젊은 층의 인구 비중이 적은 반면, 고령인구 비율은 30%에 가까워 심각한 고령화를 확인 할 수 있다. 인구 특성으로는 천명당 외국인 수가 높고, 1인 가구 비율 및 독거노인가구 비율은 평이한 수준이다. 종합했을 때 영도구는 인구의 자연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지역의 저조한 출산율

15) 뉴스핌. (2022). 소멸위기 지역을 가다 (2)부산 영도구. 4월 21일 기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21000844> (검색일: 2023.08.21.)

을 높이기 위한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영도구는 주거, 상업 및 공업지역 비율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녹지 비율은 비교적 낮다. 주거환경과 관련해서는 노후주택 비율이 매우 높아 지역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 포장률과 상·하수도 보급률 등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지표들은 양호한 편이다. 한편, 교육 인프라 중에서는 유치원 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수 역시 적은 편으로 양육 및 교육환경이 열악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 및 복지 인프라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수가 타 지역 대비 매우 적은 편이며 노인 인구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도구의 고령인구를 고려했을 때 관련 인프라의 양적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사회·행정 관련 통계를 살펴본 결과, 영도구의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심각할 정도로 낮으며 상용직 비중도 높지 않아 양적 및 질적 일자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내 통근 취업자 비율과 거주지외 타지역 통근 취업자 비율이 6:4 정도로 외부에서의 생활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도구의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는 많지 않으며 제조업 및 도소매업보다 서비스사업체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타 지역과 비교해봤을 때에는 제조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는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매우 낮으며 인터넷 이용률은 높은 편에 속한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 수는 매우 낮게 나타나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적으로 영도구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양호한 편이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은 수준이며, 특히 재정자주도가 타 지역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 강원도 태백시(군집 2-중소도시 가능성형)

강원도는 총 18개 자치체 중 12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태백시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대표적인 자치체로 2023년 8월 기준 전국 시 단위 지역 중 가장 적은 인구를 기록하고 있다.<sup>16)</sup> 과거 탄광도시로 유명했던 태백시의 인구는 1987년에는 12만 명이 넘었으나, 석탄산업의 붕괴로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2년에는 4만9756명, 지난 2022년에는 3만9980명을 기록했다.<sup>17)</sup>

16)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B%9C\\_\(%ED%96%89%EC%A0%95\\_%EA%B5%AC%EC%97%AD\)](https://ko.wikipedia.org/wiki/%EC%8B%9C_(%ED%96%89%EC%A0%95_%EA%B5%AC%EC%97%AD)) (검색일: 2023.08.21.)

17) 안의호. (2022). 3만명대로 주저앉은 태백시 인구, 소멸 위기 고착화. 강원도민일보. 8월 19일 기사.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0647> (검색일: 2023.08.21.)

태백시의 인구 관련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인구증감률을 포함해 전입인구 비율, 천명당 순인구 이동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청년 순이동률 역시 매우 낮아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인구구성으로는 만명당 유치원 원아 수가 매우 낮으며 유아인구(0~5세) 비율, 신혼부부 비율 등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반면 태백시의 고령 인구 비율은 26.4%로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겼으며, 평균연령도 높은 수준으로 비교적 젊은 층이 적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인구 특성 측면에서는 인구 천명당 외국인 수는 적으나 다문화 혼인 비중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봤을 때 태백시는 사회적 인구 유입 또는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내부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유소년 및 청년층 등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젊은 층의 정주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간적 측면에서의 태백시는 녹지지역 및 주거, 상업, 공업지역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외 도시 관련 지표들도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후주택 비율이 매우 높고, 빙집 수가 많아 지역의 노후화 및 쇠퇴가 진행되고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교육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만명당 유치원 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수 역시 인구 대비 부족한 편으로 양육 및 교육 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문화 및 복지 인프라의 경우, 문화기반시설 수나 사회복지시설 수 등은 양호한 편이지만 요양기관의 절대적인 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백시 인구 4명 중 1명이 고령자인 것을 고려했을 때, 고령층을 위한 관련 인프라 및 환경 조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과 관련된 지표에서는 범죄를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등에서 낮은 등급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백시의 경제·사회·행정 관련 통계를 살펴본 결과, 고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지표들은 타 지역 대비 양호한 수준이나 취업자 수와 전체 산업 종사자 수는 매우 낮았다. 또한, 전체 사업체 수가 비교적 적었으며 2차, 3차 산업체 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매우 낮은데 이는 지속적인 인구 유출 및 감소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인지율,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등 삶의 질 관련 지표들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낮다는 점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회 서비스 측면에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지표들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의사 수는 매우 낮아 의료시설 인프라 및 인력 부족을 예상해볼 수 있다. 행정적으로 태백시는 재정자주도가 비교적 높으며,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 예산 비중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 그룹간 차이 비교 결과

그룹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대도시형(군집1)인 부산 영도구와 중소도시 가능성형(군집2)인 강원도 태백시의 인구, 공간, 경제·사회·행정적 현황을 살펴보았다[표2-4]. 그룹 유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구적 측면에서는 두 지역이 상당 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평균 인구증감률, 전입인구 비율, 청년 순이동률 등이 매우 낮고, 유아인구나 초등학생 수 등 젊은 층의 인구 비중이 적은 반면, 고령인구 비율은 매우 높은 등 인구감소지역의 전반적인 인구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공간적 측면에서는 노후주택 비율이 매우 높고, 양육 및 교육 인프라 수준이 낮다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각기 다른 특징을 보였다. 부산 영도구는 녹지 비율이 비교적 낮고, 사회복지시설 수와 노인여가복지시설 수가 부족한 반면, 강원도 태백시는 노후주택과 함께 빈집 수도 많아 지역 쇠퇴가 예상되었으며 요양기관의 절대적 수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형인 부산 영도구와 중소도시 가능성형인 강원도 태백시의 차이는 경제·사회·행정적 측면에서 좀 더 두드러진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지표들을 제외하고는 고용, 사업체, 삶의 질 등의 지표들에서 두 지역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부산 영도구의 경우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등은 낮으나, 외부에서의 생활인구가 어느 정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다. 한편, 강원도 태백시는 대부분의 고용 관련 지표들이 양호한 수준이지만 취업자 수나 전체 산업 종사자 수는 매우 낮게 나타난다. 부산 영도구는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반면 강원도 태백시는 의료시설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의 경우, 강원도 태백시는 두 지표 모두 양호한 수준이지만 부산 영도구는 두 지표 모두 타 지역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룹간 차이 비교 결과, 각 지역이 속한 그룹은 다르더라도 상당 부분, 특히 인구적 측면에서의 현황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인구 감소지역이 마주한 인구 통계적 문제를 지니고 있었으며, 두 지역의 차이는 주로 공간 및 경제·사회·행정적 지표들에서 나타났다.

[표 2-4] 그룹간 차이 비교 결과

구분	부산 영도구(군집 1-대도시형)	강원도 태백시(군집 2-중소도시 가능성형)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평균 인구증감률, 전입인구 비율, 청명당 순인구 이동, 청년 순이동률 등이 매우 낮음</li> <li>-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li> <li>- 만명당 유치원 원아 수, 초등학생 수, 유아인구(0~5세) 비율, 신혼부부 비율 등 젊은 층의 인구 비중이 적은 반면, 고령인구 비율은 30%에 가깝게 매우 높음</li> <li>- 1인 가구 비율 및 독거노인가구 비율은 평이한 수준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연령이 높은 수준임</li> <li>- 인구 청명당 외국인 수는 적으나 다문화 혼인 비중은 매우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주택 비율이 매우 높음</li> <li>- 만명당 유치원 수, 초등학교 수가 부족한 편으로 양육 및 교육 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수준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 상업 및 공업지역 비율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농지 비율은 비교적 낮음</li> <li>- 사회복지시설 수가 타 지역 대비 매우 적은 편이며 노인 인구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도 부족</li> <li>-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임</li> </ul>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지지역 및 주거, 상업, 공업지역 비율 등이 매우 높은 수준</li> <li>- 노후주택과 함께 빈집 수도 많아 지역의 노후화 및 쇠퇴 예상</li> <li>- 요양기관의 절대적인 수는 매우 적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지지역 및 주거, 상업, 공업지역 비율 등이 매우 높은 수준</li> <li>- 노후주택과 함께 빈집 수도 많아 지역의 노후화 및 쇠퇴 예상</li> <li>- 요양기관의 절대적인 수는 매우 적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매우 낮고, 상용직 비중도 높지 않으며 외부에서의 생활인구가 어느 정도 있음(거주지외 타지역 통근 취업자 비율)</li> <li>- 인구 청명당 사업체 수는 많지 않으며 제조업 및 도소매업보다 서비스사업체 비율이 높음</li> <li>-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는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이 매우 낮으며 인터넷 이용률은 높은 편임</li> <li>- 인구 청명당 사설학원 수가 매우 낮게 나타나 교육을 위한 인프라 부족 예상</li> <li>-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양호한 편이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은 수준, 특히 재정자주도가 타 지역 대비 현저히 낮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의 고용 관련 지표들은 타 지역 대비 양호한 수준이나, 취업자 수와 전체 산업 종사자 수는 매우 낮음</li> <li>- 전체 사업체 수가 비교적 적으며 2차, 3차 산업체 수가 많지 않고, 특히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매우 낮음</li> <li>- 스트레스 인지율,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등 삶의 질 관련 지표들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낮음</li> <li>- 청명당 의료기관 종사의사 수가 매우 낮아 의료시설 인프라 및 인력 부족 예상</li> <li>- 재정자주도가 비교적 높으며,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 예산 비중도 양호한 수준</li> </ul>
경제·사회·행정	<p>출처: 연구진 작성</p>	

## ② 동일 그룹간 차이 비교: 군집4(소도시 위기극복형)

### □ 경남 합천군(군집 4-소도시 위기극복형)

2018년부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경남지역은 2022년에는 1만3400명이 자연 감소하면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sup>18)</sup> 경남지역의 총 18개 시·군 중 11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합천군은 지방소멸 위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한때 경남의 군 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았던 합천군은 2021년에는 4만3465명으로 인구 정점(1966년, 18만 9454명) 대비 인구가 77%나 감소했다.<sup>19)</sup>

인구 부문에서 합천군은 전출인구 비율을 제외한 모든 인구변화 지표에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연평균 인구증감률을 비롯해 전입인구 비율과 청년 순이동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는 낮지만 내부로 유입되는 인구 또한 매우 낮고, 청년 순이동률 역시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인 것이다. 또한, 인구구성 측면에서도 유아 인구(0~5세) 비율 및 신혼인구 비율, 만명당 유치원 원아 수 및 초등학생 수 등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고령인구 비율은 40%대로 현저히 높으며, 평균연령 또한 60세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인구 특성으로는 다문화 혼인 비중이 매우 높고, 천명당 외국인 수는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독거노인가구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1인 가구 비율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종합했을 때 합천군은 전반적인 인구감소 관련 지표가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내부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는 합천군의 고령화 비율을 고려하여 정주 연령층을 고려한 인구감소 대응 노력이 필요하겠다.

한편, 공간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합천군은 녹지지역과 주거, 상업 및 공업지역 비율은 양호한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주거환경과 도시 및 교육 인프라 관련 지표들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주택 비율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고, 빙집 비율도 높은 것으로 보아 지역 쇠퇴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도로 포장률과 상·하수도 보급률 등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지표 또한 매우 낮아 전반적인 생활환경이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처럼 낮은 수준의 지표들은 지역의 인구 유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18) 합천일보. (2023). "인구소멸 면 미래 아냐? 경남 5년 후 공장 땀출 수도"[지방소멸은 없다]. 3월 12일 기사. <https://www.hap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015> (검색일: 2023.08.21.)

19) 김태섭. (2021). 장날도 적막한 합천... 20만 인구 4만 남아. 경남도민일보 8월 4일 기사.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902> (검색일: 2023.08.21.)

보인다. 대학교학생 수, 만명당 유치원 수 및 초등학교 수 등 보육 및 교육을 위한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열악한 양육환경 또한 인구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 및 복지 인프라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기관 관련 지표들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문화기반시설 수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화재나 생활안전, 감염병 등의 안전 등급이 낮게 나타났으며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해당 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행정 관련 통계를 살펴본 결과, 합천군의 고용률과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청년 고용률이 낮으며 절대적인 취업자 수도 적은 편이다. 또한 거주지 내 통근 취업자 비율이 98%대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통근,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 및 체류하는 생활인구는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천군은 사업체 수와 고용규모, 종사자 수 등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그나마 제조업 사업체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제조업을 제외한 도소매업 및 서비스 산업이 쇠퇴했을 가능성성이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도 절대적인 종사자 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업의 쇠퇴는 지역의 인구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스트레스 인지율, 인터넷 이용률은 양호한 수준이나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과 자살률은 부정적인 편에 속한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미충족 의료율이 높으며, 천 명당 사설학원 수는 1개 이하로 매우 낮아 의료 및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적으로 합천군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편으로 지자체의 재원 활용력은 양호할 것으로 보이나, 사회복지 예산 비중과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전남 곡성군 (유형 4-소도시 위기극복형)

전남의 인구는 1986년 284만 명에 육박했으나 20년 만에 200만 명이 붕괴, 2022년에는 181만여 명으로 감소하는 등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sup>20)</sup> 총 22개 시·군 중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곡성군은 출생아수가 2022년 기준 전남에서 유일하게 0명으로 인구절벽이 매우 심각한 지역이다.<sup>21)</sup>

20) 뉴스핌. (2023). 소멸위기 지역을 가다(6)전라남도. 5월 1일 기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501000001> (검색일: 2023.08.21.)

21) 유대용. (2023). 곡성 신생아 '0명'…전남 동부권 출생아 1천명↓ 인구절벽. 전남CBS. 3월 7일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905877> (검색일: 2023.08.21.)

인구 관련 통계에 따르면, 곡성군은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청년 순이동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특히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우려되며, 전출인구는 양호하지만 전입인구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성 측면에서는 신혼부부 비율이 타 지역 대비 상당히 낮으며 유아인구(0~5세) 비율과 합계출산율, 유치원 원아 수 및 초등학생 수가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젊은 층의 인구 비중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령인구 비율은 40%에 육박하며 타 지역에 비해서도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곡성군의 평균연령 역시 타 지역 대비 높은 편이다. 인구 특성으로는 1인 가구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독거노인가구 비율도 높은 것으로 보아 혼자 사는 고령층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종합했을 때 곡성군은 영유아부터 청소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매우 낮고, 고령인구 비율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인구의 자연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간적 측면에서의 곡성군은 도시지역 면적 및 인구 비율이 타 지역 대비 매우 낮은 편이며, 1인당 주거, 상업 및 공업지역 면적과 녹지지역 면적은 양호한 편이다. 한편, 전체 주택 중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비율은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빈집비율 역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지역의 노후화와 함께 빈집 문제가 우려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지표들 중에서는 도로포장률이 타 지역 대비 낮은 수치를 보여 이동성과 관련된 생활환경이 열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 인프라 중에서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 및 교육을 위한 여건이 잘 갖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문화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요양기관 수도 타 지역 대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인프라의 양적, 질적 부족은 정주여건을 악화시켜 인구감소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수요를 고려한 관련 인프라의 조성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사회·행정 관련 통계에 따르면 곡성군의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상용직 비중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청년고용률이 30% 이하로 낮은 편이며 이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주지내 통근 취업자 비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보아 통근을 목적으로 한 생활인구 유입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곡성군의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절대적인 사업체 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와 고용규모는 양호한 편이다. 내부적으로는 제조업 및 도소매업보다 서비스사업체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에는 제조업 사업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는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인터넷 이용률의 경우 타 지역 대비 낮은 편에 속했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미충족 의료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수요에 맞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설학원 수도 매우 부족해 교육을 위한 인프라 여건이 잘 갖춰지지 않았음을 예상 할 수 있다. 행정적으로 곡성군은 비교적 높은 재정자주도에 비해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낮아 재정 여건이 열악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복지예산 비중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다.

#### □ 동일 그룹간 차이 비교 결과

동일 그룹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소도시 위기극복형(군집4)의 인구감소지역 두 곳을 비교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인구적 측면에서는 1~2개의 지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두 지역이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공간 및 경제·사회·행정적 지표 들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간적 측면으로 볼 때, 경남 합천군은 상·하수도 보급률 등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지표 수준이 전남 곡성군보다 낮은 편이며 보육 및 교육을 위한 인프라도 상대적으로 더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복지 인프라의 경우 경남 합천군은 요양기관 관련 지표 들은 대체로 양호하나 문화기반시설 수가 부족했으며, 전남 곡성군은 문화기반시설 및 요양기관 모두 타 지역 대비 충분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사회·행정적 측면에서는 두 지역 모두 거주지 내 통근 취업자 비율이 매우 높았으 며 미충족 의료율이 높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도에는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나 두 지역 모두 재정자주도가 높고,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 예산 비중 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은 주로 사업체 수, 고용규모 등 고용 관련 지표와 삶의 질 관련 지표에서 차이를 보였다.

비교 결과, 동일한 그룹 내에서도 인구, 공간, 경제·사회·행정적 측면에서의 지역 현황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지역마다 우선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현안과 강점 또는 잠재적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도 서로 달랐다. 또한, 인구감소에 대해 문제로 작용하는 요 인들과 해소할 수 있는 요소들은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때문에 지역의 인구 감소 관련 지표들을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인구 및 공간, 경제·사회·행정적 특 성을 서로 매칭하여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표 2-5] 동일 그룹간 차이 비교 결과

구분	경남 합천군(군집 4-소도시 위기극복형)	전남 곡성군(유형 4-소도시 위기극복형)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평균 인구증감률, 전입인구 비율, 청년 순이동률 등이 매우 낮은 수준임</li> <li>- 유아 인구(0~5세) 비율 및 신혼인구 비율, 만명당 유치원 원아 수 및 초등학생 수 등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전체 인구 중 젊은 층의 비중이 저조)</li> <li>- 고령인구 비율이 40%대로 현저히 높으며, 평균연령도 매우 높음</li> <li>- 1인 가구 비율 및 독거노인가구 비율이 매우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 비율이 매우 높음</li> </ul>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주거, 상업 및 공업지역 면적, 녹지지역 면적은 양호한 수준임</li> <li>- 노후주택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빈집 비율로 높아 지역 쇠퇴와 노후화 예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포장률과 상·하수도 보급률 등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지표가 매우 낮음</li> <li>- 보육 및 교육을 위한 인프라(대학교학생 수, 유치원 수, 초등학교 수 등)가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함</li> <li>-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기관 관련 지표들은 대체로 양호하나, 문화기반시설 수는 부족</li> <li>- 화재나 생활안전, 감염병 등의 안전 등급이 낮게 나타남</li> </ul>
경제·사회·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등은 양호한 수준이나, 청년고용률은 낮음</li> <li>- 거주지 내 통근 취업자 비율이 90% 이상으로, 통근을 목적으로 한 생활인구 유입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li> <li>-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미충족 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음</li> <li>- 천 명당 사설학원 수가 매우 낮아 교육 인프라의 부족 예상</li> <li>- 재정자주도가 높은 편으로 지자체의 재원 활용력은 양호할 것으로 보이나, 사회복지 예산비중과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지역 면적 및 인구 비율이 타 지역 대비 매우 낮은 편임</li> <li>- 도로 포장률이 타 지역 대비 낮은 편임</li> <li>- 유치원 및 초등학교 수가 매우 부족함</li> <li>- 문화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하며 요양기관 수도 타 지역 대비 충분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체 수와 고용규모, 종사자 수 등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그 중 제조업 사업체 비율이 높은 편임</li> <li>- 스트레스 인지율, 인터넷 이용률은 양호한 수준이나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과 자살률은 부정적인 편에 속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대적인 사업체 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와 고용규모는 양호</li> <li>- 내부적으로는 서비스사업체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에는 제조업 사업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li> <li>-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인터넷 이용률은 타 지역 대비 낮은 편에 속함</li> </ul>

출처: 연구진 작성

## 2. 유형별 대응의 차이

### 1) 투자계획 분석에 따른 군집별 대응의 차이

4개의 군집별 2022년 및 2023년 투자계획을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사업명과 사업내용에 대해 각각 키워드를 비교하였다. 사업명 키워드 분석 결과, 군집1의 주요 키워드는 ‘일자리’, ‘활성화’였으며 관련하여 ‘워케이션’, ‘플랫폼’ 등의 키워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군집2의 주요 키워드는 ‘생활인구’, ‘정주여건’, ‘일자리’였으며 연관 키워드로 ‘관광객·방문객’, ‘외국인’, ‘인프라’ 키워드가 있었다. 군집3의 경우 ‘인프라’, ‘생활인구’, ‘정주여건’이 주요 키워드였으며 ‘서비스’, ‘스마트팜’, ‘귀농귀촌’ 등의 키워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군집4의 주요 키워드는 ‘일자리’, ‘근로자’, ‘생활인구’로 나타났으며 ‘지역경제’, ‘귀농귀촌’, ‘스마트팜’ 등의 빈도도 높았다.



[그림 2-2] 군집별 사업명 키워드 빈도 워드클라우드

출처: 연구진 작성

군집분석을 통해 4개 군집으로 분류한 지역에 따라 유사 특성을 지닌 다수 사업수를 분석하였다. 군집1의 경우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관련 사업이 48.4%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군집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와 ‘지역 특화 사업’이 12.9%를 차지하고 있다. 군집2의 경우에는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관련 사업이 29.2%를 차지하고, 특히 ‘지역 특화 사업’이 24.2%로 다른 군집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가 21.7%, ‘경제활동 기반 마련’이 18.3%를 차지하고 있다. 군집3의 경우

에는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이 32.3%로 높았으며,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21.3%), '지역 특화 사업'(21.3%), '경제활동 기반 마련'(18.3%), '특화주거 공급 및 환경'(18.3%)에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4의 경우에는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이 28.7%, 다른 군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경제활동 기반 마련'(25.3%), '특화주거 공급 및 환경'(23.3%),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22.0%)가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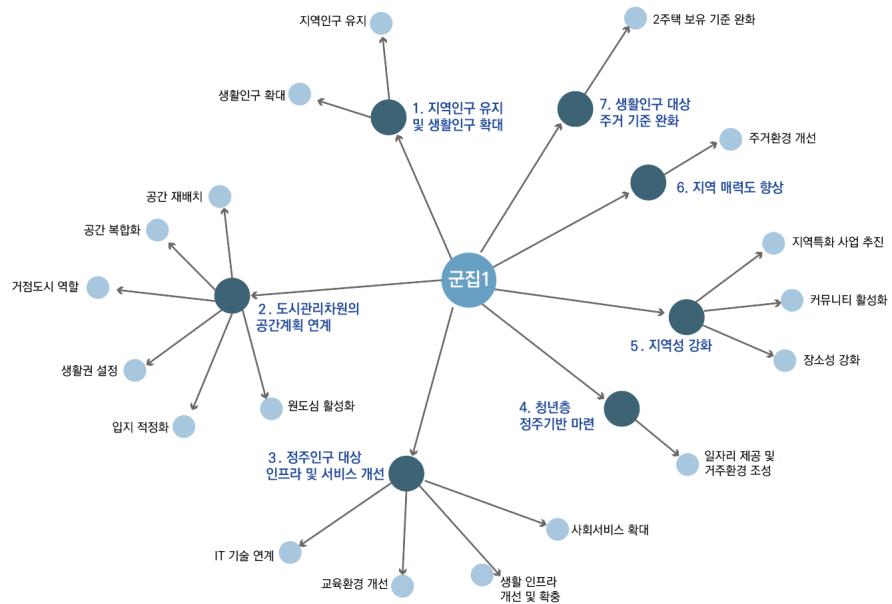
## 2)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대응방향 차이

### ① 군집 1(대도시형) 대응방향

군집1은 다른 유형에 비해 인구감소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이지만 주변 신도시 개발, 일자리 감소, 생활환경의 악화에 따른 도심 공동화와 인구유출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현재 인구감소의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확보하여 지역 인구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1. 지역인구 유지 및 생활인구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 내 거주민의 정주기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며, 주·야간 활동인구 증가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2. 도시관리차원의 공간계획 연계'이다. 대도시 특성상 인구 유출로 인한 쇠퇴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 공간 재배치 및 복합화, 입지 적정화를 통한 공간 효율성을 강화하고, 주변 지역(소도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생활권 설정 및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지역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3. 정주인구 대상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노후화된 생활 인프라를 개선 및 확충하고, 여가, 사회, 교육 환경 및 서비스를 확대하여 양질의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청년인구 유지를 위한 '4. 청년층 정주기반 마련'도 중요하다. 지역 청년인재들의 정주를 위해 주거, 일자리 등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5. 지역성 강화'가 있다. 무분별한 사업 추진이 아닌 지역의 장소성과 지역사회를 고려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동네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6. 지역 매력도 향상'도 중요하다. 여러 방식으로 지역 매력도를 향상 시킬 수 있지만, 물리적 환경을 우선으로 추진하여야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주택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7. 생활인구 대상 주거기준 완화'이다. 현재는 2주택 보유 기준으로 인해 생활인구의 지역 정

착 및 활동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생활인구 및 미래 정주 인구 증가를 위하여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주택 보유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그림 2-3] 군집1 유형의 사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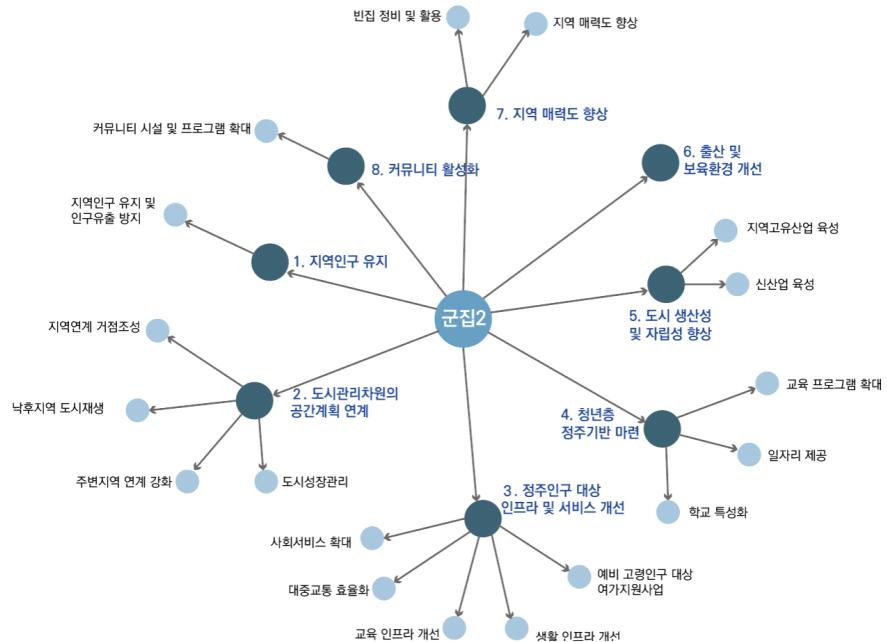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 ② 군집 2(중소도시 가능성형) 대응방향

군집2 유형은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위기 극복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이 유형은 지역 특화형 신산업 발굴 등을 통해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생활 및 여가 서비스를 확충하여 지역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출산 및 보육 서비스 강화를 통한 지역인구 유지가 중요하다. 또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인접 지역과 연계하여 거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 지역인구 유지'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유소년 비율과 조출생률을 고려하여 지역인구 유출을 막고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2. 도시관리차원의 공간계획 연계'이다. 쇠퇴지역의 도시재생, 인접한 인구감소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거점 조성, 지역 내 중심지 재구조화 등을 통한 공간관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3. 정주인구 대상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이다. 현재 거주민과 생활인구를 중심으로 생활 및 교육 인프라 개선, 대중교통의 효율화, 사회서비스 확대, 예비 고령인구 대상 지원 사업들을 통한 인프라 및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

하다. 또한, 지역 학생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4. 청년층 정주기반 마련’도 중요하다. 청년 대상의 직업교육 및 일자리를 연계·제공하여 정주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주인구 유지와 청년층 정책을 위해서는 ‘5. 도시 생산성 및 자립성 향상’이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높은 생간가능인구비율을 반영하여 지역 고유(특화)형 산업 발굴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6. 출산 및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유지 및 증가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지역 매력도 향상’은 특히 새롭게 정착한 청년층의 거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8. 커뮤니티 활성화’이다. 동네단위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 강화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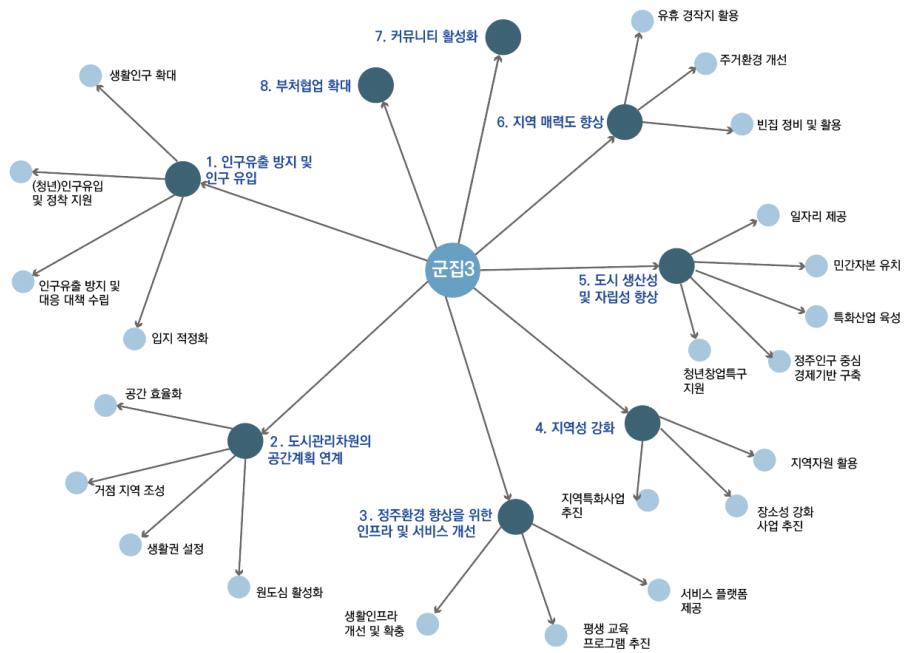
[그림 2-4] 군집2 유형의 사업방향

출처: 연구진 작성

### ③ 군집 3(중소도시 일반형) 대응방향

군집3 지역은 인구소멸이 진행되는 곳으로 인접 도시와의 연계 및 인프라 중심의 공간 재구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유출 최소화 및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정착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특화 사업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첫 번째로 ‘1.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을 기본 방향으로 남아있는 생산인구의 유지와 생활인구 중심의 인구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이미 인구감소가 상당 수준으로 진행된 지역이므로 추가적인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2. 도시관리자원의 공간계획 연계’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내 쇠퇴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해, 낙후지역의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성화, 인접도시와의 네트워크 연계, 공간 재구조화 및 효율화가 필요하다. 다음은 ‘3. 정주 인구 대상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으로, 현재 거주인구를 대상으로 의료, 복지, 교육 등 생활 인프라의 개선과 서비스 플랫폼 제공을 통한 효율화, 지방대학 등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시행할 수 있다. ‘4. 지역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특구 사업 등 지역특화사업과 유류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성과 장소성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5. 도시 생산성 및 자립성 향상’ 또한 중요한 사업방향으로, 약화된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민간기업 등 민간자본 유치,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및 농수산 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역주민과 청년인구 정주를 위한 경제기반 구축이 중요하다. 이 유형은 지역쇠퇴로 인해 방치된 빈집, 유휴 경작지 등으로 인해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빈집 정비 및 활용, 유휴 경작지 활용,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 ‘6. 지역 매력도 향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규모 마을 중심의 ‘7.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한 곳으로, 마을 단위 지역 공동체를 통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8. 부처협업 확대’가 중요하다. 이 유형의 지역들은 재정자립도 및 행정력이 감소하고, 유사 인구감소 지역간 인접성 등을 고려 시 인접 지역 및 사업간 연계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으므로, 다부처 사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5] 군집3 유형의 사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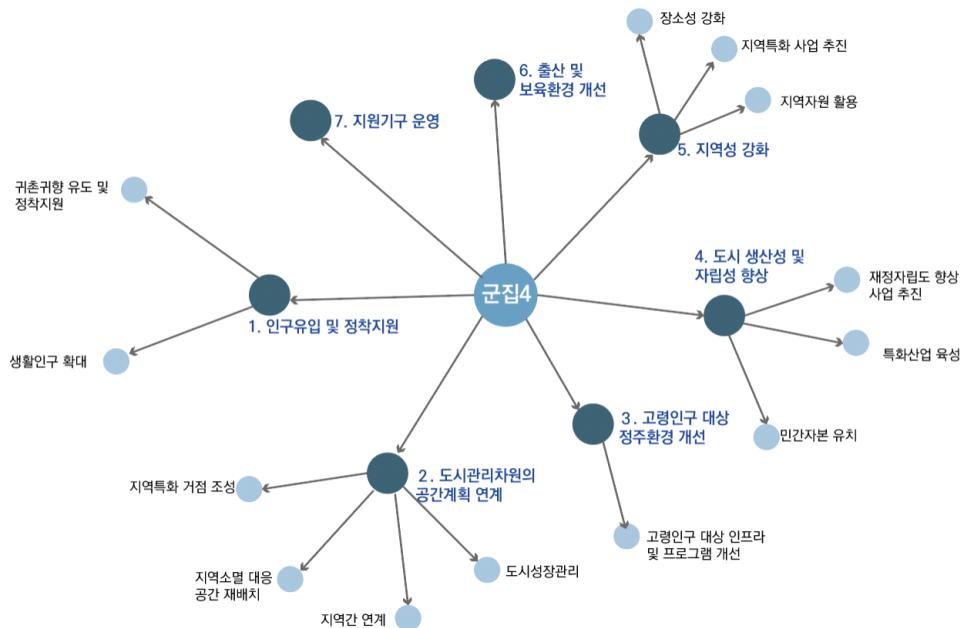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 ④ 군집 4(소도시 위기극복형) 대응방향

군집4 유형은 인구소멸 위험이 큰 지역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 유형의 사업 기본방향은 인구감소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것이며, 현재 주요 거주민인 고령인구를 중심으로 정주환경의 개선과 전원도시,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구 및 생활인구 유입이 필요하다.

세부 추진방향으로는 ‘1. 인구유입 및 정착지원’이다. 이 지역 유형은 위의 두 유형과 다르게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 및 정착 유도가 시급한 지역이며, 동시에 거주인구의 유출의 방지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를 위해 귀촌귀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하며, 이들의 정착을 위한 주거 및 경제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2. 도시관리차원의 공간계획 연계 필요’이다. 이미 인구유출과 감소가 심각한 지역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한 공간 재배치가 필요하며, 기존 원도심 중심의 특화 거점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인접 중소지역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공간 재구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 유형은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3. 고령인구 대상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이 중요하다. 고령 친화적 정주환경을 위하여 고령인구 대상의 커뮤니티시설, 사회·복지 프로그램, 공동 생활시설

등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거주민의 삶의 질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4. 도시 생산성 및 자립성 향상’은 이 지역 유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지역들은 경제기반이 약화한 경우가 많아 민간 자본 투자가 중요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5. 지역성 강화’는 이러한 소규모 지역일수록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자산 및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지역특화 사업의 추진을 통한 지역성과 장소성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조출산율과 유소년 인구 비율은 낮지만 추가적인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6. 출산 및 보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지역 특성상 지역의 행정력 약화로 인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어 ‘7. 지원 기구 운영’을 통한 사업의 추진력과 행정력 확보가 필요하다.



[그림 2-6] 군집4 유형의 사업방향

출처: 연구진 작성

### 3. 위기 현안 이슈 분석<sup>22)</sup>

#### 1) 사람 측면에서의 인구감소지역 현안

인구감소지역의 현안들과 하위요소들은 각 현안과 요소들 간 복합적으로 연결된 경우가 다수이다. 이는 각 현안과 요소들이 인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책적 등의 측면에서 서로 얹혀있어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고, 인과관계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경우 분석결과가 지나치게 한정적일 수 있어 전문가 응답에서 두 개 이상의 현안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을 중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1차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사람 측면에서의 인구감소지역 현안으로 총 6건의 현안을 도출하였고, 총 17건의 하위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현안들은 경제활동인구 감소 26건, 저출산·고령화 사회 16건, 배타적 지역사회 13건, 인구·사회적 불균형 4건, 미흡한 교육 및 양육 환경 4건, 기타 4건 순으로 언급되었다.

인구감소의 현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지역인력 유출은 크게 지역인구 유출, 청년층 이탈, 일자리 감소 및 질 저하가 각각 9건, 9건, 8건으로 유사하게 언급되었다. 이는 세 개의 요인이 모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는 청년층의 이탈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이 결과는 다시 일자리의 감소로 연결된다. 이러한 일자리 감소의 악순환 외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의 부족으로 여성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한 의견이 있었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및 문화 서비스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유출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저출산·고령화 사회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현안이 7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고령화 자체에 대한 문제 인식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증가하는 고령인구로 인해 의료 및 복지 지원의 비용 증가, 고령 독거노인의 증가,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디바이드의 한계가 주요 하위요소로 도출되었다. 저출산의 경우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감소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로 언급되었다.

배타적 지역사회는 13건으로 많이 언급되었는데, 하위요소 중 기존 원주민 중심의 카르텔 형성과 전통적 사고방식 등으로 인한 커뮤니티의 폐쇄성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

22) 인구감소지역 현안 이슈 분석을 위해 15인의 건축, 도시,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세한 연구방법은 제1장 서론 p. 1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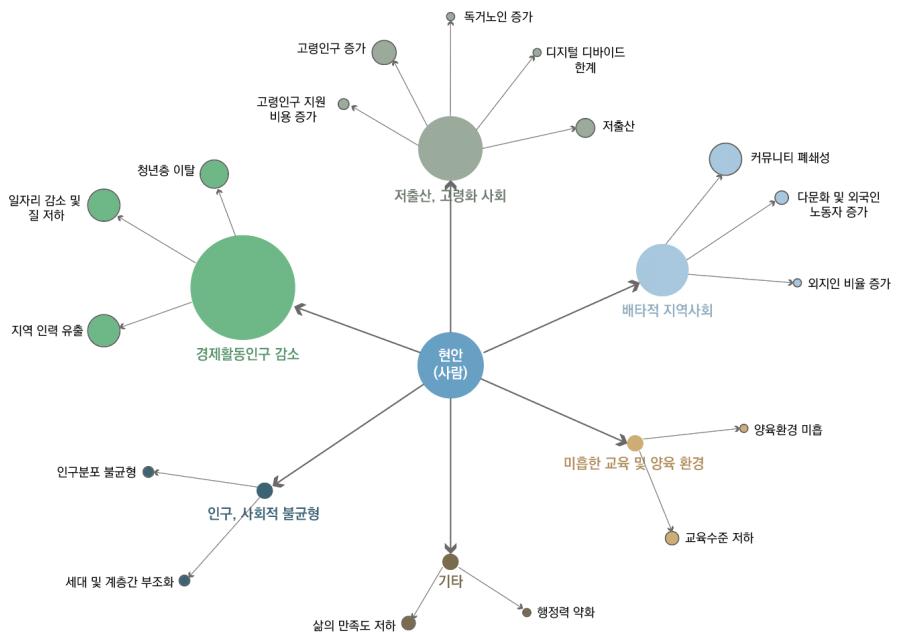
이러한 폐쇄성은 다문화 및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외지인 비율 증가로 인해 신규 유입 주민과 기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야기되면서 더욱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인구·사회적 불균형은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자 중심의 인구구조와 이로 인한 세대별 갈등과 사회적 계급 차이에 따른 갈등을 야기하는 하위요소들로 구성된다. 특히 인구분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자에 집중된 정책들은 세대 간의 차별과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한 의견도 있었다. 또한 교육수준의 저하와 양육환경의 낙후로 인해 전반적인 교육 및 양육환경의 미흡함이 4건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앞선 인구 사회적 불균형과도 연관되는데, 계층 간 차이로 인한 교육수준의 차이와 부족한 교육 및 양육 서비스 인프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의욕 상실, 삶의 질 저하, 상대적 열등감에서 오는 삶의 만족도 저하와 관련한 의견과 인구감소로 인한 행정력 약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표 2-6] 1차 전문가 의견 수렴에서 도출된 사람 측면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현안

순위	사람 측면에서의 지역현안(빈도)	주요 세부내용
1 경제활동 인구 감소 (26)	지역 인력 유출(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인재 이탈에 따른 전문 인력 및 서비스 인력 부족</li> <li>• 청년층의 외부 유출 및 출산 감소로 인해 지역 내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산업경쟁력 저하</li> <li>• 인구의 지역 내 재생산 여력 급감</li> <li>• 생산가능인구 감소</li> <li>• 청년층 대상 또는 선호하는 일자리 감소</li> </ul>
	일자리 감소 및 질 저하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의 질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li> <li>• 일용직, 단순 노무직 등이 아닌 '좋은' 일자리 부족</li> <li>• 제조업 중심의 지역 일자리로 인해 여성인구 유출 심각</li> </ul>
	청년층 이탈(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 이탈로 인해 민간투자면의시설 및 각종 서비스 시설 등이 감소하며, 이는 청년 인구 유입을 저지하는 악순환 야기</li> <li>• 교육, 문화 등을 이유로 청년층의 도시 이탈</li> <li>• 수도권 집중에 따른 양질의 문화인력 유출</li> <li>• 지역 대학의 학생 구조 변화(타지역 학생 감소, 지역 학생 감소)</li> </ul>
	고령인구 증가(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인구의 가파른 증가로 인한 초고령 사회 돌입</li> </ul>
2 고령화 사회(16)	고령인구 지원 비용 증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적 노인인구 비중 증가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li> <li>• 고령화 및 건강수명 장기화에 따른 의료지원의 요구 증가</li> </ul>
	독거노인 증가(1) 디지털 디바이드 한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인구 1인 가구화</li> <li>• 디지털디바이드(스마트 기기 사용 한계) 확대</li> <li>•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각</li> </ul>
	저출산(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에 따른 육아환경의 악화 및 경제적 어려움, 가족 관계 등의 영향으로 비혼 및 딩크족 증가</li> </ul>
3 배타적 지역사회 (13)	커뮤니티 폐쇄성(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지역사회에서의 카르텔 형성</li> <li>•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만연한 배타적 커뮤니티</li> <li>• 커뮤니티 폐쇄성으로 인한 귀농·귀촌 인구 재이탈</li> </ul>
	다문화 및 외국인 노동자 증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증가</li> <li>• 외국인 노동자 및 인바운드 관광객의 증가</li> </ul>

순위 사람 측면에서의 지역현안(빈도)		주요 세부내용
	외지인 비율 증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li> <li>외지인 비율 증가</li> </ul>
4	인구 · 사회적 불균형(4) 세대 및 계층 간 부조화(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젊은층과 노년층의 교류 부족으로 인한 세대 간 부조화</li> <li>사회적 계급에 따른 계층화</li> <li>연령별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정책적 타겟의 세대 간 차별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li> <li>연령별 인구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고령자 중심의 인구구조로 인해 지역의 지속성 담보에 한계</li> </ul>
5	미흡한 교육 및 양육 환경(4) 교육수준 저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대 간, 지역 간 수입 격차 발생 및 학습의욕 차이에 따른 교육의 질 차이 발생으로 지역 내 학습수준 저하 및 기회 한정</li> <li>육아 및 가사분담의 한계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제약</li> <li>미래희망 저하</li> </ul>
6	기타(4) 삶의 만족도 저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삶의 질 저하</li> <li>상대적 열등감 발생</li> </ul>
	행정력 약화(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감소로 인한 행정력 약화</li> </ul>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2-7] 사람 측면에서의 인구감소지역 현안

주) 원 크기는 전문가 의견수렴과정에서 언급된 빈도수를 의미함

출처: 연구진 작성

## 2) 장소 측면에서의 인구감소지역 현안

앞서 사람 측면에서의 인구감소지역의 현안과 유사하게 장소측면에서의 현안들 또한 각 현안들 간 복합적, 중복적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다. 이에 각 현안들은 답변의 주요 의도를 고려하여 구분하였으며, 많이 언급되거나 방향이 뚜렷한 경우 독립적인 하위현안으로 구분하였다. 예로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 악화의 경우 교육, 문화, 상위 인프라 및 서비스는 각각 구분하여 하위현안으로 도출하였다. 그 결과, 장소 측면에서의 인구감소 지역 현안으로 총 6건의 현안을 도출하였고, 총 22건의 하위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현안들은 물리적 환경 낙후 24건,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 악화 23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도시행정 비효율화 8건, 지역 공동화 6건, 이동성 감소 2 건, 기타 4건 순으로 언급되었다. 즉 전반적인 물리적 환경과 그로 인한 기반시설 및 서비스의 질 하락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을 볼 수 있다.

물리적 환경 낙후는 장소적 매력도 하락과 폐가 및 빈 점포, 폐교 등의 증가, 주거지역의 쇠퇴, 난개발 발생, 경관훼손, 낙후 가속화가 언급되었는데, 그 중 지역특성의 부재와 불쾌한 공간으로 인한 장소적 매력도 하락, 폐가 및 빈 점포, 폐교 등의 증가로 인한 주거환경의 질 하락과 방재·방범 등의 문제, 주거시설 및 기능의 노후화로 인한 주거지역의 쇠퇴가 가장 물리적 환경 낙후의 주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그 외 우수한 경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로 인한 지역 농촌 경관 등의 훼손에 대한 문제도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물리적 환경 낙후와 비슷하게 많이 지적된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 악화는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 축소, 생활편의 및 접근성 저하, 도시생활 서비스 질 저하, 교육 환경 악화, 상위 인프라 감소, 문화 여가 서비스 부족에 관한 세부현안이 도출되었다. 세부현안들은 공통적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와 젊은 인구의 유출,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생활 인프라가 감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며, 시설 폐쇄에 따른 접근성 저하, 대상자 감소에 따른 제공 서비스 축소 및 질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 다음으로 언급된 도시행정 비효율은 인프라 운영비용 증가, 지자체 재원 부족, 공간 활용도 저하로 구분되는 하위현안들로 구성된다. 종합하면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감소로 인한 지자체의 재원 부족과 기반시설 및 서비스의 비효율적 운영(시설위치, 서비스 대상 등)으로 인한 관리비용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지역 공동화는 구 산업의 쇠퇴, 외곽지역 및 마을의 공동화, 주변 도시로의 집중화를 통해 나타나는 현안으로 지역의 거점화, 인구 유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이동성 감소와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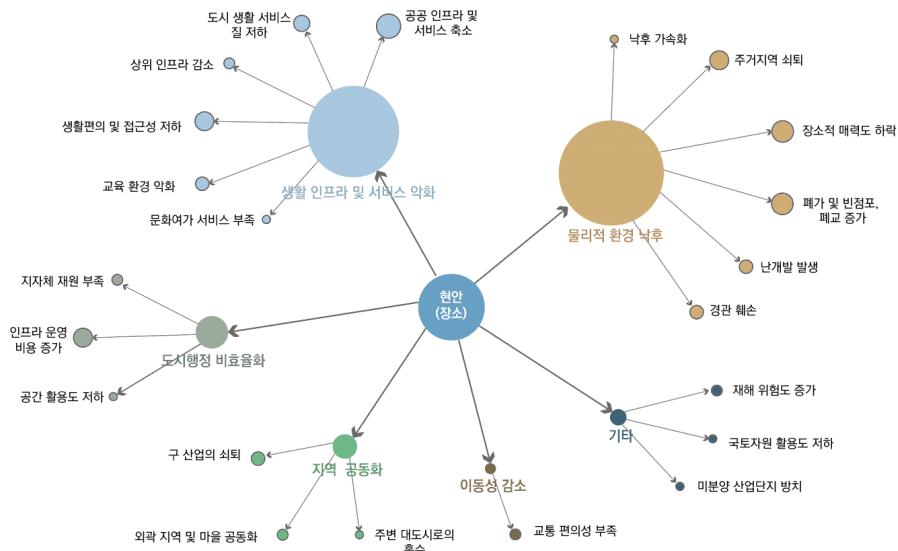
타 현안들이 언급되었는데, 이동성 감소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 교통수단의 한계 등 교통 편의성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기타 현안으로는 관리자원 및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도의 증가와 미분양 산업단지의 방치와 국토자원의 활용도의 저하가 언급되었다.

[표 2-7] 1차 전문가 의견 수렴에서 도출된 장소 측면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현안

순위	장소 측면에서의 지역현안(빈도)	주요 세부내용
	장소적 매력도 하락(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투자가 필요한 편의 및 서비스 시설 부재로 인한 장소적 매력도 하락</li> </ul>
	폐가 및 빈점포, 폐교 증가(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특성이 살아있는 공간의 감소로 인해 장소적 차원의 매력도 감소</li> <li>인구밀도는 낮지만 훈집하고 불쾌한 공간</li> <li>공실의 확산은 도시의 기능 및 경제력 저하 유발</li> <li>빈집 등의 증가로 인한 주거환경 질 저하</li> <li>빈집 증가로 인해 방재, 방범, 경관, 위생 등 여러 문제 발생</li> </ul>
1	물리적 환경 낙후(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노후화</li> <li>주거환경 및 주택성능 노후화</li> </ul>
	난개발 발생(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난개발(공장, 축사 난립)</li> <li>경관 등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난 개발됨</li> <li>원도심의 장소성을 살리지 못한 외연개발, 결국 수요부족으로 이어지고, 난개발로 이어짐</li> </ul>
	경관 훼손(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농촌경관 소실</li> <li>경관훼손 – 빈집 등 유휴공간의 방치로 경관 훼손 – 축사, 공장 등으로 인한 경관 훼손</li> </ul>
	낙후 가속화(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환경의 낙후도 가속</li> </ul>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 축소(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의료, 문화여가 인프라 등 생활 SOC 부족</li> <li>기반시설 공급 부족 또는 기(既) 공급시설의 노후화</li> <li>수요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에 한계</li> <li>고령자 고독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및 양질의 시설 및 인원 부족</li> <li>20~40대 등의 연령이 원하는 문화, 여가시설 등의 부재로 탈 지역화 증가</li> <li>공공서비스 물리적 범위 감소</li> </ul>
2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 악화(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 및 민간시설(특히 병원이나 학교 등)의 부족은 해당지역이 리비빌리티(livability)를 악화</li> <li>각종 생활편의시설의 지리적 거리에 따른 이용에 한계</li> <li>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저하</li> <li>사회서비스 제공 공간 접근성 부족</li> <li>생산인구 유출 및 고령화로 생활기반 축소에 따른 삶의 질 저하</li> </ul>
	도시생활 서비스 질 저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 서비스 및 인프라 질 저하</li> <li>의료/교육 등 공공 서비스 악화</li> </ul>
	교육 환경 악화(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고 학생 수 감소와 폐교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li> <li>교육 및 보육환경 열악</li> </ul>

순위 장소 측면에서의 지역현안(빈도)		주요 세부내용
3 도시행정 비효율화(8)	상위 인프라 감소(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위 위계 생활인프라(병원, 백화점, 영화관 등) 감소</li> <li>저밀도 인구분포에 따른 대형 의료기관 및 전문 인력 부재</li> </ul>
	문화 여가 서비스 부족(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의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지역 내 장소의 부족 및 교육기반 축소</li> </ul>
	인프라 운영비용 증가(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생활서비스 공급 및 기반시설의 운영비용 증가</li> <li>인프라 시설 노후화에 따른 관리 비용 지출 발생</li> </ul>
	지자체 재원 부족(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재원 한계에 따른 대중교통 운행지원 어려움으로 고령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이동 한계</li> </ul>
	공간 활용도 저하(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소하는 인구밀도와 공간 활용도는 도시행정의 낭비와 비효율화 초래</li> </ul>
	구 산업의 쇠퇴(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 산업(전통적 제조업)의 쇠퇴</li> </ul>
4 지역 공동화(6)	외곽 지역 및 마을 공동화(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심지로의 집중과 주변지역 및 마을의 공동화 가속</li> </ul>
	주변 대도시로의 흡수 및 공동화(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 대도시로의 흡수 및 통합으로 소도시의 파괴</li> </ul>
5 이동성 감소(2)	교통 편의성 부족(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 접근성 열악 –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아 자가용이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움</li> <li>각종 인프라 이용의 불편함 – 대중교통의 불편함, 지역교통수단 한계</li> </ul>
6 기타(4)	재해 위험도 증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자원 부족으로 재해 위험도 증가</li> <li>재난·재해·범죄 등 취약지역 다수 발생</li> </ul>
	미분양 산업단지 방치(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분양 산업단지 방치로 인한 문제발생</li> </ul>
	국토자원 활용도 저하(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자원의 활용도 저하</li> </ul>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2-8] 장소 측면에서의 인구감소지역 현안

주) 원 크기는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언급된 빈도수를 의미함  
출처: 연구진 작성

## 4. 장소 단위 공간전략<sup>23)</sup>

1차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된 장소단위 공간전략을 살펴보면 1. 거점 조성 및 재구조화, 2. 경제활동 기반 마련, 3.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 4.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5. 특화주거 공급 및 환경 개선, 6. 지역특화 사업, 7. 공간 장소성 강화, 8. 연계정책 촉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상위 2개 전략은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과 거점 조성 및 재구조화로 각각 23건, 21건이 해당한다. 그 외 전략들은 연계 정책 촉진을 제외(7건)하고 유사하게 언급되었다.

우선 1. 거점 조성 및 재구조화는 지역의 전반적인 기반시설 및 기능, 생활권, 도시계획 등의 재구조화에 대한 전략이다. 주요 전략으로는 입지적정화, 지역 거점 조성, 생활권 설정, 공간 재배치 등이 있으며, 이 전략들은 컴팩트시티 전략을 적용하여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개발을 집단화하고 압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도시 기능, 교통, 산업을 집중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생활권을 설정하며, 공간 특성에 따른 공간 유지·재배치를 위한 전략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전략들은 인구감소지역 중 경쟁력이 높은 지역과 공간을 중심으로 인구, 기능, 시설 등을 집중하여 지역을 개발 및 유지하는 전략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2. 경제활동 기반 마련 전략은 일자리 및 창업공간 제공, 특화 산업 육성, 농공단지 특성화, 특구 조성 등의 하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일자리 및 창업공간이 전략으로 많이 언급되었는데, 지역 교육기관, 관광, 레저 등, 지역 특성과 연계한 일자리의 전략적 개발을 주요 전략으로 보았으며, 외국인 일자리 및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지역특화 산업과 농공단지 특성화 등 지역 특성 기반의 산업 기반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다. 그 외 농가주택, 농업 시설 등 비도시지역의 개발을 허용하는 특구조성도 언급되었다.

3.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 전략은 생활인구 확대, 커뮤니티 프로그램, 정착 기반 마련, 귀촌귀향 유도로 구성된다. 생활인구 확대는 지역과 관계되는 인구를 확대하자는 의미로 주거와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자연과 자원을 활용한 관광 및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타 지역 인구의 방문을 유도하고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신규 거주민들 간 교류, 고령인구를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출산환경 조성하는 것이 또 다른 하위 전략이다. 그 외 청년층

---

23) 장소단위 공간전략 도출을 위해 15인의 건축, 도시,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세한 연구방법은 제1장 서론 p. 13. 참고

의 정착과 귀촌·귀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 및 지원제도를 구축하는 정착기반 마련과 관련한 전략이 있다.

4.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서비스는 의료복지시설의 확대, 수요 응답 및 이동형 서비스, 작은 문화공간의 제공, 교육서비스의 확대 등 서비스의 질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다. 다음으로 생활인프라 조성 및 효율화는 생활 인프라의 복합화, 집적화, 공용화를 통한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교통 및 의료 서비스 플랫폼의 제공과 인접 도시로의 접근성 확대 등이 전략으로 언급되었다.

5. 특화주거 공급 및 환경 개선은 주거환경 및 경관 개선, 인구유입 특화주택 제공, 2주택 조건 완화에 대한 전략이다. 이 중 주거환경 및 경관 개선이 가장 많이 언급된 전략이며,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주거비용의 감축, 유휴주택의 펜션 활용 사업, 빙집, 축사 등 농촌경관저해요소 관리, 주거지의 재난·재해 취약성 개선, 주택성능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으로 외국인 일자리 연계 주택, 청년 및 실버주택 제공에 대한 특화주택, 오도이촌 확산을 위한 1가구 2주택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전략들이 있다.

6. 지역특화 사업은 장소특화 공간전략 제시, 관광특화, 학교특성화, 지역자산 활용 전략으로 구성된다.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장소단위 개념과 공간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유형의 사업방식을 고려하는 장소특화 공간전략 제시에 대해 의견을 주었으며, 지역성과 지역자산을 활용한 관광특화 전략과 지역 학교의 특성화 전략을 언급하였다.

7. 공간 장소성 강화는 빙집 정비 및 활용, 공간 계획 강화, 원도심 활성화, 유휴자산 활용의 하위 전략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의 유휴공간자원 활용과 토지 및 공간계획을 통해 주거·경제·복지·문화기능 등의 효율화를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빙 공간을 활용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간조직 사무실 및 대학 기숙사를 지원하고, 신규 주택공급을 위한 빙집 은행에 관한 전략이 있다. 또한 대규모 대지활용이 가능한 산업 유치를 위한 공간계획 강화, 원도시 중심의 지역특구 조성, 유휴자산을 활용한 복지시설 및 문화교육 공간 제공 등의 전략이 해당한다.

마지막 전략인 8. 연계정책 촉진은 부처협업 확대, 고향기부금 연계, 모니터링 강화, 지원기구 운영이 세부전략으로 도출되었다. 우선 부처협업과 관련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역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연계를 통한 예산 활용성 강화, 투자와 지속성 결정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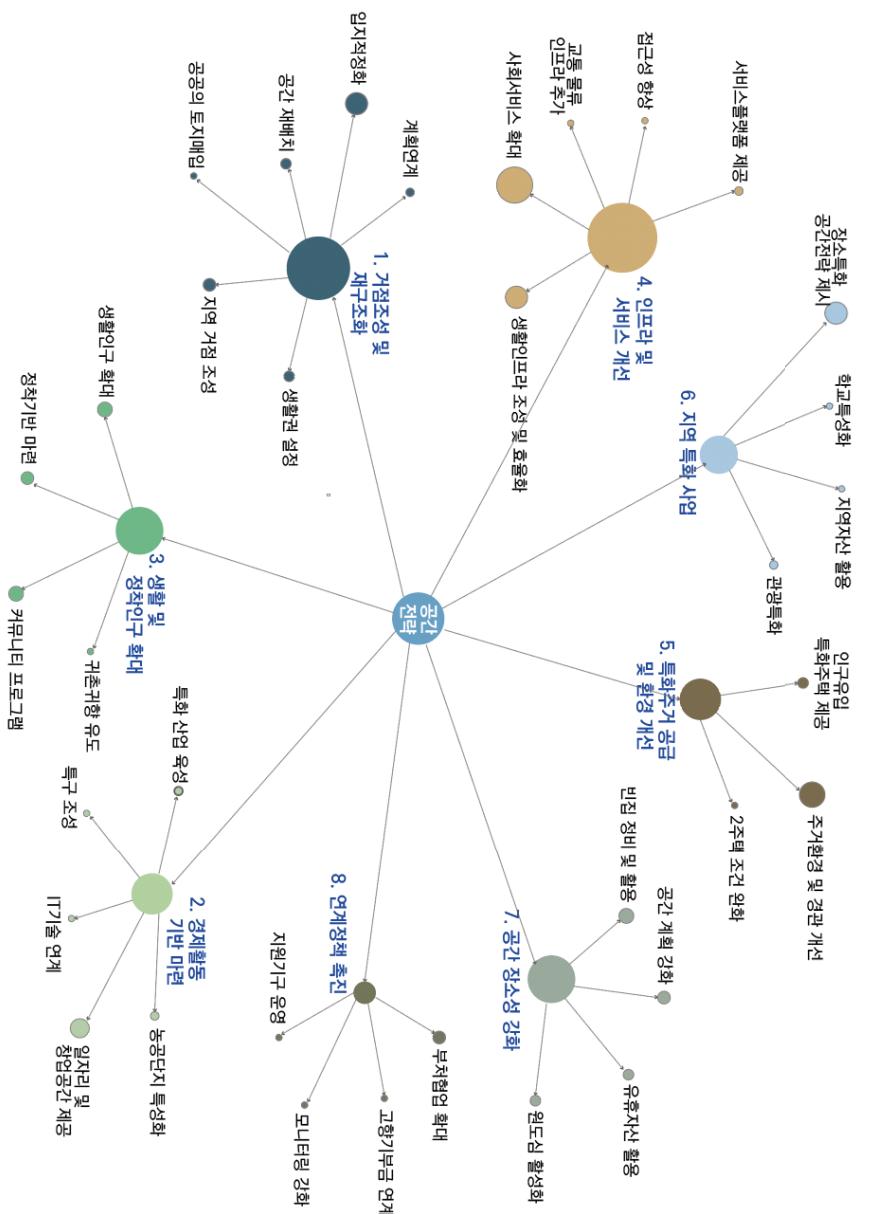
[표 2-8] 1차 전문가 의견 수렴에서 도출된 장소단위 공간전략

장소단위 공간전략(번호)	주요 세부내용
입지적정화(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 기반시설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정책에 행정과 예산을 집중하여 중심지 육성을 선행하고 이를 통한 파급효과를 도모</li> <li>장기적으로 컴팩트시티(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등) 전략 및 개발 집단화 유도, 소규모 거주를 위한 지나친 인프라 확충은 적절하지 못함</li> <li>압축도시 전략(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개발허가제 등)을 통해 교통 결절점 중심으로 주거, 상업, 문화, 행정 기능 등을 집적</li> </ul>
지역 거점 조성(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인구밀집 거점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및 철도, 고속도로를 조성하여 공간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li> <li>기업과 산업 유치하기 위한 혁신 거점 조성</li> <li>콤팩트화 및 거점 형성, 복합시설 조성</li> </ul>
재구조화(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권 설정</li> <li>현 공간의 기존 정주인구의 자연 소멸을 유도하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도시·군기본계획을 의무화를 통해 생활권 계획과 거점계획 마련 필요</li> </ul>
생활권 설정(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상 유지, 현 공간 및 장소 리뉴얼, 공간 및 장소 재배치 등으로 구분, 각 유형별 비용과 편의 분석 필요</li> <li>필요한 생활 기능의 정의와 공간적 집적이 필요한 기능과 불필요한 기능 구분</li> </ul>
공간 재배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정 계획과 연계한 실행력 강화(권장과 의무의 차이)</li> <li>혐오시설의 계획적 입지를 통한 환경파괴 최소화</li> </ul>
계획연계(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토지 국유화 필요</li> </ul>
공공의 토지매입(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기관(예, 특수 분야 고등교육)과 연계한 창·취업 공간 및 지역인재 활용</li> <li>민간투자(관광, 레저 등) 사업에서 창·취업 공간 및 역량강화 기회 제공</li> <li>지역특성을 고려한 일자리의 전략적 개발</li> <li>외국인 일자리 확보</li> <li>경력단절의 여성들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 확보 및 연구 개발을 위한 관내 유 휴시설의 제공 및 수도권과의 활용 교육 콘텐츠 연계</li> </ul>
일자리 및 창업공간 제공(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화 산업 육성(2)</li> <li>산업(기업) 유치 기반 조성</li> </ul>
경제활동 기반 마련(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공단지 특성화(2)</li> <li>특구 조성(1)</li> <li>IT 기술 연계(1)</li> </ul>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인구 확대(5)</li> </ul>

장소단위 공간전략(빈도)	주요 세부내용
커뮤니티 프로그램(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년층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의 질적 확대 및 지원 공간 공급</li> <li>젊은층과 노년층 간 교류를 위한 공간 마련</li> <li>마을가꾸기 사업 :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관리하고, 이주민과 기존 주민 간 화합을 위한 공동체 사업 및 프로그램 실시</li> <li>저출산 대책을 위한 출산 환경 만들기(산부인과, 육아시설, 공동체 육아프로그램 등)</li> </ul>
정책 기반 마련(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대학을 위한 실습, 연구, 창작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정착 유도</li> <li>귀농·귀촌 인구 등 정착을 위한 주거시설 및 생활서비스 제공</li> <li>다문화·외국인 노동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및 사회프로그램 제공</li> <li>U턴, P턴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 구축(일자리 교육, 창업, 거주 등)</li> </ul>
귀촌귀향 유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읍내 인접 지역에 귀촌귀향 타운을 마련해서 베이비부머의 유입촉진</li> </ul>
사회서비스 확대(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밀도 지역은 고령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계획</li> <li>의료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확대, 중증환자를 위한 대형 의료 및 요양시설 확충</li> <li>교육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온라인 서비스 및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등)</li> <li>인구감소지역의 생활 서비스를 대도시 및 거점지역과 연계 운영하며, 감소 지역은 수요응답·이동형 도시 및 공공서비스 제공</li> <li>퀄리티 높은 요양 복지시설의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 위탁 및 사업성 확보가 가능 하도록 제도적 지원</li> <li>작은 문화공간(도서관, 극장, 수영장 등)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li> <li>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양육 서비스를 지원하여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li> </ul>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23)	<p>생활인프라 조성 및 효율화(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 의료, 상업, 교육, 여가 등 생활 인프라 조성 및 확충</li> <li>공공 인프라의 축소 및 복합화, 인접 지역과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리 및 운영 효율화</li> <li>교통 인프라와 연계한 대규모 주차장을 확보하여 지역 내 양질의 상업구역 구축 및 지자체 재원확보</li> <li>인구과소지역 내 노후 인프라의 점진적 소멸 유도</li> </ul>
서비스 플랫폼 제공(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 및 보육 등 원스톱 플랫폼 (지역 원도심, 지역전통시장 등과 연계) 조성</li> <li>대중교통 플랫폼 및 문화타운 조성</li> </ul>
접근성 향상(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접 中·大 도시로의 접근성 향상</li> </ul>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li> </ul>
특화주거 공급 및 환경 개선(13)	<p>주거환경 및 경관 개선(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재생에너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비용 감축</li> <li>주거개선사업 지원을 통한 편선 활용</li> <li>경관 저해 요소 관리 : 빙집, 축사, 비닐하우스 등 농촌지역의 경관 저해요소 들에 대한 관리 필요</li> <li>주거지 등 재난·재해 취약성 개선</li> <li>노후·불량 주택성능 개선, 복지 주택(지분형, 연금형 등) 공급</li> <li>지역 정주성 강화를 위한 생활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li> </ul> <p>인구유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일자리와 연계한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li> </ul>

장소단위 공간전략(번호)	주요 세부내용
특화주택 제공(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실버주택타운(장기 임대형 주택, 5층 내외, 경관고려)조성</li> </ul>
2주택 조건 완화(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도이촌 확산을 위한 1가구 2주택 허용</li> </ul>
지역 특화 사업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감소지역 대상 장소 단위의 개념과 범위 제시</li> <li>최상위 도시·군기본계획과 장소단위 공간전략 간의 위상 재정립을 통해 계획체계 내에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 방안 마련</li> <li>지역특성과 장소성을 고려하여 장소단위 공간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업방식 추진</li> <li>골목길, 한옥마을, 유채꽃 단지 등 지역성을 살린 여가 및 관광지 조성</li> <li>지역성을 살리는 공간에 대한 지원 확대(예. 대전 성심당, 대구 근대거리 등)</li> </ul>
학교특성화(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의 특성화(예. 거창고)</li> </ul>
지역자산 활용(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농촌)자산의 전략적 보전과 활용 전략 마련</li> </ul>
빈집 정비 및 활용(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교 및 빈집을 활용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빈 점포 및 공기를 매입하여 민간단체에 무상 임대하여 경제적 활동 기반 마련</li> <li>공가 활용 대학 기숙사 운영을 지원하고 입주 학생의 주소 이전을 통해 정주 인구 확보</li> <li>신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지역 단위 빈집은행 운영</li> </ul>
공간 장소성 강화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지역지구의 변경을 통해 대규모 대지 이용 산업(드론 교육장, 조경문화 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개편</li> <li>해당 장소 및 공간 특성에 기반한 경제적, 사회적, 인구적 재생산이 가능한 공간과 장소 창출 방안 마련</li> <li>공원,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 조성, 시설과 공간의 통합 개발</li> </ul>
원도심 활성화(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감소지역의 외곽 택지개발 제한 및 (가칭)원도심 훼손부담금 도입</li> <li>역세권 및 원도심 내 청년(실버)의 지역정착특구 및 창업특구 조성</li> </ul>
유류자산 활용(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내 유류자산을 사회 소수자(장애인, LGBT,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 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제휴</li> <li>지역 내 유류자산을 활용하여 수도권의 운영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교육 지역 활동의 장 제공</li> </ul>
연계 정책 촉진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계약제도 활용을 통한 범부처 협업 패키지 지원</li> <li>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li> <li>균형정책과 지방분권의 체계적, 실천적 전략 마련</li> </ul>
고향기부금 연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을 연계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li> </ul>
모니터링 강화(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재정 투입 지역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지속 투자 여부 결정</li> </ul>
지원기구 운영(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감소지역 대응 서비스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지원기구 운영</li> </ul>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2-9] 장소단위 공간전략

주) 원 크기는 전문가 의견수렴과정에서 언급된 빈도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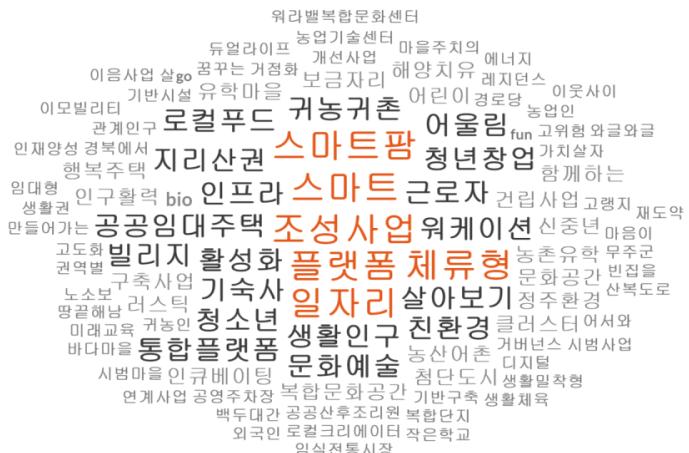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 5. 공간전략 기준 투자계획 내용 분석

### 1) 기초지원계정(89개 인구감소지역)

### ① 사업명 및 내용에 따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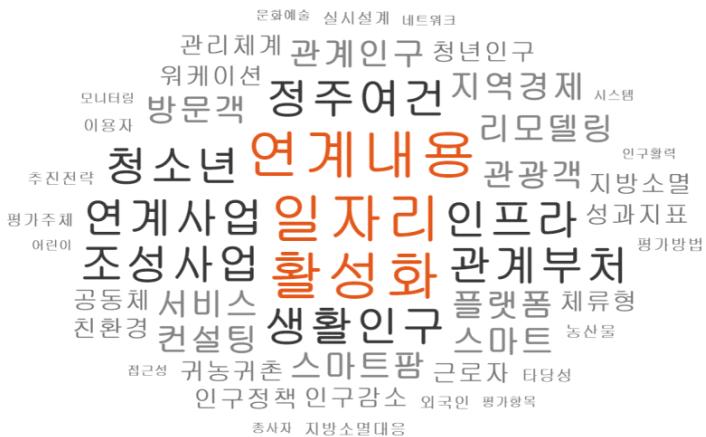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2년과 2023년 투자계획 사업을 분류한 결과 총 466개 사업으로 분석되었으며, 1순위 102개, 2순위 103개, 3순위 93개, 4순위 70개, 5순위 이하 98개 사업으로 구분되었다. 사업명을 바탕으로 키워드 빈도를 추출한 결과 ‘조성사업(22회)’, ‘플랫폼(18회)’, ‘스마트(10회)’, ‘일자리(9회)’, ‘스마트팜(8회)’, ‘체류형(8회)’, ‘활성화(7회)’, ‘워케이션(6회)’, ‘인프라(6회)’로 나타났다. ‘조성사업’ 및 ‘플랫폼’이 빈도가 높은 것은 물리적 하드웨어의 조성 및 공급이 중점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지역이 다수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 외의 상위 빈도 키워드는 생활인구에 대한 강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들이 강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10] 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명 키워드 빈도 워드클라우드

출처: 연구진 작성

다음으로는 각 사업의 세부내용을 바탕으로 키워드 빈도를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 ‘일자리(1038회)’, ‘활성화(736회)’, ‘리모델링(449회)’, ‘스마트(342회)’, ‘스마트팜(338회)’, ‘인프라(327회)’, ‘방문객(318회)’, ‘설시설계(307회)’, ‘서비스(305회)’, ‘플랫폼(295회)’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최고 빈도 키워드로 분석된 부분은 지역의 경제 인구를 끌어들이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며, ‘활성화’가 다빈도로 분석된 부분은 지역의 활력을 즘진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암시하고 있다.



[그림 2-11] 사업내용 키워드 빈도분석 워드클라우드

출처: 연구진 작성

## ② 공간전략별 투자계획 분석

1차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된 공간전략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분류하였다. 분류 도중 기존 세분류로 분류가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공간전략으로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과 ‘지원기관 운영’이 추가되었다. 89개 인구감소지역 시군의 2022년 및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 466개를 공간전략 별로 중복 가능하도록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 다수의 사업이 관련된 전략은 ‘인구유입 특화주택 제공’(69개), ‘관광 특화’(62개), ‘생활인프라 조성 및 효율화’(60개), ‘일자리 및 창업공간 제공’(52개), ‘사회 서비스 확대’(50개), ‘귀촌귀향 유도’(34개), ‘생활인구 확대’(27개) 순으로 나타났다[표 2-9]. 이를 통해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 및 생활인프라의 제공, 관광 등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간전략 대부분은 상으로는 ‘4.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이 147개, ‘3.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가 105개, ‘6. 지역 특화 사업’이 95개, ‘2. 경제활동 기반 마련’이 94, ‘5. 특화주거 공급 및 환경개선’이 81개, ‘7. 공간 장소성 강화’가 27개, ‘8. 연계정책 촉진’이 10개, ‘1. 거점조성 및 재구조화’가 4개 사업이 관련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하드웨어 시설 공급과 운영상의 서비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융합되어 있는 시도를 볼 수 있으며, 생활인구 및 인구 유입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9]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역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공간전략 별 구분 사업 수

공간전략	사업 수(개)	공간전략	사업 수(개)
5. 특화주거 공급 및 환경 개선\인구유입 특화주택 제공	69	5. 특화주거 공급 및 환경 개선\주거환경 및 경관 개선	12
6. 지역 특화 사업\관광특화	62	4.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9
4.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생활 인프라 조성 및 효율화	60	6. 지역 특화 사업\학교특성화	8
2. 경제활동 기반 마련\일자리 및 창업공간 제공	52	7. 공간 장소성 강화\빈집 정비 및 활용	8
4.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사회서비스 확대	50	8. 연계정책 촉진\지원기관 운영	8
3.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귀촌귀향 유도	34	2. 경제활동 기반 마련\특구 조성	5
3.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생활인구 확대	27	6. 지역 특화 사업\지역자산 활용	5
3.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커뮤니티 프로그램	25	4.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접근성 향상	4
2. 경제활동 기반 마련\특화 산업 육성	23	7. 공간 장소성 강화\원도심 활성화	4
4.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서비스 플랫폼 제공	22	1. 거점조성 및 재구조화\지역 거점 조성	3
6. 지역 특화 사업\장소특화 공간전략 제시	20	8. 연계정책 촉진\부처협업 확대	2
3.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정착 기반 마련	19	1. 거점조성 및 재구조화\생활권 설정	1
7. 공간 장소성 강화\유류자산 활용	14	2. 경제활동 기반 마련\IT기술 연계	1
2. 경제활동 기반 마련\농공단지 특성화	13	7. 공간 장소성 강화\공간 계획 강화	1

출처: 연구진 작성

### ③ 순위별 사업에 따른 공간전략별 투자계획 분석

순위별로 제출된 투자계획 사업들을 공간전략별로 구분한 결과 1순위로 제출된 사업은 1차 분류상으로는 ‘4.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24.00%), ‘2. 경제활동 기반 마련’(23.20%)의 비중이 높았으며, 전략 세분류 상으로는 ‘일자리 및 창업공간 제공’(15.20%)과 ‘인구 유입 특화주택 제공’(15.20%)이 가장 많고, ‘생활인프라 조성 및 효율’(10.40%), ‘사회서비스 확대’(8.80%), ‘관광 특화’(8.00%)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사업의 경우에는 ‘관광 특화’(16.10%)가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인구유입 특화주택 제공’(13.56%), ‘일자리 및 창업공간 제공’(11.02%)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 사업의 경우 ‘생활인구 확대’(7.02%)와 ‘귀촌귀향 유도’(8.77%), ‘커뮤니티 프로그램(6.14%)’을 포함한 ‘3.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23.68%)가 타 순위 사업 그룹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순위 사업 그룹부터는 ‘7. 공간 장소성 강화’ 관련 사업도 7.0%를 상회하게 분류되고 있으며, 4순위에서는 ‘관광 특화’(14.81%), 5순위에서는 ‘사회서비스 확대’(12.39%)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수의 지역이 1순위로 인프라와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그 다음으로 지역 특화, 인구 유입 및 생활인구 정착 지원 등의 사업을 계획하며, 하위 순위로 공간 장소성 강화 사업이나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 2-10] 89개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 순위별 사업의 공간전략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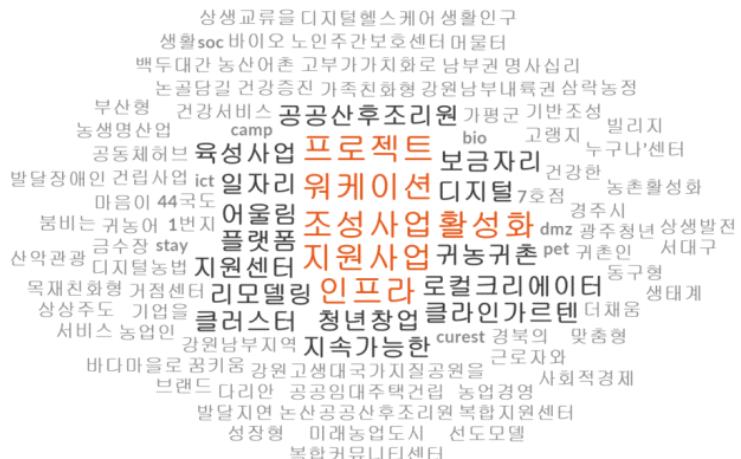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하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1. 거점조성 및 재구조화	3	2.40%	0	0.00%	0	0.00%	0	0.00%	1	0.88%
계획연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공간 재배치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공공의 토지매입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생활권 설정	0	0.00%	0	0.00%	0	0.00%	0	0.00%	1	0.88%
입지적정화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지역 거점 조성	3	2.40%	0	0.00%	0	0.00%	0	0.00%	0	0.00%
2. 경제활동 기반 마련	29	23.20%	23	19.49%	11	9.65%	11	13.58%	19	16.81%
IT기술 연계	0	0.00%	1	0.85%	0	0.00%	0	0.00%	0	0.00%
농공단지 특성화	2	1.60%	3	2.54%	2	1.75%	1	1.23%	5	4.42%
일자리 및 창업공간 제공	19	15.20%	13	11.02%	6	5.26%	6	7.41%	8	7.08%
특구 조성	2	1.60%	1	0.85%	1	0.88%	0	0.00%	1	0.88%
특화 산업 육성	7	5.60%	5	4.24%	2	1.75%	4	4.94%	5	4.42%
3.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	21	16.80%	20	16.95%	27	23.68%	14	17.28%	16	14.16%
생활인구 확대	5	4.00%	6	5.08%	8	7.02%	4	4.94%	4	3.54%
귀촌귀향 유도	8	6.40%	5	4.24%	10	8.77%	7	8.64%	4	3.54%
정착 기반 마련	7	5.60%	5	4.24%	5	4.39%	0	0.00%	2	1.77%
커뮤니티 프로그램	3	2.40%	4	3.39%	7	6.14%	5	6.17%	6	5.31%
4.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30	24.00%	26	22.03%	31	27.19%	23	28.40%	36	31.86%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2	1.60%	1	0.85%	1	0.88%	0	0.00%	5	4.42%
사회서비스 확대	11	8.80%	10	8.47%	8	7.02%	7	8.64%	14	12.39%
생활인프라 조성 및 효율	13	10.40%	10	8.47%	17	14.91%	12	14.81%	8	7.08%
서비스 플랫폼 제공	3	2.40%	5	4.24%	6	5.26%	3	3.70%	7	6.19%
접근성 향상	1	0.80%	0	0.00%	0	0.00%	1	1.23%	2	1.77%
5. 특화주거 공급 및 환경	20	16.00%	20	16.95%	17	14.91%	11	13.58%	13	11.50%
2주택 조건 완화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인구유입 특화주택 제공	19	15.20%	16	13.56%	15	13.16%	11	13.58%	8	7.08%
주거환경 및 경관 개선	1	0.80%	4	3.39%	2	1.75%	0	0.00%	5	4.42%
6. 지역 특화 사업	20	16.00%	23	19.49%	16	14.04%	15	18.52%	20	17.70%
관광특화	10	8.00%	19	16.10%	10	8.77%	12	14.81%	11	9.73%
장소특화 공간전략 제시	7	5.60%	2	1.69%	3	2.63%	2	2.47%	6	5.31%
지역자산 활용	3	2.40%	2	1.69%	0	0.00%	0	0.00%	0	0.00%
학교특성화	1	0.80%	0	0.00%	3	2.63%	1	1.23%	3	2.65%
7. 공간 장소성 강화	1	0.80%	4	3.39%	8	7.02%	5	6.17%	7	6.19%
공간 계획 강화	0	0.00%	1	0.85%	0	0.00%	0	0.00%	0	0.00%
빈집 정비 및 활용	1	0.80%	0	0.00%	3	2.63%	1	1.23%	3	2.65%
원도심 활성화	0	0.00%	0	0.00%	1	0.88%	2	2.47%	1	0.88%
유류자산 활용	0	0.00%	3	2.54%	5	4.39%	2	2.47%	4	3.54%
8. 연계정책 촉진	1	0.80%	2	1.69%	4	3.51%	2	2.47%	1	0.88%
고향기부금 연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모니터링 강화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부처협업 확대	0	0.00%	0	0.00%	2	1.75%	0	0.00%	0	0.00%
지원기관 운영	1	0.80%	2	1.69%	2	1.75%	2	2.47%	1	0.88%

출처: 연구진 작성

## 2) 광역지원계정(15개 광역지자체)

### ① 사업명 및 내용에 따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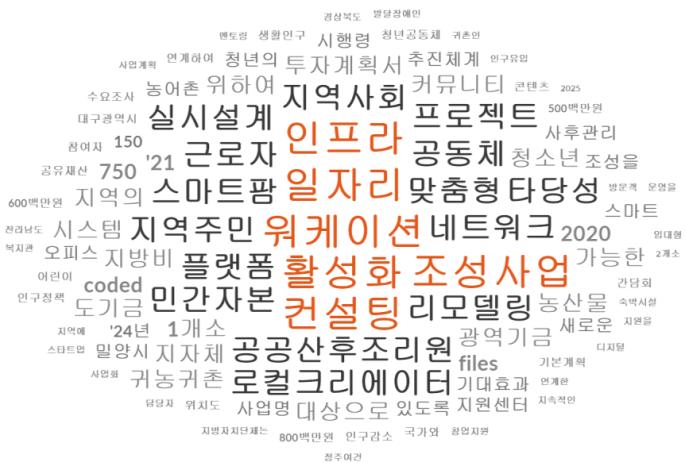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2022년과 2023년 투자계획 사업을 분류한 결과 총 231개 사업으로 분석되었으며, 1순위 30개, 2순위 24개, 3순위 18개, 4순위 15개, 5순위 이하 144개 사업으로 구분되었다. 사업명을 바탕으로 키워드 빈도를 추출한 결과 ‘조성사업(26회)’, ‘지원사업(14회)’, ‘워케이션(10회)’, ‘인프라(8회)’, ‘프로젝트(7회)’, ‘활성화(7회)’, ‘어울림(6회)’, ‘플랫폼(5회)’, ‘귀농귀촌(4회)’ 등으로 나타났다. 광역사업의 경우에도 ‘조성사업’이 최고 빈도 키워드로 분석되어 하드웨어 시설 조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원사업’이 다빈도 키워드로 분석된 부분은 광역계정이 므로 각 지자체별 필요사업들을 지원하는 배분 형식의 사업들이 편성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림 2-12] 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명 키워드 빈도 워드클라우드

출처: 연구진 작성

다음으로는 각 사업의 세부내용을 바탕으로 키워드 빈도를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 ‘워케이션(556회)’, ‘활성화(408회)’, ‘일자리(392회)’, ‘컨설팅(265회)’, ‘인프라(202회)’, ‘조성사업(187회)’, ‘스마트팜(180회)’, ‘플랫폼(178회)’, ‘맞춤형(144회)’, ‘지역주민(144회)’ 등으로 나타났다. 광역계정 사업의 경우 ‘워케이션’이 최다 빈도 사업내용 키워드로 분석되어 생활인구 유입과 일자리 공간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3] 사업내용 키워드 빈도분석 워드클라우드

출처: 연구진 작성

## ② 공간전략별 투자계획 분석

1차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된 공간전략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분류하였다. 15개 광역지자체의 2022년 및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 231개를 공간전략 별로 중복 가능하도록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 다수의 사업이 관련된 전략은 '생활인구 확대'(42개), '생활인프라 조성 및 효율화'(41개), '사회서비스 확대'(36개), '일자리 및 창업공간 제공'(26개), '특화산업 육성'(22개), '인구유입 특화주택 제공'(21개), '서비스 플랫폼 제공'(15개) 순으로 나타났다[표 2-11]. 공간전략 대부분 상으로는 '4.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이 92개, '3.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가 66개, '2. 경제활동 기반 마련'이 64개, '5. 특화주거 공급 및 환경개선'이 35개, '6. 지역 특화 사업'이 16개, '7. 공간 장소성 강화'가 12개, '8. 연계정책 촉진'이 5개, '1. 거점조성 및 재구조화'가 0개 사업이 관련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통해 광역 계정의 경우 생활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생활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배분 사업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1] 15개 광역지자체 지역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공간전략 별 구분 사업 수

공간전략	사업 수(개)
3.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생활인구 확대	42
4.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생활인프라 조성 및 효율화	41
4.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사회서비스 확대	36
2. 경제활동 기반 마련\일자리 및 창업공간 제공	26
2. 경제활동 기반 마련\특화산업 육성	22
5. 특화주거 공급 및 환경 개선\인구유입 특화주택 제공	21
4.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서비스 플랫폼 제공	15
2. 경제활동 기반 마련\IT 기술 연계	14
5. 특화주거 공급 및 환경 개선\주거환경 및 경관 개선	14
6. 지역특화 사업\관광특화	14
3.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커뮤니티 프로그램	13
3.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정착 기반 마련	9
7. 공간 장소성 강화\빈집 정비 및 활용	8
8. 연계정책 촉진\지원기구 운영	5
7. 공간 장소성 강화\유류자산 활용	3
2. 경제활동 기반 마련\농공단지 특성화	2
3.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귀촌귀향 유도	2
6. 지역특화 사업\장소특화 공간전략 제시	2
7. 공간 장소성 강화\공간 계획 강화	1

출처: 연구진 작성

### ③ 순위별 사업에 따른 공간전략별 투자계획 분석

순위별로 제출된 투자계획 사업들을 공간전략별로 구분한 결과 1순위로 제출된 사업은 1차 분류상으로는 ‘2. 경제활동 기반 마련’(31.82%), ‘4.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31.82%)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전략 세분류 상으로는 ‘생활인구 확대’(18.18%)와 ‘특화 산업 육성’(13.6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회서비스 확대’(11.36%), ‘서비스 플랫폼 제공’(11.36%)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사업의 경우에는 ‘4.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46.43%)의 비중이 가장 커졌으며, ‘경제활동 기반 마련’(21.43%), ‘특화주거 공급 및 환경’(21.43%) 순으로 나타났다. 전략 세분류 상으로는 ‘사회서비스 확대’(25.00%), ‘인구유입 특화주택 제공’(21.43%)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 사업의 경우 1순위와 마찬가지로 ‘2. 경제활동 기반 마련’(39.29%)의 비중이 가장 커졌으며, 세부 전략 중에서는 ‘일자리 및 창업공간 제공’(21.43%)이 가장 많았다. 또한, 3순위 사업 그룹부터는 ‘7. 공간 장소성 강화’ 관련 사업도 3.5%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순위에서는 ‘3.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41.94%)의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세부 전략으로는 ‘커뮤니티 프로그램’(19.35%), ‘생활인구 확대’(16.13%) 순으로 높았다. ‘7. 공간 장소성 강화’(12.90%)는 4순위 그룹에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5순위의 경우 2순위와 동일하게 ‘4.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31.45%)이 가장 많았으며 ‘3.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22.64%), ‘2. 경제활동 기반 마련’(20.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룹 중 유일하게 ‘8. 연계정책 촉진’(3.14%) 관련 사업을 포함하였다.

[표 2-12] 89개 인구감소지역 투자계획 순위별 사업의 공간전략 구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하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1. 거점조성 및 재구조화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계획연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공간 재배치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공공의 토지매입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생활권 설정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입지적정화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지역 거점 조성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 경제활동 기반 마련	14	31.82%	6	21.43%	11	39.29%	1	3.23%	32	20.13%
IT기술 연계	2	4.55%	2	7.14%	2	7.14%	0	0.00%	8	5.03%
농공단지 특성화	2	4.55%	0	0.00%	0	0.00%	0	0.00%	0	0.00%
일자리 및 창업공간 제공	4	9.09%	2	7.14%	6	21.43%	1	3.23%	13	8.18%
특구 조성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특화 산업 육성	6	13.64%	2	7.14%	3	10.71%	0	0.00%	11	6.92%
3.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	10	22.73%	2	7.14%	5	17.86%	13	41.94%	36	22.64%
생활인구 확대	8	18.18%	1	3.57%	3	10.71%	5	16.13%	25	15.72%
귀촌귀향 유도	0	0.00%	0	0.00%	0	0.00%	0	0.00%	2	1.26%
정착 기반 마련	2	4.55%	1	3.57%	0	0.00%	2	6.45%	4	2.52%
커뮤니티 프로그램	0	0.00%	0	0.00%	2	7.14%	6	19.35%	5	3.14%
4.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14	31.82%	13	46.43%	7	25.00%	8	25.81%	50	31.45%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사회서비스 확대	5	11.36%	7	25.00%	2	7.14%	3	9.68%	19	11.95%
생활인프라 조성 및 효율	4	9.09%	4	14.29%	3	10.71%	3	9.68%	27	16.98%
서비스 플랫폼 제공	5	11.36%	2	7.14%	2	7.14%	2	6.45%	4	2.52%
접근성 향상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5. 특화주거 공급 및 환경	6	13.64%	6	21.43%	4	14.29%	4	12.90%	15	9.43%
2주택 조건 완화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인구유입 특화주택 제공	2	4.55%	6	21.43%	3	10.71%	4	12.90%	6	3.77%
주거환경 및 경관 개선	4	9.09%	0	0.00%	1	3.57%	0	0.00%	9	5.66%
6. 지역 특화 사업	0	0.00%	1	3.57%	0	0.00%	1	3.23%	14	8.81%
관광특화	0	0.00%	1	3.57%	0	0.00%	1	3.23%	12	7.55%
장소특화 공간전략 제시	0	0.00%	0	0.00%	0	0.00%	0	0.00%	2	1.26%
지역자산 활용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학교특성화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7. 공간 장소성 강화	0	0.00%	0	0.00%	1	3.57%	4	12.90%	7	4.40%
공간 계획 강화	0	0.00%	0	0.00%	0	0.00%	1	3.23%	0	0.00%
빈집 정비 및 활용	0	0.00%	0	0.00%	1	3.57%	0	0.00%	7	4.40%
원도심 활성화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유후자산 활용	0	0.00%	0	0.00%	0	0.00%	3	9.68%	0	0.00%
8. 연계정책 촉진	0	0.00%	0	0.00%	0	0.00%	0	0.00%	5	3.14%
고향기부금 연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모니터링 강화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부처협업 확대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지원기관 운영	0	0.00%	0	0.00%	0	0.00%	0	0.00%	5	3.14%

출처: 연구진 작성

## 6. 소결

본 절에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 맞춤형 공간전략이 필요함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감소지역들은 인구, 공간, 경제·사회·행정적 측면에서 각각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어, 이를 진단하고 고려하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적 특징에 따른 유형화를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략적으로 네 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군집 유형별로 각기 다른 인구적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각 유형별 특징을 인구적 측면 외 다른 여러 측면에서도 살펴보기 위해 유형별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같은 유형의 인구감소지역들도 각기 다른 인구적, 공간적, 경제·사회·행정적 특징을 보였으며, 인구감소가 시작된 배경과 이로 인해 나타난 문제도 조금씩 달랐다. 청년층의 유출 및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노후주택 및 빙집 증가로 인한 지역의 쇠퇴, 삶의 질과 연관되는 도시 인프라의 부족 등은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려해볼 수 있는 지역의 자원과 공간적 특성 등은 여러 가지로 제안될 수 있다.

군집 유형별로 인구감소지역의 사업 방향과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한 군집별 사업 비교분석 결과 키워드로 군집1은 ‘일자리’, ‘활성화’, 군집2는 ‘생활인구’, ‘정주여건’, 군집3은 ‘인프라’, ‘생활인구’, 군집4는 ‘일자리’, ‘근로자’의 비중이 높았다. 유사 특성을 지닌 사업 분석 결과 군집1은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집2는 ‘지역특화 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군집에 비해 매우 높았고, 군집3의 경우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군집4의 경우 ‘경제활동 기반 마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지역 특성화를 통한 차별화된 대응 사업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각 군집유형의 특징에 적합한 지방소멸 대응 방향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차이를 도출하였다. 군집1은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확보하여 지역 인구를 유지”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군집2는 “신산업 발굴 등 경제기반 구축, 생활 및 여가 서비스 확충, 출산 및 보육 서비스 강화를 통한 지역 청년 정착 유도 및 인구 유지”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군집3은 “인접 도시와의 연계 및 인프라 중심의 공간 재구조화, 인구 유출 최소화 및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정착기반 마련, 지역특화 사업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를 제안하였다. 군집4는 “인근 지역과 연계한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고령인구 대상 정주환

경 개선하고 전원도시,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구 및 생활인구 유입”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정리하면, 인구감소지역들은 인구감소 문제의 원인과 양상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방향 또한 이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방 도시가 인구감소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실태를 일반화하기 보다는 각 지역이 지닌 인구·사회학적, 공간적 현황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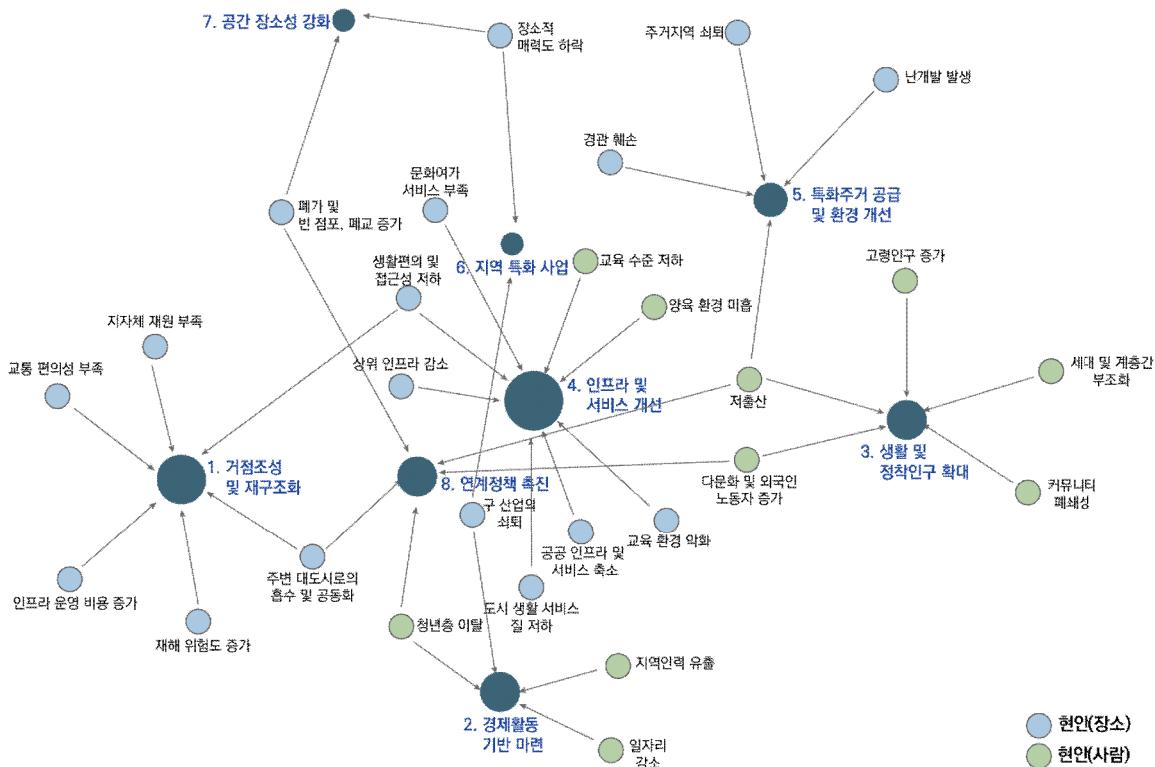
둘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관리 측면에서, 장소의 강점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지방 소멸 대응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전략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 수립을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현안을 사람과 장소 측면에서 세분화하고, 현안을 고려한 공간전략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도출된 인구감소지역의 사람 측면의 현안 6건(하위 17개)과 장소 측면의 현안 6건(하위 22개)은 상호 복합적 문제이며, 이는 지방소멸과 관련한 문제들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도출된 8개 부문 35개 공간전략은 다각적이면서도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이를 지역 현안 및 지역 특수성에 연계하면 효과적일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장소단위 전략들은 사람 및 장소 측면에서의 지역 현안과 문제점의 유형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거점조성 및 재구조화 전략은 장소 측면의 현안 중 이동성 감소의 교통 편의성 부족, 도시행정 비효율화의 지자체 재원 부족, 인프라 운영비용의 증가, 지역 공동화에서의 주변 대도시로의 흡수 및 외곽지역 공동화, 재해 위험도 증가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두 번째 전략인 경제활동 기반마련은 장소보다 사람 측면의 현안에 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경제활동 인구 감소의 청년층 이탈, 지역인력 유출, 일자리 감소와 연계되며, 장소적 측면에서는 지역 공동화의 구 산업의 쇠퇴와 연계된다.

세 번째 전략인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는 사람 측면의 현안인 저출산, 고령사회의 고령 인구 증가, 저출산, 배타적 지역사회의 세대 및 계층 간 부조화, 커뮤니티 폐쇄성, 다문화 및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응한다. 네 번째 전략인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은 가장 많은 현안들과 연계되는데 장소 현안들은 모두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 악화의 세부현안인 문화여가 서비스 부족, 생활편의 및 접근성 저하, 상위 인프라 감소, 교육 환경 악화,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 축소, 도시생활서비스 질 저하에 해당한다. 사람 측면에서는 미흡한 교육 및 양육 환경의 교육 수준 저하 및 양육 환경 미흡에 대응한다.

다섯 번째 전략인 특화주거 공급 및 환경 개선은 물리적 환경 낙후의 세부현안인 경관훼손, 주거지역 쇠퇴, 난개발 발생과 저출산과 연계하여 적용하는 전략이다. 여섯 번째 전략인 지역특화사업은 물리적 환경 낙후에 해당하는 장소적 매력도 하락과 지역 공동화의 구 산업이 쇠퇴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일곱 번째 공간 장소성 강화는 물리적 환경 낙후의 장소적 매력도 하락과 폐가 및 빈 점포, 폐교 증가와 연계하여 적용 가능한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연계정책 촉진 전략은 물리적 환경 낙후의 폐가 및 빈 점포, 폐교 증가와 지역 공동화의 주변 대도시로의 흡수 및 공동화가 해당되며, 사람 측면의 현안으로는 저출산, 다문화 및 외국인 노동자 증가, 청년층 이탈의 세부현안에 대응 가능한 전략이다. 이처럼 지역의 사람과 장소 측면에서 접근하는 공간전략은 지역의 현안과 강·약점을 기반으로 적용할 수 있어,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림 2-14] 사람 및 장소 측면의 현안 연계 장소단위 공간전략

주) 전략의 원 크기는 전문가 의견수렴과정에서 언급된 빈도수를 의미함  
출처: 연구진 작성

셋째,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있어 공간전략을 통한 차별화와 평가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89개 지자체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기반으로 키워드 빈도분석을 시행한 결과, 사업명으로는 ‘조성사업’, ‘플랫폼’, ‘일자리’ 등의 키워드가 빈도가 높았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일자리’, ‘활성화’ 등의 키워드가 빈도가 높았다. 이는 물리적 하드웨어 시설에 대한 비중이 높을 것이며,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과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비중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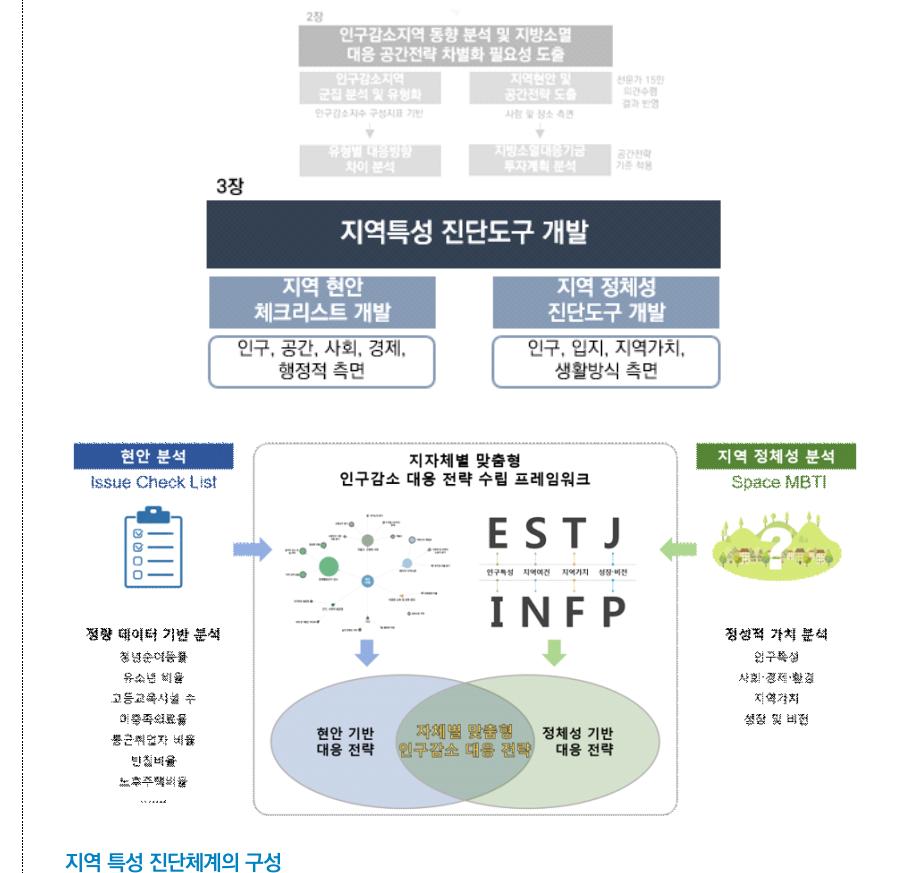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된 공간전략별 사업 분류로는 ‘인구유입 특화주택 제공’, ‘관광 특화’, ‘생활인프라 조성 및 효율화’, ‘일자리 및 창업공간 제공’으로 구분된 사업들의 빈도가 높았다. 이는 생활인구 등 인구 유입을 위한 부분과 정주인구 대상 생활여건 향상 및 일자리 지원 등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제공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024년 투자계획 작성안내서에 제시되어 있는 사업 예시 등을 반영하여 각 지역의 대응계획이 다소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으며, 지역의 현안이나 강점 및 특성과 연계가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방식 및 지표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로도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15개 광역 지자체 투자계획을 기반으로 키워드 빈도분석을 시행한 결과, 광역지자체 투자계획이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투자계획과 사업 내용에서 크게 차별성을 지니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계정 사업이 차별화되지 못한 점은 광역계정의 사업들이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의 요청 사업들을 묶어서 구성되고 있는 현실이고, 광역계정으로 배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성격이 강하여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광역계정의 사업들은 같은 광역 지역 내 연접하거나 속해 있는 인구감소지역 시·군의 연계 협력을 위한 특성화 클러스터 사업 등과 같은 다차원적 융합 사업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자체별 연관 사업을 기획하여 지자체간 경쟁이 아닌, 광역 단위의 지역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광역 관점의 통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차원에서의 계획 수립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발전하고 기금 배분 기준 검토를 고려해야 한다.

# 제3장 인구감소지역의 공간적 특성 진단도구 개발

1. 인구감소지역 진단도구의 개발 필요성
2. 지역 ‘현안 체크리스트’의 개발
3. 지역 정체성 차가 진단 도구 ‘지역 Space-MBTI’ 개발
4. 소결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 위기 현안 및 공간전략에 연계하여 지역 특성 진단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진단체계는 ‘현안 체크리스트’와 지역 정체성 분석인 ‘지역 Space-MBTI’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 현안과 정체성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우수 사업을 발굴하여, 지방소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유도하고자 한다.



## 1. 인구감소지역 진단도구의 개발 필요성

### □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사업계획 수립

89개 인구감소지역은 '22년부터 지역별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기금을 신청하여 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기금이 배분되고 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및 투자사업 기금은 '인구' 관련 정량 지표로만 평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이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이 쇠퇴하거나 성장하는 원인은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솔루션을 찾아갈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획일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지역의 특수성과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획일화된 기금활용 투자 사업이 지속된다면, 지역의 자체적 특수성과 매력을 활용하지 못해 기금 투자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들의 소멸 속도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마다 차별적인 콘텐츠를 기획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간 경쟁 유발로 광역 범위에서 상호 협력적인 연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지역별 정량적 특징 분석과 함께 지역의 정체성 발굴과 지속가능한 사업 기획을 위한 정성적 유형 지표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 □ 지방소멸 대응 공간관리를 위한 진단 필요성

기존의 사업전략기획 중 현안 진단은 SWOT 분석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의 SWOT 대부분은 유사한 특징들로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2장에서 군집 분석과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인구, 공간, 경제·사회·행정적 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전반적인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보이는 인구 부문과 달리, 공간 및 경제·사회·행정적 측면에서는 지역마다의 현안과 특성이 더욱 뚜렷하고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SWOT을 통한 지역의 특장점과 약점, 위험요소를 지역의 특수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 특성의 진단 필요성을 시사한다.

인구감소지역별 공간 특성 진단을 통해 지역별 공간 유형 지표 특징을 발굴하고, 지역 간 연계 성장 방안을 찾아내어 광역지자체의 지원을 유도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지역 및 광역 관점의 사업계획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지표 평가로 지역의 변화와 사업계획 반영 과정 중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사업계획 유지 및 투자의 측정지표가 되는 동시에 진행 과정 중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 방향 수정의

근거가 될 수도 있어 효율적인 기금 집행 및 효과 측정의 기반이 될 수 있다.

#### □ 지역 특성 진단도구의 적용 및 기대효과

인구감소지역은 다른 지역 대비 인적자원 및 행정적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도의 사업기획 및 실행이 다소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민이 체감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기획을 지원하고, 지역의 숨어있는 특장점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지역의 공간 특성 진단도구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지역 ‘현안 체크리스트’와 더불어 지역 정체성의 자가 진단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진단 도구의 명칭을 ‘지역 Space-MBTI (Municipal Base Type Indicator)’로 정하였다. 현안 체크리스트는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의 인구, 공간, 경제·사회적 측면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현안을 바탕으로 한 인구감소 대응전략 마련과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지역 정체성 자가 진단 도구(지역 Space-MBTI)는 지역 주체들이 체감하고 희망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진단지를 As-is와 To-be로 구분하여 지역의 특장점에 대한 인식과 향후 지역의 성장 방향을 분석할 수 있게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민을 비롯하여 지자체의 다양한 지역 내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어 지역이 직접 만들어가는 효과와 지역민의 만족을 기대할 수 있다.

## 2. 지역 ‘현안 체크리스트’의 개발

### 1) 현안 체크리스트의 의의

지역 현안 체크리스트는 지역의 인구적, 공간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등에 대한 현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현안 체크리스트 결과는 지방소멸기금 관련 자체 전략 및 수립계획에 대한 참고자료로써 제공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 및 지역이 지닌 강점, 취약점 등을 고려한 지자체의 투자계획 수립을 촉진하고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기금의 사업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지자체가 현안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우수 사업을 발굴하며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내부의 현황분석은 가장 현실적이고 심도 깊은 판단을 제공하지만, 경우에 따라 기본적 이거나 중요한 요인들을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할 우려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과 계획 수립의 주체인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와 간접적으로 비교된 정량데이터들을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공공에서 개방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각 지자체간 현안들을 비교 및 진단하여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현안 체크리스트 이용 데이터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련 지역 현안을 분석하여 지역 현안을 판단하고자 사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제시된 지역 현안들과 연계 가능성 있는 지표들을 수집하였다. K 인구감소지수를 비롯해 인구, 가족, 건강, 교육, 고용과 노동,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성장과 안정, 환경, 안전, 사회통합 관련 통계를 활용하였으며 일부 통계자료는 비교 분석에 용이하도록 처리하여 제시하였다.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시군(세종 및 제주 제외) 및 다른 인구감소지역들과 비교하였다.

[표 3-1] 체크리스트 구성을 위한 사용 기초 통계 (통계청 자료)

구분	사용 통계
인구	주민등록인구, 가구수, 연평균인구 증감률, 전입 인구, 전출 인구, 인구 천명당 순인구 이동, 합계 출산률, 고령인구 비율, 인구천명당 외국인 수, 평균 연령
가족	1인가구 비율, 다문화 혼인 건수, 독거노인 가구 비율, 신혼부부 수,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주민등록인구 중 유아 (0~5세) 비율
건강	스트레스 인지율,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실 수, 주관적 건강 수준 인지율, 미충족 의료율
교육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 수, 유치원 수, 유치원 원아 수, 초등학교 수, 초등학생 수, 대학교 학생 수
고용과 노동	고용률, 거주지 내 통근 취업자, 거주지 외 타지역 통근 취업자,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상용직 비중, 청년 고용률, 취업자 수
주거와 교통	도시지역 면적, 1인당 도시지역 면적 현황, 노후주택 비율, 빈집 비율, 빈집 수, 도로 포장률, 도시 지역 인구 비율, 1인당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 1인당 녹지 면적
문화와 여가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 문화기반 시설 수, 인터넷 이용률
성장과 안정	사업체 수,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 도소매업 사업체 수, 도소매사업체 비율, 도소매업 종사자 수, 서비스업 사업체 수, 서비스 사업체 비율, 제조업 사업체 수, 제조업 사업체 비율, 제조업 종사자 수, 제조업 종사자 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환경	녹지율,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안전	지역 안전등급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 감염병)
사회통합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복지 시설 수,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체 비율,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 비율,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 시설 수,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일반 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

출처: 연구진 작성

### 3) 데이터 셋(Data set) 구축 및 분석 과정

우선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정량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각 지자체별 규모를 고려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비율로 변환하였다. 비율 변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체 당 고용규모 등의 지표 사례처럼 통계치를 상호 연계하여 비율 기반으로 재생산 하였다. 다음으로 각각의 지표별로 226개 지자체에 인구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순위를 매기고 해당 지자체가 하위 몇 퍼센트에 속하는지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떠한 지표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상대적 위치인 %가 낮을수록 부정적이며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짐을 의미하도록 비교 비율을 분석하였다.

1차로 구축된 지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구, 공간, 경제·사회·행정 부문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인구 부문은 인구변화, 인구구성, 인구특성과 관련된 지표들로 구성하였다. 공

간 부문은 공간구조, 주거환경, 도시 인프라, 교육인프라, 문화·복지 인프라, 안전 관련 지표들로 구성하였다. 경제·사회·행정 부문은 고용, 사업체, 삶의 질, 사회서비스, 행정 관련 지표들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는 현안 체크리스트 분석 리포트로 표현하고자 했는데, 자료 특성에 따라 지자체의 백분율 위치가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고 통계자료 분석 결과값을 종합하여 진단하였다.

[표 3-2] 현안 체크리스트 구성에 활용한 현안 지표

구분		현안 지표(79개)
인구	인구변화	5년간 연평균인구 증감률, 전입 인구 비율, 전출 인구 비율, 인구 천명당 순인구 이동, 청년 순이동률
	인구구성	고령인구비율, 만명당 유치원 원아수, 만명당 초등학생수, 신혼부부 비율, 유아인구 비율, 평균 연령, 합계 출산율,
	인구특성	1인가구 비율, 다문화 혼인 비중, 독거노인 가구 비율, 인구 천명당 외국인수
	공간구조	1인당 녹지지역 면적, 1인당 주상공면적, 녹지비율, 도시지역 면적, 도시지역 인구, 도시지역인구 비율
	주거환경	노후주택 비율, 빙집 비율, 빙집수
	도시 인프라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공간	교육 인프라	대학교 재학생수, 만명당 유치원수, 만명당 초등학교 수,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문화· 복지 인프라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문화기반시설수,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병상수, 요양기관수, 인구 십만명당 요양기관수
	안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감염병
	고용	고용률*, 취업자수*, 거주지내 통근 취업자 비율*, 거주지외 타지역 통근 취업자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상용직 비중*, 실업률*
	사회· 경제· 행정	전체산업 종사자수,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 청년 고용률*, 사업체수,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 사업체 당 고용 규모, 도소매업 사업체 수, 도소매사업체 비율, 도소매업 종사자 수, 서비스업 사업체 수, 서비스 사업체 비율, 제조업 사업체 수, 제조업 사업체 비율, 제조업 종사자 수, 제조업 종사자 비율
	삶의 질	스트레스 인지를,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를,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인터넷 이용률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	미충족 의료율,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체 비율,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 비율, 인구 천명당 사설 학원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행정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는 2022년 통계 자료를 활용한 지표를 표시함

출처: 연구진 작성

### 3. 지역 정체성 자가 진단 도구 ‘지역 Space-MBTI’ 개발

#### 1) 유형 지표의 항목 구성

유형지표를 정의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진단 Toolkit을 활용할 수 있으나 가장 쟁점은 강점-약점, 기회-위험의 양분법적인 논리가 아닌, ‘외향-내향’, ‘감성-이성’과 같이 긍정 및 부정의 영역이 아닌 다름 또는 차이를 표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진의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マイ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의 프레임을 활용하여 초안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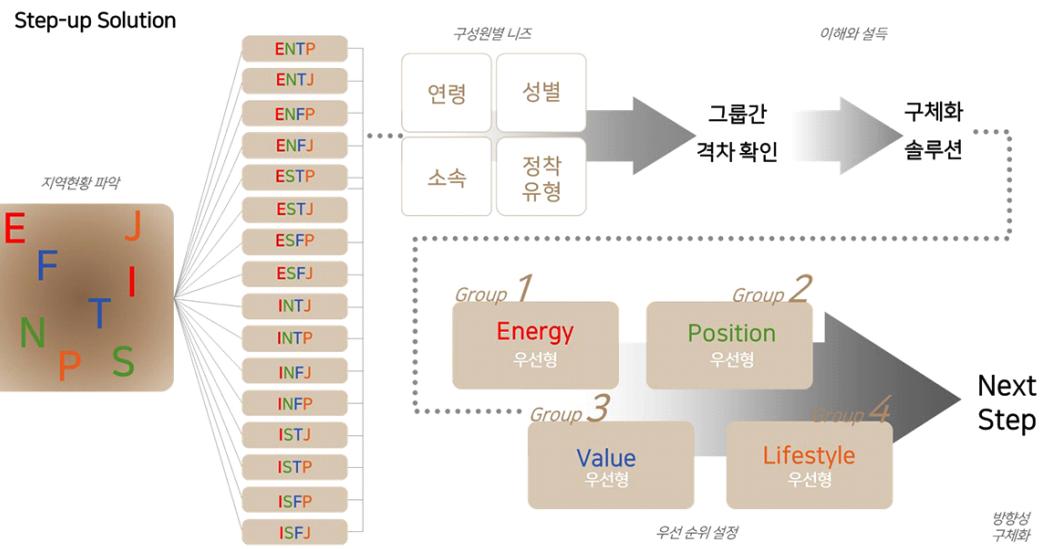
주요 공간적 특징으로는 지역을 벗어나는 사회경제적인 파워로 판단되는 인구(Energy), 물리적인 환경의 특징(Position),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 및 특장점과 가장 긴밀한 지역 가치(Value) 및 특수성(Lifestyle)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측면을 양분하여 8개의 속성을 독립적으로 배치하였으며, 8개의 속성은 2개씩 그룹화되는 구조로 총 경우의 수에 따라 총 16개로 구성하였다. 특히, 해당 유형 지표는 응답자의 카테고리(연령, 성별, 소속, 정착유형 등)에 따라 지역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응답자(커뮤니티)의 응답별 격차(Gap) 분석을 통해 정성적 결과의 세부적 유형 형성의 방향을 더욱 세밀히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요 카테고리 속성별 특징을 진단할 수 있는 유형(지역 Space-MBTI: Municipal Base Type Indicator)으로, 대표 분류인 4개 그룹을 진단을 위한 세부 항목으로 세분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 □ Category 1. Energy(인구) : E(Externality) – I(Internality)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인구 비중으로 방문 인구(관광객 등)와 정주인구 중 많은 비중에 따라 E 또는 I로 구분하였다. E의 경우, 관광인구 및 관계인구 등 생활인구와 같은 외부 인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역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지향하는 특징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았다. I의 경우, 내부 정주인구 중심의 안정적이고 경험적 정착을 지향하는 지역으로 외부 인구의 유입보다는 내부 인구 중심의 경제활동이 구축된 지역적 특성을 보유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카테고리의 특징은 타겟 인구 관련 정책과 연계되며,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생활인구 및 정주인구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 연관되는 인프라 및 서비스 항목 구체화, 특화 주거 공급 및 환경 개선 계획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그림 3-1] 지역특성 기반 유형 지표 개발 프로세스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3-2] Category1 인구 항목 특성 진단 차트

출처: 연구진 작성

## □ Category 2. Position(입지) : N(Nature) – S(Structure)

지역을 대표하는 입지적 특징이 자연적 요소(Nature)가 많은지, 경제적 거점이나 광역 지역에서 중심지로서 도시적 인프라(Structure)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이는 입지적 특징이면서 향후 활용 자원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특성이 될 수 있다.

'N' 지역의 경우,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상품화하거나,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인프라 및 사업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S' 지역의 경우, 지역 고유의 역량 있는 산업을 다시 재검토하고, 경제적 인구 유입이 가능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기존에 투자된 인프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광역적 성장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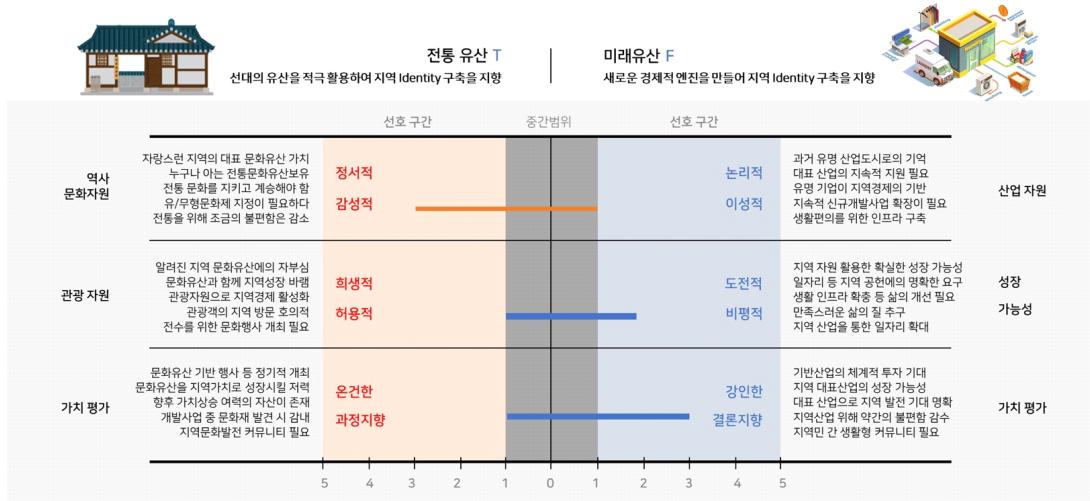
[그림 3-3] Category2 입지 항목 특성 진단 차트

출처: 연구진 작성

### □ Category 3. Value(지역가치) : T(Tradition) – F(Future)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가치가 전통적 유산(Tradition) 관련이 많은지, 근대 및 현대 산업 시설 등 새로운 경제적 엔진을 조성하여 지역 차별성 구축이 가능한 미래 가치(Future) 요소가 중점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투자계획의 주요 테마가 되는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경제적 활성화의 컨셉과 기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전통유산에 기반을 둔 관광산업 투자와 산업 인프라 투자를 통한 기반산업 육성으로 나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타겟 인구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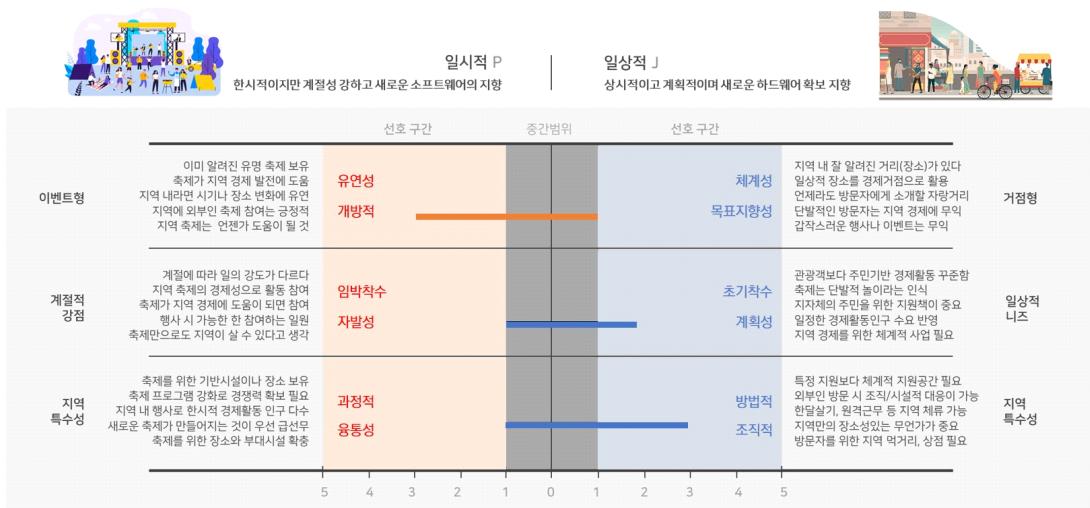
[그림 3-4] Category3 지역가치 항목 특성 진단 차트

출처: 연구진 작성

#### □ Category 4. Lifestyle(라이프스타일) : P(temporar) – J(journey)

지역의 생활 및 경제 사회적 전개 방식 및 지역 특수성을 나타낸다. 한시적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쓸어 내거나 계절성이 강한 일을 영위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Temporary)과 일반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며 계획적이고 일상성이 기반이 되어 있는 일상적 스타일의 지역(Journey)으로 구분된다.

'P' 지역의 경우, 1년을 주기로 보았을 때 바쁜 시기와 한가한 시기가 존재함에 따라 한가한 시기에 지역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가 기여도를 높을 수 있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투자가 가능하다. 반면, 'J' 지역의 경우, 일상적 생활이 기반이 되는 지역은 한시적인 이벤트나 행사에 커뮤니티가 투입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오히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더욱 적합한 지역으로 이러한 특징에 맞는 성장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5] Category4 라이프스타일 항목 특성 진단 차트

출처: 연구진 작성

## 2) 지역 특성 유형 지표 최종 차트 구성 및 진단 툴킷 개발

### □ 항목별 특성 지표를 결합한 종합 차트 구성

카테고리별 진단 평가를 구조화하여 8가지의 대표 유형 지표를 기반으로 최종 16가지의 지역특성 유형 지표를 [그림 3-6]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진단하기 위한 Toolkit의 개발을 진행하였다. 유형지표로 진단하기 위한 Toolkit은 120개의 기본문항의 질문지와 질문별 가중치 배점으로 구조화되었으며, 응답자의 기초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3-6] 지역특성 유형 지표 종합 차트

출처: 연구진 작성

[표 3-3] 질문 항목 요약

구분	질문 항목 상세	
그룹 속성 지표	1. 거주 지역(시군구 단위) 2. 연령(20~70대) 3. 성별('남/여') 4. 지역 역할(주민, 상인, 공무원 등) 5. 정착 유형(원주민, U턴, I턴 등)	
지역 진단 지표(E/I)	As-is E 선호(10문항) To-be E 선호(5문항)	As-is I 선호(10문항) To-be I 선호(5문항)
지역 진단 지표(N/S)	As-is N 선호(10문항) To-be N 선호(5문항)	As-is S 선호(10문항) To-be S 선호(5문항)
지역 진단 지표(T/F)	As-is T 선호(10문항) To-be T 선호(5문항)	As-is F 선호(10문항) To-be F 선호(5문항)
지역 진단 지표(P/J)	As-is P 선호(10문항) To-be P 선호(5문항)	As-is I 선호(10문항) To-be I 선호(5문항)
총계	속성 지표(5문항), 진단 지표(120문항)	

출처: 연구진 작성

지역 특성 진단표								
No.	질문	기초 정보					응답	
#1	귀하의 지역은 어디입니까?(시군구 단위)	직접 기입 (예시: 강원도 고성군)						
#2	귀하는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30~40세	② 40~50세	③ 50~60세	④ 60~70세	⑤ 70세 이상		
#3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③	④	⑤		
#4	귀하의 지역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① 주민	② 지역 리더 (이장, 부녀회장)	③ 공무원, 행정 관련 업무자	④ 지역 상인 및 관계자	⑤ 기타(기업)		
#5	지역 정착 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원주민	② 다른지역에서 이주(I 턴)	③ 귀족/귀농 (U턴)	④ 일시적 정착	⑤ 기타(기업)		
No.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우리 지역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지역은 외부 관광객들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리 지역은 주말용 별장용으로 생활을 해도 좋은 지역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낯선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주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지역 경제를 위해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더 확충되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주변에 주말용이나 별장용으로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점점 줄어드는 것이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최근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들이 조번에 많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6	우리 지역은 특정 관광객을 위한 지원보다 일상적인 생활지원공간이 더 도움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7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이나 거리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8	한달살기, 원격근무 같은 지역 체류 사례가 있으며, 우리 지역은 정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9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곳이 활성화되어 지역민들을 위한 경제가 살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0	외부 방문자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역거리, 상점 등이 더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그림 3-7] 지역특성 유형 지표 진단 툴킷(Toolkit)

출처: 연구진 작성

## 4. 소결

지역 고유의 가치 및 잠재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지역의 현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면, 기금투자사업이 추진되더라도 해당 지역들의 지방소멸은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본 장에서는 지역맞춤형 전략 구상의 시작점으로서의 지역 현안 및 정체성을 진단할 수 있는 지역 특성 진단도구를 개발하였다. 지역 특성 진단도구는 현안 체크리스트 리포트 형식의 지역별 정량적 특징 분석과 함께 지역 Space-MBTI로 명칭한 지역의 정체성 발굴과 지속가능한 사업 기획을 위한 정성적 유형 지표로 구성된다.

현안 체크리스트는 지역의 현안 진단을 통해 지역의 강점과 잠재력, 취약점을 분석하도록 유도하는 진단도구로 정량적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의 여러 지표상의 상대적 위치를 표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안 체크리스트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 등에서 각 지자체에게 상대적 지역 현안을 분석하여 타 지역 대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현안들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현안 체크리스트 리포트는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지자체별 차별화된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현황분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각 지자체는 이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인지하고, 대응 전략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기금 투자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 심사 시 평가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지역 정체성 자가 진단도구인 지역 Space-MBTI는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에 대한 진단을 세밀하게 하되,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공무원 및 주민 등)들이 참여하여 협력하는 진단도구로서 활용 가능하다. 지역 Space-MBTI는 지역별 기존 지원사업 진행현황 및 이슈 분석과 유형 지표에 따른 공간 특성화 사업 진단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지역의 고유한 가치와 특징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지원 사업 기획이 가능하도록 기존 지원사업의 한계와 이슈 도출 및 대응방안 제안에 활용할 수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단년도로 평가되고 있지만, 투자계획은 연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지역 Space-MBTI를 통한 진단과 함께 중장기 사업간 연계성을 제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대표 유형 16개의 주요 공간전략 사업을 구체화하여 유형별 지역 특성에 따른 사업기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현안 진단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진단 유형과 매칭 사업, 공간전략 사업 등이 연결될 수 있도록 스토리보드 작성 등 상세한 진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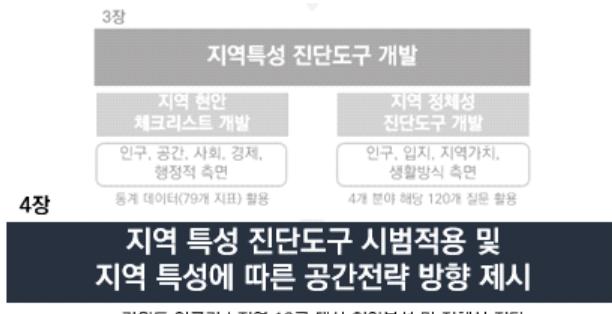
본 장에서 제안하는 지역 특성 진단도구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간전략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진단체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강원도 12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진단도구를 적용 및 분석하여 진단도구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 제4장 진단도구의 시범 적용: 강원도 사례

1. 현안 체크리스트의 시범 적용
2. 지역 Space-MBTI 시범 적용
3. 지역별 세부 진단 결과
4. 소결

본 장에서는 3장에서 개발한 진단도구의 효용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강원도 12개 인구감소지역에 시범 적용하고자 한다. 우선 현안 체크리스트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강원도 12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현안 체크리스트 리포트를 작성한다. 본 장에서는 진단결과 예시로서 그 중 강원도 H군과 강원도 K군을 대상으로 한 현안 체크리스트 시범 적용 결과를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Space-MBTI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며, 별도로 구축한 지역 현안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 및 정체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아울러 진단 결과를 2022년 및 2023년에 각 지역이 제출한 투자계획과 비교해 보고 지역 진단의 필요성과 지역 맞춤형 계획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현안 체크리스트의 시범 적용

### 1) 강원도 12개 인구감소지역 현안 비교

강원도 12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인구, 공간, 경제·사회·행정 관련 지표들을 분석한 결과는 각각 [표 4-1], [표 4-2], [표 4-3]과 같다. 지표값이 20% 이하일 경우 ‘심각’, 20~80%는 ‘보통’, 80% 이상은 ‘양호’로 분류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별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4-1] 강원도 인구 관련 지표분석(12개 인구감소지역)

지표 구분	세부지표	A시	B시	C군	D군	E군	F군	G군	H군	I군	J군	K군	L군
인구 변화	연평균 인구증감률	X	△	△	○	△	△	△	X	X	X	X	○
	전입인구 비율	X	△	△	△	△	X	X	X	△	△	○	△
	전출인구 비율	△	△	△	○	△	○	○	△	X	△	△	△
	천명당 순인구 이동	X	X	△	○	△	△	△	X	X	X	○	○
인구 구성	청년 순이동률	X	X	△	△	X	△	X	△	△	△	X	△
	고령인구 비율	△	△	△	△	△	△	△	△	△	△	△	△
	만명당 유치원 원아 수	X	△	△	X	X	X	△	△	△	△	X	△
	만명당 초등학생 수	△	△	△	X	X	X	△	△	△	△	△	X
인구 특성	신혼부부수 비율	△	△	△	△	X	△	△	○	○	○	○	△
	유아인구 (0~5세) 비율	△	△	△	△	X	X	X	○	△	○	△	X
	평균연령	△	△	△	△	X	X	△	△	△	△	△	X
	합계출산율	△	○	△	△	△	△	○	○	○	○	○	△
인구 특성	1인가구 비율	△	X	△	△	△	△	X	○	△	△	△	△
	다문화 혼인 비중	○	X	△	△	X	△	○	△	X	△	X	○
	독거노인가구 비율	△	△	△	△	△	△	△	△	△	△	△	△
	인구 천명당 외국인 수	X	△	△	△	X	△	X	△	X	△	○	△

주) 20% 이하는 심각(X), 20%~80%는 보통(△), 80% 이상은 양호(○)로 보았음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2] 강원도 공간 관련 지표분석(12개 인구감소지역)

지표 구분	세부지표	A시	B시	C군	D군	E군	F군	G군	H군	I군	J군	K군	L군
공간 구조	1인당 녹지지역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1인당 주거+ 상업+공업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녹지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지역 면적	△ △	△ △	X	X	X	X	△ △	△ △	X	X	X	X
	도시지역 인구	△ △	△ △	X	X	X	X	△ △	△ △	X	X	X	X
주거 환경	도시지역 인구 비율	△ △	X	X	△ △	X	△ △	△ △	△ △	△ △	△ △	△ △	X
	노후주택 비율	X	△	△	△	△	△	X	△	△	△	△	△
	빈집 비율	△	X	△	△	△	X	△	△	△	△	X	X
도시 인프라	빈집 수	△	△	△	△	○	△	△	○	○	○	○	△
	도로포장률	△	X	△	△	△	X	△	X	X	X	X	X
	상수도보급률	△	△	X	△	X	X	X	△	X	X	△	△
	하수도보급률	△	△	△	X	△	△	△	△	X	△	△	△
	대학교학생 수	△	△	X	△	△	X	X	X	X	X	△	X
교육 인프라	만명당 유치원 수	X	X	△	△	△	△	△	X	△	△	△	△
	만명당 초등학교 수	△	△	△	△	△	△	△	△	△	△	△	△
문화·복지 인프라	유아천명당 보육시설 수	△	○	○	△	△	△	△	X	△	△	X	X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	△	△	△	△	△	△	△	△	△	△	△
	문화기반시설 수	△	△	△	X	○	△	△	X	X	△	△	X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	△	△	△	○	○	○	△	○	○	○	△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	△	○	○	△	△	△	△	○	△	△	△
안전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병상 수	△	X	△	X	△	X	X	X	X	X	-	-
	요양기관 수	X	△	△	X	X	X	X	X	X	X	X	X
	인구 십만명당 요양기관 수	△	△	△	△	△	△	△	△	△	X	△	X
	교통사고	X	X	X	△	○	△	△	△	○	△	△	△
	화재	X	X	X	X	△	△	○	○	X	X	△	△
범죄	범죄	△	△	△	△	△	X	△	X	△	△	X	X
	생활안전	X	X	△	△	△	X	△	△	△	O	X	X
	감염병	X	X	△	△	△	△	X	X	○	○	△	X

주) 20% 이하는 심각(X), 20%~80%는 보통(△), 80% 이상은 양호(○)로 보임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3] 강원도 경제·사회·행정 관련 지표분석(12개 인구감소지역)

지표 구분	세부지표	A시	B시	C군	D군	E군	F군	G군	H군	I군	J군	K군	L군
고용	고용률	△	△	○	△	○	△	○	△	○	○	○	△
	취업자 수	X	△	△	△	X	X	X	X	X	X	X	X
	거주지내 통근 취업자 비율	△	△	○	△	△	○	○	○	○	○	△	△
	거주지외 타지역 통근 취업자 비율	△	△	X	△	△	X	X	X	X	X	△	△
	경제활동 참가율	△	△	○	△	○	○	○	△	○	○	○	△
	상용직 비중	△	X	X	X	X	△	X	X	X	X	X	X
	실업률	△	○	△	△	○	△	○	○	○	△	△	△
	전체산업 종사자수	X	△	△	△	X	△	△	X	X	X	X	X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	△	△	△	△	△	○	△	△	△	△	○	○
	청년고용률	△	X	X	△	△	X	△	X	△	△	○	△
사업체	사업체 수	X	△	△	X	X	△	X	X	X	X	X	X
	천명당 사업체 수	△	△	△	△	△	○	△	△	△	△	○	○
	사업체당 고용규모	△	△	X	△	△	△	X	X	X	X	△	△
	도소매업 사업체 수	△	△	△	X	X	△	X	X	X	X	X	X
	도소매사업체 비율	△	△	X	△	X	X	△	△	X	X	X	X
	도소매업 종사자 수	△	△	△	△	X	△	X	X	X	X	X	X
	서비스업 사업체 수	△	△	△	△	X	△	X	X	X	X	X	△
	서비스사업체 비율	△	△	△	△	△	△	△	△	△	△	△	○
	제조업 사업체 수	X	X	△	△	X	X	X	X	X	X	X	X
	제조업사업체 비율	X	X	△	△	△	X	X	△	X	△	△	△
삶의 질	제조업 종사자 수	X	X	△	△	△	X	X	X	X	X	X	X
	제조업종사자 비율	△	△	△	△	△	△	X	△	X	△	△	△
	스트레스 인지율	△	△	X	△	△	△	○	X	△	○	○	○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	○	△	△	△	△	X	○	○	△	△	○
	심민명당 자살률	△	△	△	X	△	△	X	X	X	○	X	X
사회 서비스	인터넷 이용률	X	X	X	X	X	X	X	X	X	X	X	X
	미충족의료율	△	△	X	△	△	X	△	△	△	△	○	△
	보건및사회복지 시업체 비율	△	△	△	△	△	X	X	△	△	X	X	X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종사자 비율	○	△	△	X	X	X	X	△	X	△	○	○
	천명당 사설학원수	△	△	△	△	△	X	X	△	X	X	X	X
행정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X	X	△	X	X	X	X	X	X	X	X	X
	일반회계종 사회복지예산 비중	△	△	△	X	△	X	△	X	X	X	X	X
	재정자립도	△	△	△	△	△	△	△	X	X	X	X	△
	재정자주도	○	○	○	○	○	○	○	○	○	○	○	○

주) 20% 이하는 심각(X), 20%~80%는 보통(△), 80% 이상은 양호(○)로 보았음

출처: 연구진 작성

## 2) 지역별 세부 분석 결과: 강원도 H군

[표 4-4] 강원도 H군 인구 관련 지표분석

지표 구분	세부지표	통계값	상대적 위치 *	지표평가 (수치가 클수록 양호)	
				* 상대적 위치는 하위로, %가 낮을수록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함을 나타냄	
인구 변화	연평균 인구증감률	-0.0173	14.2%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는 일반적인 수준이지만, 내부로 유입되는 인구가 낮습니다. 따라서 순인구 이동과 연평균인구증감률이 심각하게 우려할만한 수준입니다. 지역 내 인구가 감소 중이나, 새로운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적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입인구 비율	9.63	18.6%		
	전출인구 비율	11.96	63.3%		
	천명당 순인구 이동	-23.30	2.2%		
	청년 순이동률	-0.0467	29.2%		
인구 구성	고령인구 비율	23.80	41.2%		대부분의 인구구성 지표들이 양호합니다. 특히 신혼부부수 비율, 합계출산율 등의 지표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출산하는데 좋은 지역일 가능성 이 높습니다.
	만명당 유치원 원아 수	65.30	30.1%		
	만명당 초등학생 수	451.78	52.2%		
	신혼부부수 비율	5.94	88.9%		
	유아인구 (0-5세) 비율	4.24	82.3%		
	평균연령	46.60	42.5%		
	합계출산율	1.394	97.3%		
인구 특성	1인가구 비율	30.30	82.7%		해당 지역은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의 인구특성을 보입니다. 한편, 1인 가구의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다문화 혼인 비중	6.80	43.8%		
	독거노인가구 비율	12.90	39.4%		
인구 구성	인구 천명당 외국인 수	14.07	42.9%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며, 이것이 가능한 인구구조를 보입니다. 자연적 인구증감의 측면에서는 모든 지표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호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지역 외로 전출되는 인구가 적음에도, 점차 가속화되는 고령화와 지역 내로 유입되는 인구가 매우 적어 사회적 인구 이동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을 보입니다. 사회적 인구 유입 또는 관계 인구 확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b>종합 평가 (빨간색: 심각, 파란색: 양호)</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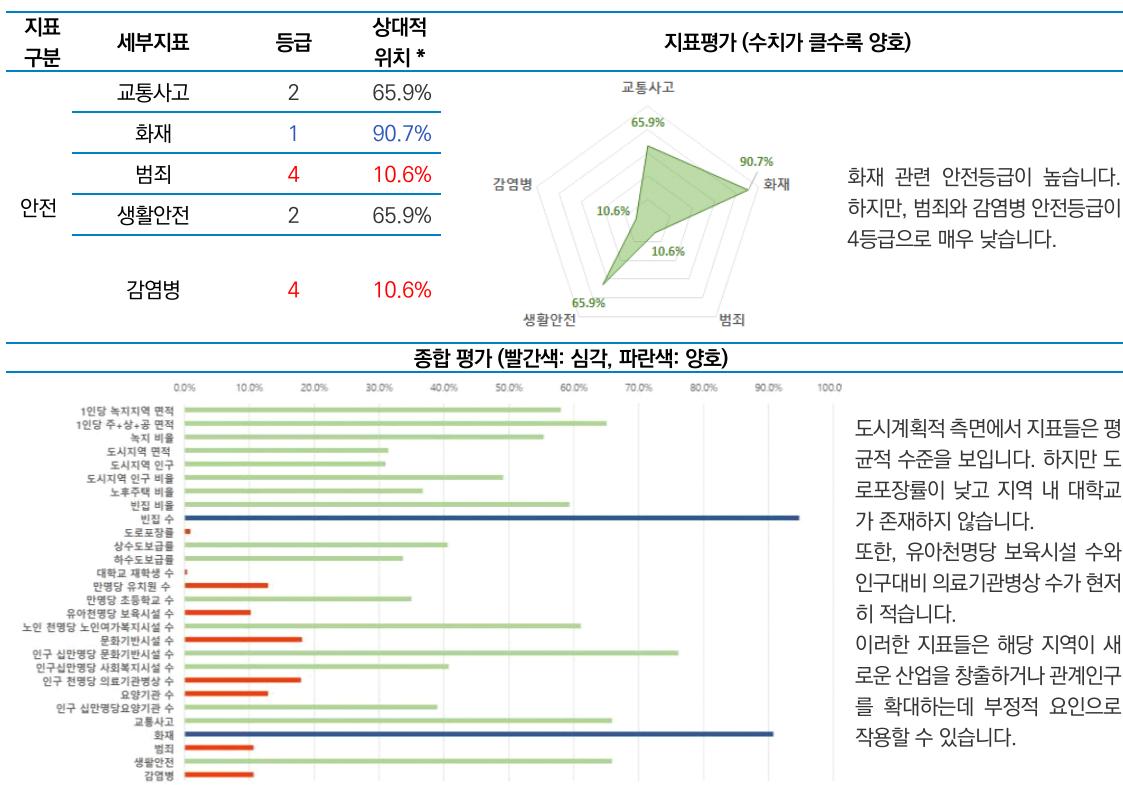
[표 4-5] 강원도 H군 공간 관련 지표분석-1

\* 상대적 위치는 하위로, %가 낮을수록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함을 나타냄

지표 구분	세부지표	통계값	상대적 위치 *	지표평가 (수치가 클수록 양호)
공간 구조	1인당 녹지지역 면적	497.29	58.0%	<p>전반적으로 공간구조 관련 지표들이 일반적인 수준을 나타냅니다.</p>
	1인당 주거+상업+공업 면적	191.33	65.0%	
	녹지 비율	72.22	55.3%	
	도시지역 면적	26,456,700	31.4%	
	도시지역 인구	38,420	31.0%	
	도시지역 인구 비율	88.65	49.1%	
주거 환경	노후주택 비율	33.00	36.7%	<p>주거환경 지표값들은 평균 수준입니다. 빙집 수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p>
	빙집 비율	7.90	59.3%	
	빙집 수	1,335	94.7%	
도시 인프라	도로포장률	70.80	0.9%	<p>도로포장률이 매우 낮습니다. 일부 지역으로의 통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p>
	상수도보급률	93.40	40.5%	
	하수도보급률	83.00	33.6%	
교육 인프라	대학교학생 수	0	0.4%	<p>인구 당 초등학교 수를 제외하고는 대학교 수와 인구 당 유치원, 보육 시설 등 교육인프라 수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p>
	만명당 유치원 수	2.54	12.8%	
	만명당 초등학교 수	3.69	35.0%	
	유아천명당 보육시설 수	13.10	10.2%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 시설 수	9.00	61.1%	
문화· 복지 인프라	문화기반시설 수	7	18.1%	<p>문화·복지 인프라 시설은 문화기반 시설 및 요양기관 수, 인구 당 의료 기관 병상수를 제외하고 양호한 수준입니다.</p>
	인구 실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16.20	76.1%	
	인구 천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15.70	40.7%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7.70	17.9%	
	요양기관 수	65	12.8%	
	인구 실만명당 의료기관 수	15.00	38.9%	
	인구 천명당 노인여가복지 시설 수	9.00	61.1%	
	인구 천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7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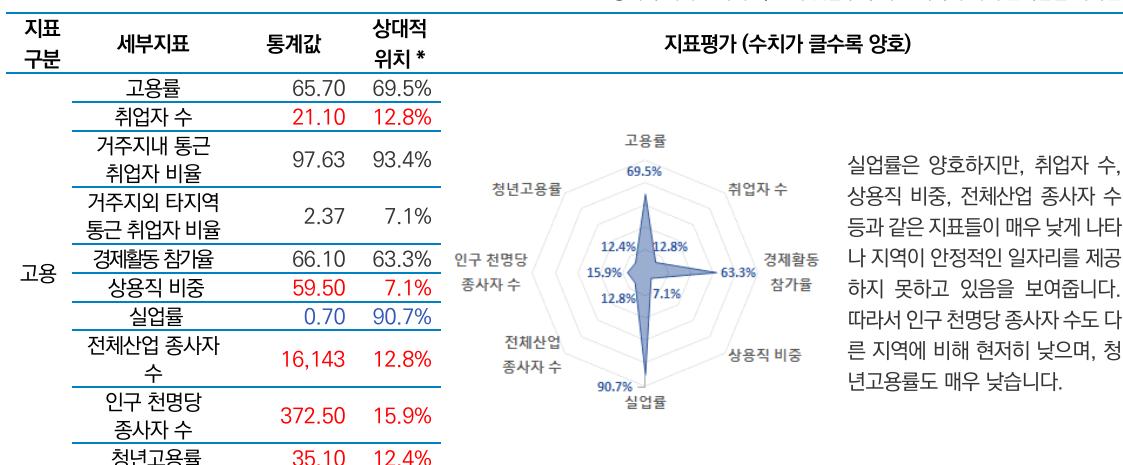
[표 4-6] 강원도 H군 공간 관련 지표분석-2

\* 상대적 위치는 하위로, %가 낮을수록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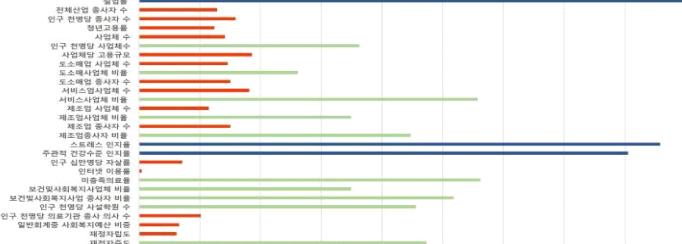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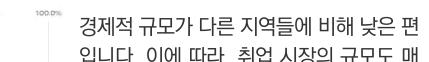
[표 4-7] 강원도 H군 경제·사회·행정 관련 지표분석-1

\* 상대적 위치는 하위로, %가 낮을수록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함을 나타냄



[표 4-8] 강원도 H군 경제·사회·행정 관련 지표분석-2

\* 상대적 위치는 하위로, %가 낮을수록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함을 나타냄

지표 구분	세부지표	통계값	상대적 위치 *	지표평가 (수치가 클수록 양호)
사업체	사업체 수	5,105	14.2%	
	천명당 사업체 수	117.8	36.3%	
	사업체당 고용규모	3.16	18.6%	
	도소매업 사업체 수	1,077	14.6%	
	도소매사업체 비율	21.10	26.1%	
	도소매업 종사자 수	1,963	15.0%	
	서비스업 사업체 수	3,308	18.1%	
	서비스사업체 비율	64.80	55.8%	
	제조업 사업체 수	319	11.5%	
	제조업사업체 비율	6.25	35.0%	
삶의 질	제조업종사자 수	1,818	15.0%	
	제조업종사자 비율	11.26	44.7%	
	스트레스 인지를	20.40	85.8%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를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를	53.40	80.5%	
	심만명당 자살률	43.40	7.1%	
	인터넷 이용률	82	0.4%	
사회 서비스	미충족의료율	4.70	56.2%	
	보건및사회복지 사업체 비율	2.60	35.0%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종사자 비율	10.90	51.8%	
	천명당 사설학원 수	1.20	45.6%	
행정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1.60	10.2%	
	일반회계종 사회복지예산 비중	19.00	6.6%	
	재정자립도	7.20	6.2%	
종합 평가 (빨간색: 심각, 파란색: 양호)	재정자주도	53.30	47.3%	
	고용률 직업선택 비율 경계광장 참가율 상당적 비율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 '청년' 이용률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 사업체 수 사업체당 고용규모 도소매업 사업체 수 도소매업 종사자 수 서비스업 종사자 수 서비스업사업체 수 제조업 사업체 수 제조업 사업체 비율 제조업종사자 비율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를 인구 심만명당 자살률 미충족의료율			
	보건및사회복지체 사업체 비율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일반회계종 사회복지예산 비중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p>경제적 규모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취업 시장의 규모도 매우 작고, 안정적 일자리도 제공하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도 매우 낮게 나타납니다.</p>
				<p>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대한 위험에 처한 계층에 대한 안전장치나 복지가 부족합니다.</p>
				<p>결과적으로 지역 내부 혹은 외부의 사람들에게 경제적 유인 요소가 적습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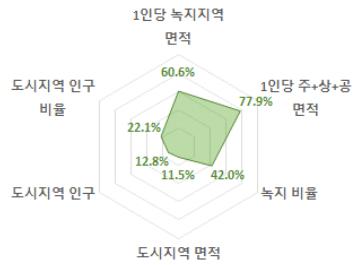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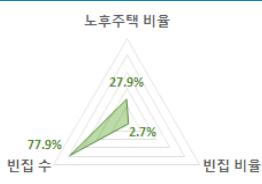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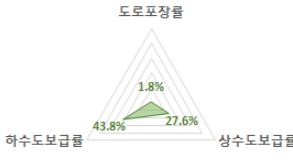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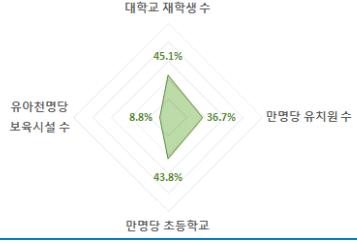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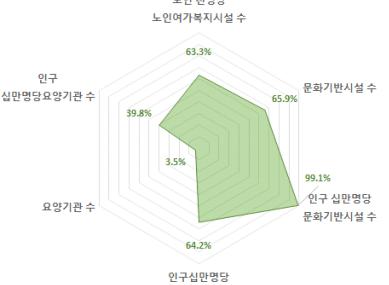
### 3) 지역별 세부 분석 결과: 강원도 K군

[표 4-9] 강원도 K군 인구 관련 지표분석

지표 구분	세부지표	통계값	상대적 위치 *	지표평가 (수치가 클수록 양호)		설명	
				지표평가는 하위로 %가 낮을수록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함을 나타냄			
인구 변화	연평균 인구증감률	-0.0268	1.3%		연평균 인구증감률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는 일반적인 수준이지만, 내부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순인구 이동 지표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인구증감률과 청년 순이동률이 심각하게 우려할만한 수준입니다.	
	전입인구 비율	17.02	94.2%		전입인구 비율	청년 순이동률	
	전출인구 비율	13.97	35.0%		전출인구 비율	천명당 순인구 이동	
	천명당 순인구 이동	30.46	96.5%		천명당 순인구 이동	청년 순이동률	
	청년 순이동률	-0.0897	1.3%		청년 순이동률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 구성	고령인구 비율	30.20	25.2%		고령인구 비율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은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가 낮습니다. 특히, 유치원 원아 수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인구구조를 보입니다.
	만명당 유치원 원아 수	48.81	13.7%		만명당 유치원 원아 수	만명당 초등학생 수	
	만명당 초등학생 수	354.14	22.6%		만명당 초등학생 수	유아인구 (0~5세) 비율	
	신혼부부수 비율	3.56	35.4%		유아인구 (0~5세) 비율	신혼부부수 비율	
	유아인구 (0~5세) 비율	2.58	28.8%		신혼부부수 비율	1인가구 비율	
	평균연령	50.60	25.7%		1인가구 비율	다문화 혼인 비중	
	합계출산율	0.962	68.1%		다문화 혼인 비중	독거노인가구 비율	
	1인가구 비율	38.10	27.0%		독거노인가구 비율	외국인 수	
인구 특성	다문화 혼인 비중	3.20	5.3%		1인가구 비율	다문화 혼인 비중	외국인 수는 매우 많으나 다문화 혼인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1인 가구, 독거노인 비율도 높은 편으로, 경제활동에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고, 가족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하기 어려운 환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거노인가구 비율	16.70	25.2%		다문화 혼인 비중	독거노인가구 비율	
	인구 천명당 외국인 수	43.41	91.6%		독거노인가구 비율	인구 천명당 외국인 수	
	인구 천명당 외국인 수	43.41	91.6%		인구 천명당 외국인 수	인구 천명당 외국인 수	
종합 평가 (빨간색: 심각, 파란색: 양호)							
대부분의 인구지표들이 부정적인 가운데,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외국인의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청년 순이동률과 인구증감률이 낮은 점에서, 한시적 일자리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혹은 고령 노동자의 전입이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4-10] 강원도 K군 공간 관련 지표분석-1

\* 상대적 위치는 하위로, %가 낮을수록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함을 나타냄

지표 구분	세부지표	통계값	상대적 위치 *	지표평가 (수치가 클수록 양호)
공간 구조	1인당 녹지지역 면적	562.20	60.6%	 <p>1인당 녹지지역 면적 1인당 주+상+공 면적 녹지 비율 도시지역 면적 도시지역 인구 도시지역 인구 비율</p> <p>도시지역 인구 비율 도시지역 면적 노후주택 비율 빈집 비율 빈집 수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대학교재학생 수 만명당 유치원 수 만명당 초등학교 수 유아천명당 보육시설 수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 시설 수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병상 수 요양기관 수 인구 십만명당 요양기관 수</p>
	1인당 주+상+공 면적	248.48	77.9%	
	녹지 비율	66.86	42.0%	
	도시지역 면적	12,421,767	11.5%	
	도시지역 인구	14,772	12.8%	
	도시지역 인구 비율	54.21	22.1%	
주거 환경	노후주택 비율	37.50	27.9%	 <p>노후주택 비율 빈집 비율 빈집 수</p>
	빈집 비율	19.30	2.7%	
	빈집 수	2,532	77.9%	
도시 인프 라	도로포장률	74.60	1.8%	 <p>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p>
	상수도보급률	89.90	27.6%	
	하수도보급률	88.80	43.8%	
교육 인프 라	대학교재학생 수	810	45.1%	 <p>대학교재학생 수 만명당 유치원 수 만명당 초등학교 수 유아천명당 보육시설 수</p>
	만명당 유치원 수	4.04	36.7%	
	만명당 초등학교 수	4.77	43.8%	
	유아천명당 보육시설 수	12.80	8.8%	
문화· 복지 인프 라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 시설 수	9.80	63.3%	 <p>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 천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병상 수 요양기관 수 인구 십만명당 요양기관 수</p>
	문화기반시설 수	14	65.9%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51.40	99.1%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22.40	64.2%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병상 수	-	-	
	요양기관 수	41.00	3.5%	
	인구 십만명당 요양기관 수	15.05	39.8%	

[표 4-11] 강원도 K군 공간 관련 지표분석-2

\* 상대적 위치는 하위로, %가 낮을수록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함을 나타냄

지표 구분	세부지표	등급	상대적 위치 *	지표평가 (수치가 클수록 양호)																																																																															
안전	교통사고	3	35.8%	교통사고	전반적으로 안전 등급이 낮은 편입니다. 생활안전과 범죄 등급이 매우 낮습니다. 행정적 여력이 부족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재	3	35.8%	화재																																																																															
	범죄	4	10.6%	범죄																																																																															
	생활안전	5	0.4%	생활안전																																																																															
	감염병	3	35.8%	감염병																																																																															
<b>종합 평가 (빨간색: 심각, 파란색: 양호)</b>																																																																																			
<table border="1"> <tr><th>지표</th><th>설명</th><th>평가는</th></tr> <tr><td>1인당 녹지지역 면적</td><td>1인당 녹지면적</td><td>양호 (파란)</td></tr> <tr><td>1인당 주+상+공 면적</td><td>1인당 주택면적</td><td>양호 (파란)</td></tr> <tr><td>녹지 비율</td><td>도시지역 면적</td><td>양호 (파란)</td></tr> <tr><td>도시지역 면적</td><td>도시지역 인구 비율</td><td>양호 (파란)</td></tr> <tr><td>도시지역 인구 비율</td><td>노후주택 비율</td><td>양호 (파란)</td></tr> <tr><td>노후주택 비율</td><td>빈집 비율</td><td>양호 (파란)</td></tr> <tr><td>빈집 비율</td><td>빈집 수</td><td>양호 (파란)</td></tr> <tr><td>빈집 수</td><td>도로포장률</td><td>양호 (파란)</td></tr> <tr><td>도로포장률</td><td>상수도보급률</td><td>양호 (파란)</td></tr> <tr><td>상수도보급률</td><td>하수도보급률</td><td>양호 (파란)</td></tr> <tr><td>하수도보급률</td><td>대학교 재학생 수</td><td>양호 (파란)</td></tr> <tr><td>대학교 재학생 수</td><td>민영당 유지할 수</td><td>양호 (파란)</td></tr> <tr><td>민영당 유지할 수</td><td>만명당 초등학교 수</td><td>양호 (파란)</td></tr> <tr><td>만명당 초등학교 수</td><td>유아천행당 보육시설 수</td><td>양호 (파란)</td></tr> <tr><td>유아천행당 보육시설 수</td><td>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td><td>양호 (파란)</td></tr> <tr><td>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td><td>문화가변시설 수</td><td>양호 (파란)</td></tr> <tr><td>문화가변시설 수</td><td>인구 실태현행당 분원기반시설 수</td><td>양호 (파란)</td></tr> <tr><td>인구 실태현행당 분원기반시설 수</td><td>인구실태현행당 사회복지시설 수</td><td>양호 (파란)</td></tr> <tr><td>인구실태현행당 사회복지시설 수</td><td>요양기관 수</td><td>양호 (파란)</td></tr> <tr><td>요양기관 수</td><td>인구 실태현행당 요양기관 수</td><td>양호 (파란)</td></tr> <tr><td>인구 실태현행당 요양기관 수</td><td>교통사고</td><td>양호 (파란)</td></tr> <tr><td>교통사고</td><td>화재</td><td>양호 (파란)</td></tr> <tr><td>화재</td><td>범죄</td><td>양호 (파란)</td></tr> <tr><td>범죄</td><td>생활안전</td><td>양호 (파란)</td></tr> <tr><td>생활안전</td><td>감염병</td><td>양호 (파란)</td></tr> </table>						지표	설명	평가는	1인당 녹지지역 면적	1인당 녹지면적	양호 (파란)	1인당 주+상+공 면적	1인당 주택면적	양호 (파란)	녹지 비율	도시지역 면적	양호 (파란)	도시지역 면적	도시지역 인구 비율	양호 (파란)	도시지역 인구 비율	노후주택 비율	양호 (파란)	노후주택 비율	빈집 비율	양호 (파란)	빈집 비율	빈집 수	양호 (파란)	빈집 수	도로포장률	양호 (파란)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양호 (파란)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양호 (파란)	하수도보급률	대학교 재학생 수	양호 (파란)	대학교 재학생 수	민영당 유지할 수	양호 (파란)	민영당 유지할 수	만명당 초등학교 수	양호 (파란)	만명당 초등학교 수	유아천행당 보육시설 수	양호 (파란)	유아천행당 보육시설 수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양호 (파란)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문화가변시설 수	양호 (파란)	문화가변시설 수	인구 실태현행당 분원기반시설 수	양호 (파란)	인구 실태현행당 분원기반시설 수	인구실태현행당 사회복지시설 수	양호 (파란)	인구실태현행당 사회복지시설 수	요양기관 수	양호 (파란)	요양기관 수	인구 실태현행당 요양기관 수	양호 (파란)	인구 실태현행당 요양기관 수	교통사고	양호 (파란)	교통사고	화재	양호 (파란)	화재	범죄	양호 (파란)	범죄	생활안전	양호 (파란)	생활안전	감염병	양호 (파란)
지표	설명	평가는																																																																																	
1인당 녹지지역 면적	1인당 녹지면적	양호 (파란)																																																																																	
1인당 주+상+공 면적	1인당 주택면적	양호 (파란)																																																																																	
녹지 비율	도시지역 면적	양호 (파란)																																																																																	
도시지역 면적	도시지역 인구 비율	양호 (파란)																																																																																	
도시지역 인구 비율	노후주택 비율	양호 (파란)																																																																																	
노후주택 비율	빈집 비율	양호 (파란)																																																																																	
빈집 비율	빈집 수	양호 (파란)																																																																																	
빈집 수	도로포장률	양호 (파란)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양호 (파란)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양호 (파란)																																																																																	
하수도보급률	대학교 재학생 수	양호 (파란)																																																																																	
대학교 재학생 수	민영당 유지할 수	양호 (파란)																																																																																	
민영당 유지할 수	만명당 초등학교 수	양호 (파란)																																																																																	
만명당 초등학교 수	유아천행당 보육시설 수	양호 (파란)																																																																																	
유아천행당 보육시설 수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양호 (파란)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문화가변시설 수	양호 (파란)																																																																																	
문화가변시설 수	인구 실태현행당 분원기반시설 수	양호 (파란)																																																																																	
인구 실태현행당 분원기반시설 수	인구실태현행당 사회복지시설 수	양호 (파란)																																																																																	
인구실태현행당 사회복지시설 수	요양기관 수	양호 (파란)																																																																																	
요양기관 수	인구 실태현행당 요양기관 수	양호 (파란)																																																																																	
인구 실태현행당 요양기관 수	교통사고	양호 (파란)																																																																																	
교통사고	화재	양호 (파란)																																																																																	
화재	범죄	양호 (파란)																																																																																	
범죄	생활안전	양호 (파란)																																																																																	
생활안전	감염병	양호 (파란)																																																																																	

[표 4-12] 강원도 K군 경제·사회·행정 관련 지표분석-1

\* 상대적 위치는 하위로, %가 낮을수록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함을 나타냄

지표 구분	세부지표	통계값	상대적 위치 *	지표평가 (수치가 클수록 양호)	
고용	고용률	70.50	85.4%	고용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과 같은 대표적 고용지표들은 양호하지만, 취업자 수, 상용직 비중, 전체 산업 종사자 수 등과 같은 지표들이 매우 낮게 나타나 지역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타 지역으로 출근하는 사람의 비율도 높습니다. 하지만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와 청년고용률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일자리는 많으나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일자리는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업자 수	17.30	8.4%	취업자 수	
	거주지내 통근	88.4	61.1%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비율	11.56	39.4%	상용직 비중	
	거주지외 타지역 통근 취업자 비율	71.30	85.4%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46.30	1.8%	전체산업 종사자 수	
	상용직 비중	1.20	77.4%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	
	실업률	15,545	11.5%	전체산업 종사자 수	
	전체산업 종사자 수	570.50	81.0%	청년고용률	
	인구 천명당 종사자 수	57.50	96.9%	청년고용률	

[표 4-13] 강원도 K군 경제·사회·행정 관련 지표분석-2

\* 상대적 위치는 하위로, %가 낮을수록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함을 나타냄

지표 구분	세부지표	통계값	상대적 위치 *	지표평가 (수치가 클수록 양호)
사업 체	사업체 수	4,365	8.8%	
	천명당 사업체 수	160.20	88.9%	
	사업체당 고용규모	3.56	46.0%	
	도소매업 사업체 수	807	7.5%	
	도소매사업체 비율	18.49	8.8%	
	도소매업 종사자 수	1,457	8.4%	
	서비스업 사업체 수	2,759	13.3%	
	서비스사업체 비율	63.21	51.8%	
	제조업 사업체 수	266	8.0%	
	제조업사업체 비율	6.09	33.2%	
삶의 질	제조업 종사자 수	1,170	8.8%	
	제조업종사자 비율	7.53	31.0%	
	스트레스 인지율	15.70	97.8%	
삶의 질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50.20	67.3%	
	심만명당 자살률	55.90	0.4%	
사회 서비 스	인터넷 이용률	82	0.4%	
	미종족의료율	2.10	94.2%	
	보건및사회복지사 업 비율	1.70	3.5%	
	보건및사회복지사 업 종사자 비율	17.20	93.8%	
	천명당 사설학원 수	0.40	3.5%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1.00	0.4%	
	일반회계중 사회복지예산 비중	17.80	3.5%	
	재정자립도	8.10	11.9%	
	재정자주도	54.60	54.0%	
	종합 평가 (빨간색: 심각, 파란색: 양호)			

## 2. 지역 Space-MBTI 시범 적용

### 1) 지역 Space-MBTI 시범적용 개요

#### □ 데이터 집계

시범 적용 대상은 강원도 기초지자체 18개 지역 중 12개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388명, 공무원 101명 총 4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유형 지표는 125개 체크리스트(속성 질문 5개, 진단 지표 질문 120개)로 구성된 질문지 형태로 설문조사를 2023년 6월에 1개월 동안 진행하였다. 조사결과는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응답 샘플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태백(35개), 삼척(57개), 홍천(53개), 횡성(43개), 영월(35개), 평창(48개), 정선(32개), 철원(31개), 화천(31개), 양구(28개), 고성(26개), 양양(25개)로 총 444개 샘플이 반영되었으며, 전체 489개 샘플 중 45개 응답은 공무원 그룹 중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시 및 인제군에 해당하여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표 4-14] 사례 분석 지역 분석 데이터 개요

구분	출처(조사 기간)	세부 내용 및 활용
현안 체크리스트	국가통계포털 (‘21, ‘22년 통계자)	- 인구감소지역 관련 지표: 인구감소 및 소멸지역 관련된 주요 지표의 척도에 따른 지역 특징의 시나리오 설정에 활용
지역주민 대상 Space-MBTI	건축공간연구원 (2023.06.)	- 강원도 지역별 주민 설문(388명): 12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된 조사로, 기획 설계된 유형 지표(Toolkit)의 질문에 대해 현시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진단 지표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활용
공무원 대상 Space-MBTI	강원발전연구원 (2023.06.)	- 강원도 지역별 공무원 설문(101명): 강원도 18개 전체 시군구의 재직 및 관련 업무 공무원에 실행된 조사로,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구에 55% 정도로 할당되었으며 주민 대상 정성분석과 동일한 프로세스에 활용

출처: 연구진 작성

#### □ 척도 구분

지역 Space-MBTI의 결과 분석을 위한 척도를 [표 4-15]와 같이 3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각각의 차이점을 반영한 최종 진단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모든 응답을 긍정 배점으로 하는 척도1과 응답자의 최종 응답을 선택하는 척도2, 긍정과 부정 응답에 대한 배점을 각각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적용한 척도3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척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지역은 해당 지표에 대한 해석을 추가하여 최종 진단 결과를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척도1을 적용한 결과를 기본으로 척도2, 3의 도출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광역 지역 평균값을 기준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지역의 특징을 부각하고자 하였으며, 각 척도 적용은 As-is 문항과 To-be 문항에 모두 적용하여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적용 척도별, 응답 그룹별, 그리고 문항 그룹(As-is, To-be)에 따라 각각 도출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량 데이터에 기반한 특징을 비교하고, 최종적으로 지역에서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계획서의 지역 특성 반영도를 비교하였다. 이 경우, 적용한 최종 진단 결과는 현황 진단(As-is)을 기준으로 반영하였다.

[표 4-15] 데이터 분석 방법 및 상세

구분	배점 방법	척도 범위	척도별 차이
척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 문항에 따른 1~7점 배점하여 응답자별 합산 점수의 평균값</li> <li>도출 : 매우 그렇다(7점)/대체로 그렇다(6점)/다소 그렇다(5점)/보통이다(4점)/별로 아니다(3점)/ 대체로 아니다(2점)/전혀 아니다(1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단항목별(문항수)</li> <li>- As-is(10문항) : 10~70점</li> <li>- To-be(5문항) : 5~35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 자체를 배점화하여, 분석 적용에 용이하며, 1차 가공없이 바로 통계 분석에 적용 가능</li> <li>- 부정 응답에 대한 긍정 배점으로 항목별 배점 차이를 최소화</li> </ul>
척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척도1에 따른 평가 후 응답자별 진단결과에 대한 재평가(1인당 항목별 1점)</li> <li>도출 : E 배점 총점과 I 배점 총점을 비교해 높은 배점 항목에 최종 1점을 부여.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에서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진단 항목별(응답자수)</li> <li>- As-is : 최대 25~57점</li> <li>- To-be : 최대 25~57점 (강원도 전체의 경우, 최대 489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척도1에 대한 2차 평가로, 척도1의 결과를 검증하는 Tool로 활용 용이</li> <li>- 응답 pool이 충분할 경우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으나, 응답수가 부족한 그룹의 활용 및 해석의 어려움 존재</li> </ul>
척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 문항에 따른 -3~3점 배점하여 응답자별 합산 점수의 평균값</li> <li>도출 : 매우 그렇다(3점)/대체로 그렇다(2점)/다소 그렇다(1점)/보통이다(0점)/별로 아니다(-1점)/ 대체로 아니다(-2점)/ 전혀 아니다(-3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단항목별(문항수)</li> <li>- As-is(10문항) : -30~30점</li> <li>- To-be(5문항) : -15~15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척도1의 대안으로, 부정 응답에 대한 마이너스 배점으로 긍정과 부정 응답에 따른 차이 비교 가능</li> </ul>

출처: 연구진 작성

## 2) 강원도 분석 결과

### □ 지역 Space-MBTI: 전체적으로는 ENFP 진단 도출

강원도 소재 주민 388명 및 공무원 101명 대상으로 진단 도구를 통한 조사 및 데이터 분석 결과 강원도 전체의 경우, [그림 4-1]과 같이 Space MBTI가 ENFP로 도출되었다. 이는 외부 생활인구에 대한 니즈가 강하고(E) 자연적 요소가 풍부하며(N), 미래산업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며(F) 물리적 개발 및 투자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이고 콘텐츠적 투자(P)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1] 강원도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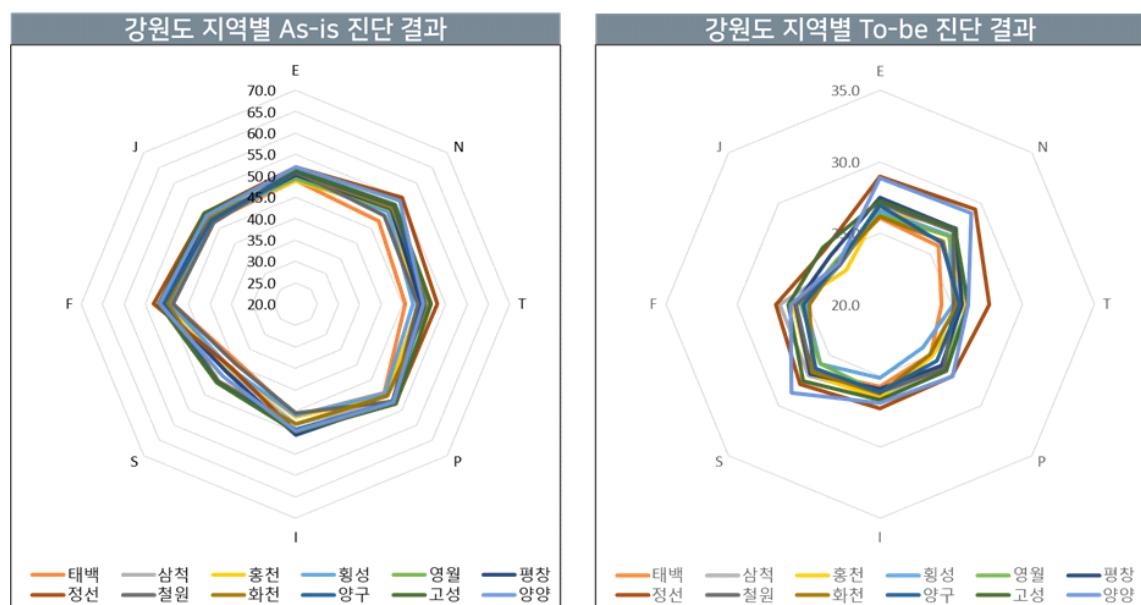
진단 항목에서 현재(As-is)와 미래(To-be)에 대한 인식 조사를 구별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S'항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경제적 및 산업적 요소에 대한 부족과 니즈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별 진단 결과는 앞서 도출한 최종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정량적 현안 데이터와 기금사업계획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척도3을 반영한 그래프를 통해 지역 내 응답 그룹의 시각 격차를 통해 개별 이슈를 예상 진단하였다.

### 3) 분석 결과 종합 (척도 1,2,3 적용의 비교)

#### □ 척도1 반영 결과

강원도 내 12개 인구소멸지역의 공간 진단 결과가 모두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10개 문항(문항별 최고 배점 7점, 최저 배점 1점)이 적용된 As-is 진단과 5개 문항(문항별 최고 배점 7점, 최저 배점 1점)이 적용된 To-be 진단을 실시한 강원도 지역 전체 평균은 [그림 4-2]와 같이 도출되었다.

[표 4-16]은 척도1을 반영한 최종 산출 지표를 나타낸 것으로 As-is, To-be 모두 ENFP로 진단된 경우가 다수이다. 철원과 화천의 경우 ENTP로 진단되었으며 화천, 양구, 고성의 As-is, To-be 진단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4-2] 강원도 진단 결과(척도1 반영)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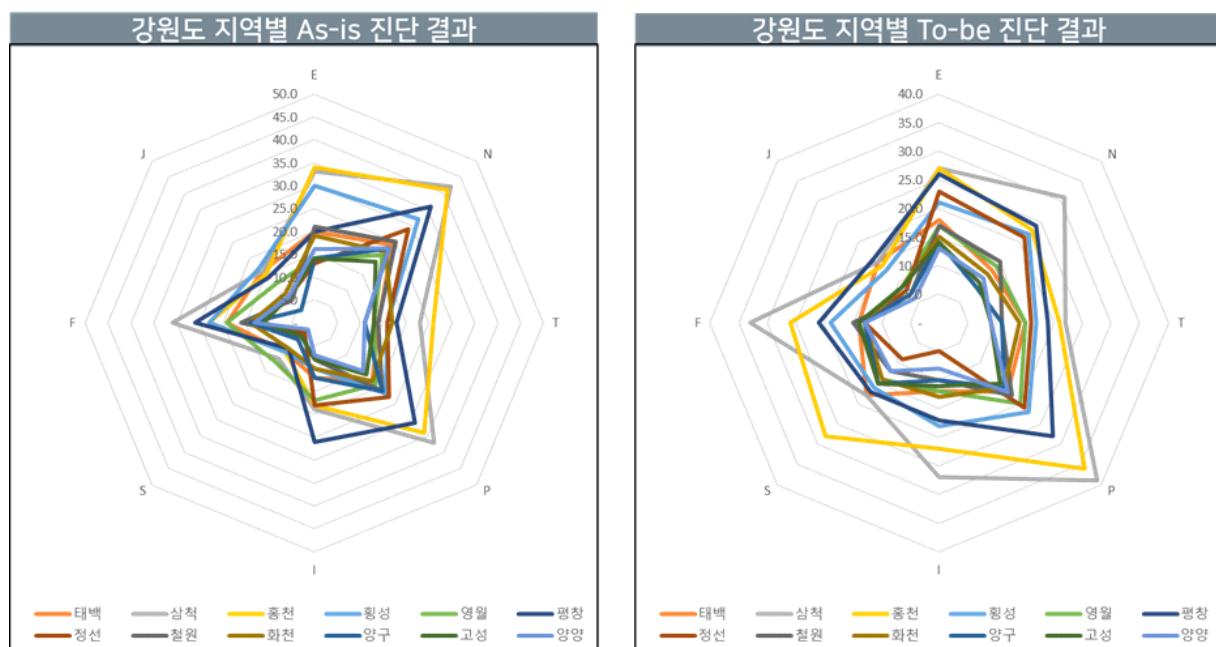
[표 4-16] 강원도 진단 결과(척도1 반영)

태백	E	N	T	P	I	S	F	J
As-is	48.9	47.5	45.6	49.2	46.0	39.1	48.6	47.5
To-be	26.1	25.8	24.3	25.0	25.7	26.7	25.0	24.3
삼척	E	N	T	P	I	S	F	J
As-is	50.0	51.8	48.8	51.9	48.0	42.1	52.1	48.4
To-be	26.6	27.6	25.4	26.3	26.4	27.1	27.0	23.9
홍천	E	N	T	P	I	S	F	J
As-is	48.9	51.1	48.6	50.3	46.3	41.6	49.9	48.3
To-be	26.8	26.8	25.9	25.2	26.6	26.9	26.1	23.4
횡성	E	N	T	P	I	S	F	J
As-is	49.7	50.4	47.4	49.5	45.9	41.3	49.2	47.4
To-be	26.6	26.9	25.1	24.3	25.1	25.9	25.2	24.0
영월	E	N	T	P	I	S	F	J
As-is	49.2	51.4	50.2	52.4	49.8	45.6	51.5	49.4
To-be	26.3	26.8	26.2	26.3	26.2	25.9	25.6	24.4
평창	E	N	T	P	I	S	F	J
As-is	50.2	51.5	49.2	52.1	50.6	42.7	51.4	48.2
To-be	27.5	27.5	25.8	26.1	25.9	26.9	25.9	24.9
정선	E	N	T	P	I	S	F	J
As-is	52.0	55.1	53.1	52.8	49.9	41.0	53.2	50.1
To-be	28.9	29.4	27.6	27.1	27.3	27.9	27.3	25.5
철원	E	N	T	P	I	S	F	J
As-is	50.9	49.3	48.55	52.0	45.4	39.7	48.52	46.9
To-be	27.1	27.2	25.2	26.3	26.1	26.7	25.8	24.0
화천	E	N	T	P	I	S	F	J
As-is	50.7	51.8	51.3	50.3	47.9	45.4	49.8	48.2
To-be	26.19	26.3	25.4	25.0	26.23	26.7	24.9	24.2
양구	E	N	T	P	I	S	F	J
As-is	51.0	52.6	50.1	52.3	49.3	45.7	50.7	47.7
To-be	26.9	26.1	25.6	25.6	26.1	26.3	25.4	24.1
고성	E	N	T	P	I	S	F	J
As-is	51.2	53.0	51.7	53.0	49.8	45.8	51.9	50.2
To-be	27.3	27.4	26.2	26.6	26.7	27.6	26.4	25.7
양양	E	N	T	P	I	S	F	J
As-is	52.0	54.3	49.8	52.3	49.6	43.8	51.8	49.2
To-be	28.8	29.0	26.16	27.2	26.9	28.7	26.24	24.1

출처: 연구진 작성

## □ 척도2 반영 결과

척도2를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최종 진단 결과 변화에는 영향이 거의 없으나, 응답자의 최종 진단 방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단, 지역별로 응답자 모수가 적은 경우, 그래프 영역이 축소되어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가 동일한 응답을 한 경우(E 항목 응답 평균값 = I 항목 응답 평균값)에는 해당 응답은 지표 산출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하여, 지역별 최종 응답자 수 대비 지표 산출 결과(척도2)가 작은 수치를 나타냈다. 척도2를 반영한 결과는 척도1의 결과를 재검증하는 용도로 활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3] 강원도 진단 결과(척도2 반영)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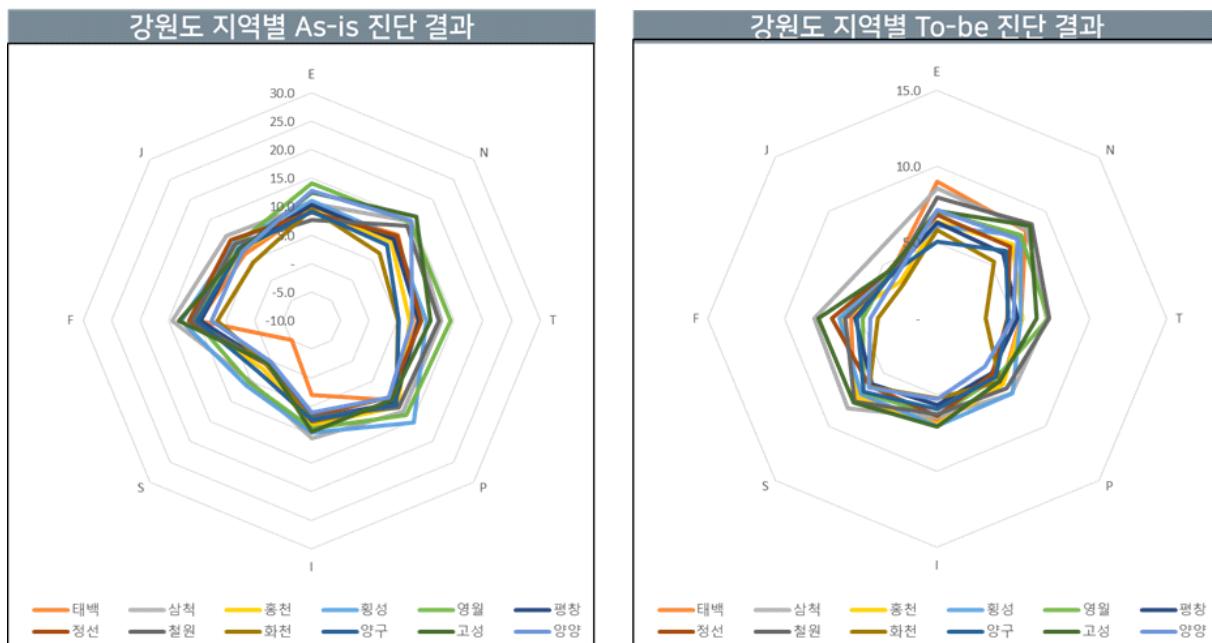
[표 4-17] 강원도 진단 결과(척도2 반영)

태백	E	N	T	P	I	S	F	J
As-is	20.0	24.0	14.0	18.0	12.0	9.0	19.0	16.0
To-be	18.0	13.0	15.0	17.0	12.0	18.0	14.0	15.0
삼척	E	N	T	P	I	S	F	J
As-is	33.0	42.0	23.0	37.0	19.0	11.0	31.0	16.0
To-be	27.0	31.0	22.0	39.0	27.0	18.0	33.0	15.0
홍천	E	N	T	P	I	S	F	J
As-is	34.0	41.0	26.0	34.0	18.0	9.0	23.0	15.0
To-be	27.0	23.0	21.0	36.0	22.0	28.0	26.0	14.0
횡성	E	N	T	P	I	S	F	J
As-is	30.0	32.0	16.0	22.0	10.0	9.0	23.0	17.0
To-be	21.0	22.0	17.0	22.0	18.0	16.0	19.0	13.0
영월	E	N	T	P	I	S	F	J
As-is	14.0	21.0	13.0	19.0	17.0	12.0	19.0	12.0
To-be	17.0	14.0	15.0	20.0	12.0	14.0	14.0	9.0
평창	E	N	T	P	I	S	F	J
As-is	20.0	36.0	18.0	31.0	26.0	8.0	26.0	14.0
To-be	26.0	24.0	19.0	28.0	17.0	17.0	21.0	16.0
정선	E	N	T	P	I	S	F	J
As-is	13.0	29.0	16.0	23.0	18.0	3.0	12.0	8.0
To-be	23.0	21.0	16.0	21.0	5.0	9.0	13.0	8.0
철원	E	N	T	P	I	S	F	J
As-is	21.0	25.0	14.0	21.0	8.0	4.0	16.0	7.0
To-be	17.0	15.0	11.0	18.0	10.0	12.0	15.0	7.0
화천	E	N	T	P	I	S	F	J
As-is	19.0	22.0	17.0	18.0	10.0	8.0	14.0	9.0
To-be	15.00	12.0	14.0	16.0	13.00	14.0	13.0	9.0
양구	E	N	T	P	I	S	F	J
As-is	14.0	23.0	11.0	21.0	12.0	5.0	14.0	4.0
To-be	14.0	9.0	11.0	16.0	10.0	15.0	13.0	7.0
고성	E	N	T	P	I	S	F	J
As-is	14.0	19.0	13.0	16.0	8.0	4.0	11.0	8.0
To-be	14.0	10.0	9.0	15.0	11.0	15.0	14.0	9.0
양양	E	N	T	P	I	S	F	J
As-is	16.0	23.0	11.0	15.0	7.0	2.0	13.0	8.0
To-be	13.0	11.0	9.00	17.0	8.0	12.0	13.00	6.0

출처: 연구진 작성

## □ 척도3 반영 결과

척도3은 척도1의 대안으로, 긍정 응답은 플러스 배점(1~3점)으로 부정 응답은マイ너스 배점(-3~-1)으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응답은 '0'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척도 1과 유사한 패턴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일부 지표의 진단 결과가 변경되었으며, 진단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해주는 패턴이 도출되었다.



[그림 4-4] 강원도 진단 결과(척도3 반영)

출처: 연구진 작성

[표 4-18] 강원도 진단 결과(척도3 반영)

태백	E	N	T	P	I	S	F	J
As-is	9.7	11.3	8.4	9.7	3.1	-5.1	9.7	6.5
To-be	9.0	8.2	5.5	6.0	6.8	7.6	5.6	4.3
삼척	E	N	T	P	I	S	F	J
As-is	10.5	14.6	12.7	12.6	10.6	5.1	14.4	11.0
To-be	8.6	8.3	7.2	6.9	6.5	8.3	8.0	5.9
홍천	E	N	T	P	I	S	F	J
As-is	9.4	9.7	7.2	11.4	8.3	2.0	10.6	7.4
To-be	6.4	6.9	5.6	6.1	6.9	7.3	6.2	3.4
횡성	E	N	T	P	I	S	F	J
As-is	11.1	10.6	10.1	15.2	9.7	6.2	12.7	9.3
To-be	6.1	7.7	5.5	7.0	7.0	7.0	6.4	4.4
영월	E	N	T	P	I	S	F	J
As-is	14.1	14.4	14.3	13.4	8.9	5.4	10.2	8.7
To-be	7.0	7.8	7.3	5.5	6.4	6.8	4.9	4.5
평창	E	N	T	P	I	S	F	J
As-is	10.3	10.3	8.8	10.5	7.2	0.8	9.4	7.9
To-be	6.3	6.1	5.3	5.1	5.7	6.1	5.3	4.2
정선	E	N	T	P	I	S	F	J
As-is	9.0	11.2	9.3	9.2	6.8	1.0	11.5	10.0
To-be	6.8	6.7	4.6	5.1	6.4	6.3	6.9	4.5
철원	E	N	T	P	I	S	F	J
As-is	7.7	13.5	12.2	11.6	6.8	0.9	10.8	9.1
To-be	8.0	8.7	7.3	6.5	6.3	7.7	6.0	4.1
화천	E	N	T	P	I	S	F	J
As-is	9.5	6.7	5.1	11.0	7.7	1.1	6.5	4.5
To-be	5.8	5.3	3.2	5.8	5.2	6.3	3.9	3.2
양구	E	N	T	P	I	S	F	J
As-is	9.2	8.7	5.3	10.9	7.4	3.0	10.0	7.7
To-be	5.1	6.3	4.7	5.4	5.9	6.8	5.3	4.2
고성	E	N	T	P	I	S	F	J
As-is	12.5	15.8	10.8	9.7	9.5	0.7	13.2	7.6
To-be	7.1	8.6	6.5	5.8	7.1	7.8	7.8	4.4
양양	E	N	T	P	I	S	F	J
As-is	12.8	14.7	7.6	9.2	6.1	0.2	7.5	7.2
To-be	7.1	7.4	5.0	4.4	5.3	6.4	4.4	3.8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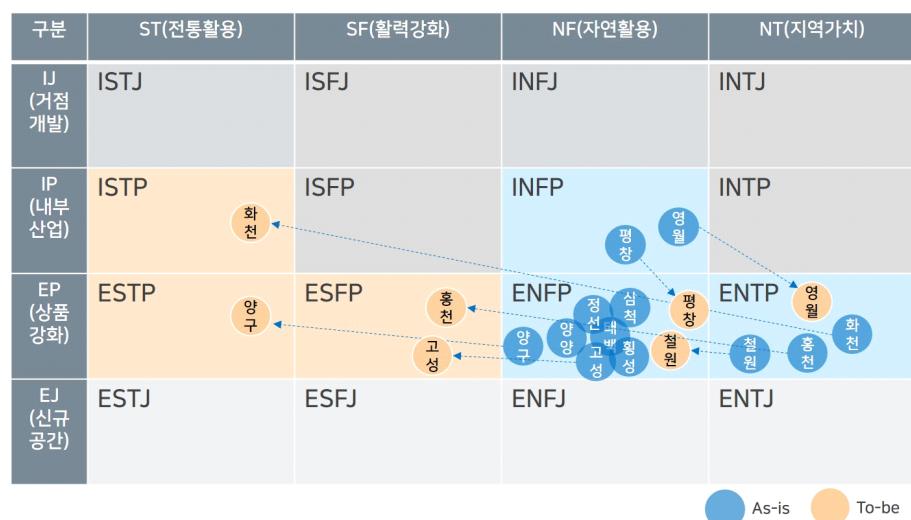
## 4) 최종 진단 결과

### □ 척도별 진단 결과 종합 및 최종 진단

척도1, 2, 3을 모두 적용한 결과, 모든 척도에서 같은 진단 결과가 도출된 지역(태백, 횡성, 양구)과 척도 2가지에서 같은 결과를 도출한 지역(삼척, 홍천, 영월, 평창, 철원, 화천, 고성, 양양), 그리고 척도 3가지가 모두 다른 결과로 도출된 지역(정선)으로 구분되었다. 척도 2가지 이상에서 동일한 진단 결과가 도출된 지역은 다수의 진단 결과를 적용한다. 정선의 경우, 척도1을 적용한 결과를 적용(강원도 전체 평균과 같은 결과)하되, 척도 2, 3에 따른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정선은 경우, 다른 지역과는 차별적인 특징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 □ 방향성 진단(척도1 기준)

지역별 개발 방향성 진단을 위해 척도1 기준 As-is 진단 결과와 To-be 진단 결과를 분류한 결과 [그림 4-5]와 같은 방향성을 보이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자연 및 지역가치를 활용하는 현재 진단에서 전통을 활용하고 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향하되, 신규 공간 보다는 내부 산업 및 콘텐츠형 상품 강화 니즈에 대한 호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5] 강원도 지역 진단 방향성 분석(척도1 반영)

출처: 연구진 작성

### 3. 지역별 세부 진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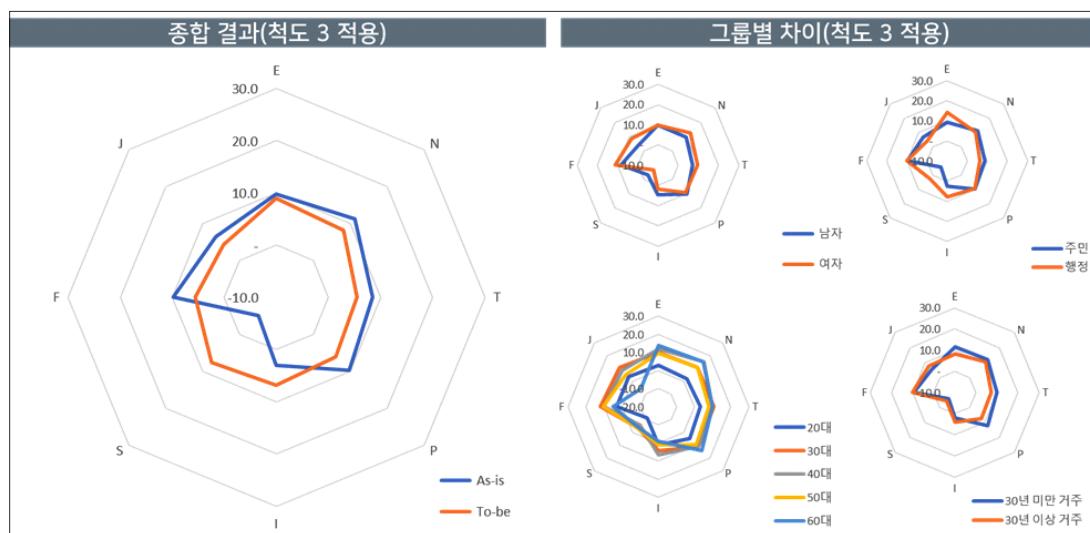
#### ① 태백시

현안 체크리스트에서 분석된 태백시는 전출인구 비율이 높고 다문화 혼인 비율이 높으며, 도시계획적 지표들은 좋은 수준이나, 주거환경이 쇠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산업적 지표 또한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제조업이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9] 태백시 지표 분석

구분	E/I	N/S	T/F	P/J
정량 결과	E 전출인구 비율 높음 I 다문화 혼인 다수	S 도시지표 양호	F 제조업 쇠퇴	J 의료 인프라 부족
정성 결과	E	N	F	P
기금 사업	I 정주환경개선			J 하드웨어 투자(스포츠센터) P 각종 대회 유치
진단 가이드	E 인구 유인 필요	N 자연가치 발굴 및 활용 필요	F 기반 산업 육성, 지원책 필요	P 콘텐츠 기획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4-6] 태백시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출처: 연구진 작성

태백시의 MBTI 진단 결과는 ENFP로, 향후 S와 I에 대한 니즈가 높아, 정주인구와 경제적 산업적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체크리스트와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 팔목한 포인트는 태백시의 다양한 응답 그룹(성별, 연령, 직업, 거주기간)에 따른 응답 편차가 크지 않다

는 점이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태백시가 보유한 자연가치(N)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으며, I 보다는 E(생활인구)에 크게 반응하며, 물리적 사업계획(J)보다는 콘텐츠 기반 투자(P)에 대한 필요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반한 사업계획의 방향성은 외부인구(E)를 목표로 내부 자연가치(N)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적 투자(P)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태백시가 계획한 기금사업은 생활 인프라 조성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하드웨어 투자로 스포츠센터를 조성하고, 이에 기반한 각종 대회 유치로 소프트웨어 투자를 하는 것을 1순위로 기획하였으며, 2순위로 아이키움센터를 건립하는 하드웨어적 투자사업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앞서 태백시 MBTI결과가 다소 상반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태백시 주민들은 외부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자연가치를 활용한 콘텐츠 상품, 즉 관광산업 기획 등에 대한 니즈 진단을 하였으나,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정주인구(I)에 대한 하드웨어 투자(J)를 기획하여, 지역민이 진단한 지역니즈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태백시의 특징은 다른 강원도 내 소멸지역들과 달리 그룹별 차이가 작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기획 및 실행에서 커뮤니티 운영이 순조롭고 방향성을 설정하기 유리한 장점을 보유한 지역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면서 장기로 드맵 설정으로 지역 진단과 사업의 방향성을 매칭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② 삼척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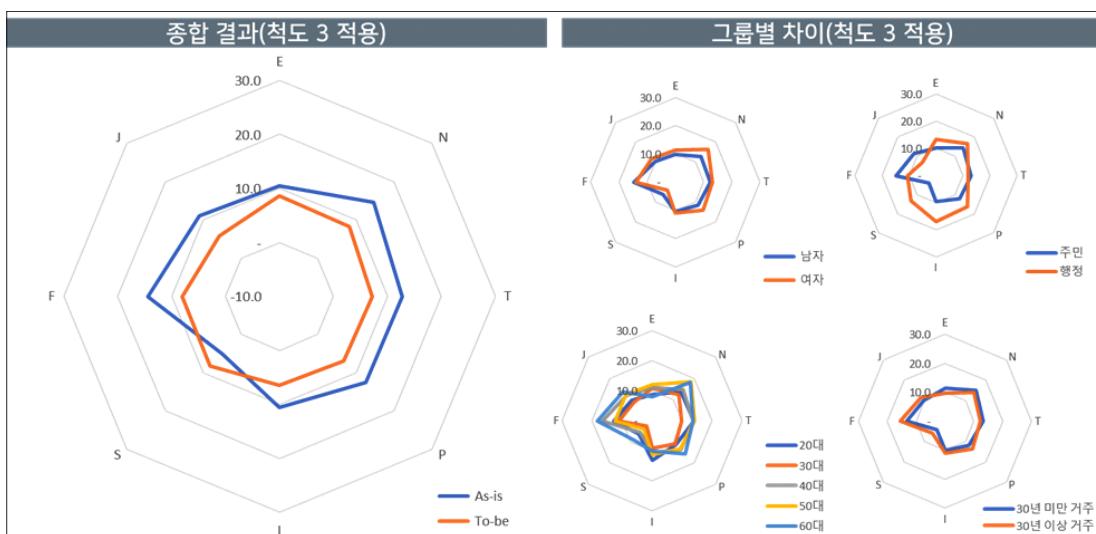
현안 체크리스트에서 분석된 삼척시는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하고 고령화되고 있으나, 외국인 수 비중이 높지 않고 다문화 혼인도 많지 않아 보수적 특징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도시계획적 지표들은 평균수준이나 빙집이나 노후 주택에 대한 상태가 좋지 않으나, 교육이나 문화·복지 지표들은 양호하며, 의료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이슈는 산업 경제적 동력이 부족한 부분으로, 경제적 인구 유입을 위한 동력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삼척시의 MBTI는 ENFP로, 향후 S에 대한 니즈가 높아, 경제적 산업적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체크리스트와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주민과 행정(공무원) 그룹간의 진단 격차가 크다는 부분으로, 행정적 관점에서는 I(정주인구)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주민들의 관점은 E(생활인구)와 I(정주인구)에 대해 유사한 비중으로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그룹에서 자연가치(N)에 대한 인식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었으며, 태백시와 같이 소프트웨어 투자(P)에 대한 니즈가 높았다. 전통적인 요소 보다는 도시적이고 산업적인 성향(F)이 강하다고 진단된다.

[표 4-20] 삼척시 지표 분석

구분	E/I	N/S	T/F	P/J
정량 결과	E 청년인구 유출 심각 I 낮은 비중 외국인	S 도시 지표 양호	F 산업 지표 부족	J 의료 인프라 부족
정성 결과	E	N	F	P
기금 사업			F 수소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J 공원조성, 농공단지 조성 J 휴양지 조성, 도서관 건립
진단 가이드	E 인구 유인 필요	N 자연가치 발굴 및 활용 필요	F 기준 제안 양호	P 콘텐츠 기획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4-7] 삼척시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출처: 연구진 작성

삼척시가 제출한 기금사업은 산업적 하드웨어 투자 및 인프라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1순위는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수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기반으로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 농공단지 조성 등 연계사업을 기획하였다. 2순위 사업으로 도계 미인폭포 관광자원화 사업, 휴양지 조성사업, 도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이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수립된 계획이 확인되었으며, 3순위 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사업인 문화공간 활용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시립도서관 건립사업 등이 기획 및 제출되었다. 이는 앞서 분석된 정량, 정성지표들과 유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적 니즈(F)와 자연환경을 활용한 투자 사업으로 생활인구(E)를 증대하는 방향성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정성적 진단에서 도출된 소프트웨어적 투

자(P)에 대한 콘텐츠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주인구(I)에 대한 기획은 행정적 관점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 ③ 홍천군

홍천군의 현안 체크리스트에서 분석된 주요 인구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유출을 억제할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 및 교육 인프라도 양호한 수준이나, 교육 및 의료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차 산업에 의존하는 산업적 취약점이 확인되었다.

홍천군의 MBTI는 강원도 전체 결과와 동일한 ENFP로 진단되었다. N(자연가치)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To-be) S(경제적 산업적) 니즈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큰 특징은, 주민과 행정(공무원)간의 진단 지표 결과의 차이가 많은 부문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진단 결과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대한 인식 차이는 큰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역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슈를 발생시킬 소지가 큰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가치(T)보다는 산업적 경제적 투자(F)가 적합한 지역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적 투자(P)가 적합한 지역으로 진단되었다. 주민 그룹은 생활인구(E)만큼 정주인구(I)가 중요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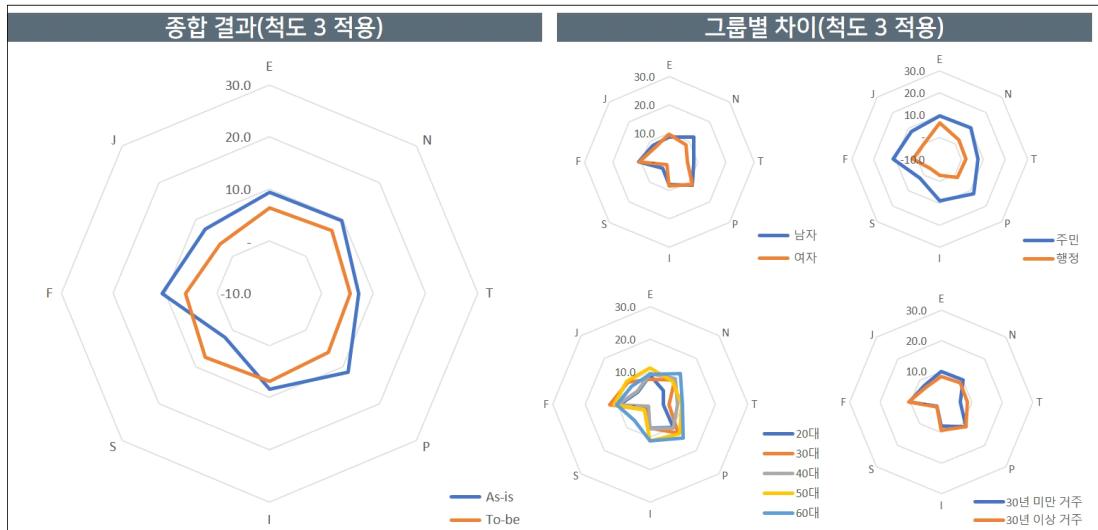
[표 4-21] 홍천군 지표 분석

구분	E/I	N/S	T/F	P/J
정량 결과	I 인구 지표 양호	S 도시지표 양호	F 1차 산업 의존	J 의료 인프라 부족
정성 결과	E	N	F	P
기금 사업			F K바이오 첨단도시 건립	J 첨단도시 지원센터 구축 J 행복 주택 건립
진단 가이드	E 신규 유입 인구 대상 타당	N 자연가치 발굴 및 활용 필요	F 신사업 기획 제안 타당	P 소프트웨어 기획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홍천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K-Bio 첨단도시' 건립의 하드웨어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K-Bio 첨단도시 종합지원센터 구축, 바이오기업 입주공간 조성, 첨단도시 행복주택 건립, 첨단도시 개방형 공원 조성 등 대부분의 기금 사업이 물리적 투자사업으로 기획되어 있어, 정성적 진단 결과인 N(자연가치) 및 P(콘텐츠투자)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주인구(I)에 대한 환경 개선보다는 첨단도시에 입주하는 또 다른 생활인구(E)를 정주인구(I)로 평가한 것으로, 행정의 입장에서는 정주인구가 증가할 수

있으나, 기존 정주인구의 환경개선이나 유출에 대한 고민은 다소 부족한 기금사업으로 평가되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활력인구 정의와 로드맵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8] 홍천군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출처: 연구진 작성

#### ④ 횡성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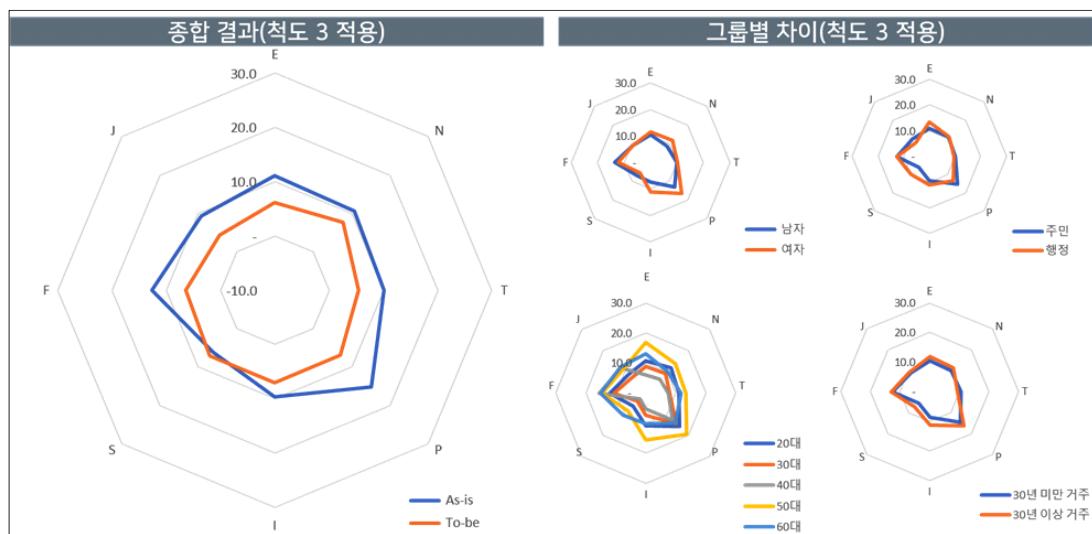
횡성군의 현안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면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인구가 유출되고 있고, 영유아 양육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가 유입되는 이유는 제조업 발달에 기초한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 및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횡성군의 MBTI는 강원도의 다른 지역들과 같이 ENFP로 진단되었다. 다른 강원도 지역들과의 차이는 자연가치(N)에 대한 진단이 강하지 않고, 경제적 산업적 지표(S)에 대한 니즈도 강하지 않다. 이에 반해 관광 상품, 축제 등 콘텐츠적 기획이나 투자(P)에 대한 필요 진단을 모든 그룹에서 강하게 호응하였으며, 인구적 특성 또한 생활인구(E)와 정주인구(I) 모두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룹간 격차가 태백시와 유사하게 아주 작은 지역으로 도출되었다.

[표 4-22] 횡성군 지표 분석

구분	E/I	N/S	T/F	P/J
정량 결과	I 청년 인구 유출 심각 I 영유아 양육 환경 나쁨		F 제조업 중심 경제 기반 조성	J 의료 인프라 낙후
정성 결과	E	N	F	P
기금 사업			F 이모빌리티 사업 활성화 J 복합단지 기반조성사업	
진단 가이드	E 인구 유인책 필요 I 정주인구 환경 개선 필요	N 자연가치 발굴 및 활용 필요	F 기반 산업 육성 및 지원 타당	P 콘텐츠 기획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4-9] 횡성군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출처: 연구진 작성

횡성군의 기금 사업은 기존의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 부품사업을 기초로 이모빌리티(e-Mobility)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복합단지 기반조성사업(중심도로, 공공기관·용지 조성, 일자리 지원센터 구축 등)을 주력으로 이모빌리티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안 체크리스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제조업 기반의 인구 유입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방향으로 생활인구(E)를 정주인구(I)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하드웨어적 투자(J)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현안 체크리스트와 정성 지표와 같이 소프트웨어적 콘텐츠 투자(P)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강원도 지역들과 달리 S(산업)

경제적) 니즈가 높지 않은 것은 이러한 제조업 기반의 현안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이러한 유입이 정착할 수 있는 콘텐츠적 투자기획(P)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⑤ 영월군

영월군의 현안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 대부분의 인구 지표가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외국인 인구 비율도 높지 않아 전형적인 폐쇄적 인구 감소 지역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간적 지표들은 다소 양호하나 생활 인프라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고용 환경 또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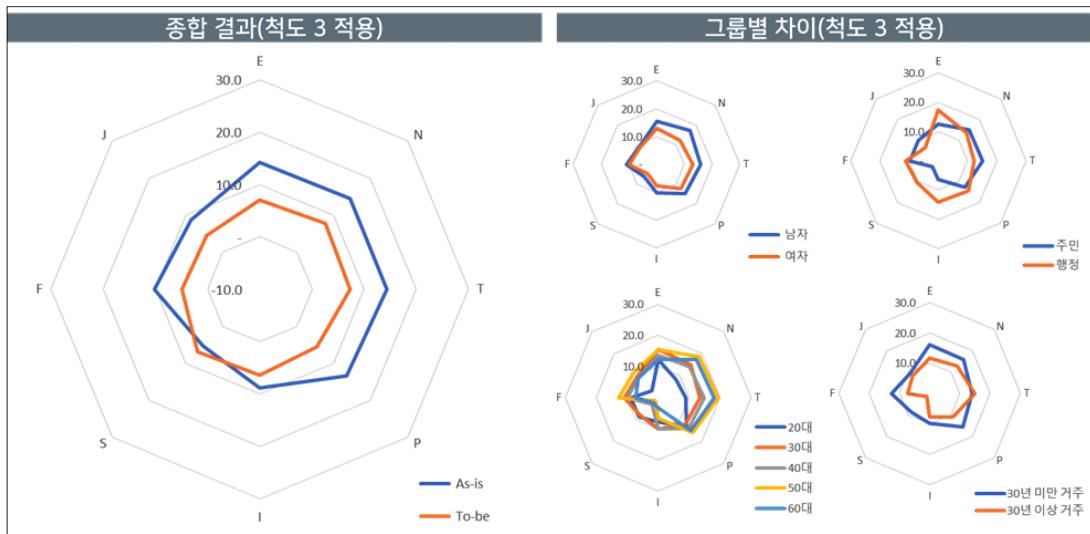
영월군의 MBTI는 INFP로 진단되었다. 지역 내에 자연자원(N)이 있으며, 이에 대한 활용 한 콘텐츠적 투자(P)가 필요하다. 인구(I)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진단되었으며, 영월군은 횡성군과 같이 산업적 경제적 지표(S)에 대한 지향점은 높지 않았다. 그룹간 차이가 다소 발견되었는데, 주민과 행정(공무원) 간의 중요 인구 지표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연령이 진단한 자연가치(N)와 전통 문화유산(T)에 대한 인식이 낮았는데, 이는 젊은 세대에게 이러한 지역가치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다.

영월군이 제출한 기금사업은 ‘청년사업 상상허브’ 건립이라는 일종의 청년 창업센터 건립으로 지역 진단 결과와는 상관없는 물리적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순위 사업은 ‘작은학교 조성’이라는 특성화교육 사업이며, 3순위 사업은 봉래산 전망대 조성 사업 등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 투자 사업이다. 대부분의 기금 사업이 기존의 인프라 사업을 대체한 것으로 보이며, 인구감소 대책으로 진단에 기반한 정주인구 지원책 및 기반산업 육성방안 측면의 사업기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3] 영월군 지표 분석

구분	E/I	N/S	T/F	P/J
정량 결과	I 폐쇄형 인구 감소 심각	S 도시 지표 양호	F 고용 관련 인프라 부족	J 의료 인프라 부족
정성 결과	I	N	F	P
기금 사업	I 청년인구 지원	S 특성화 교육사업		J 청년센터 건립
진단 가이드	I 정주인구 지원책 필요	N 자연가치 발굴 및 활용 필요	F 기반 산업 육성, 지원책 마련 필요	P 콘텐츠 기획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4-10] 영월군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출처: 연구진 작성

#### ⑥ 평창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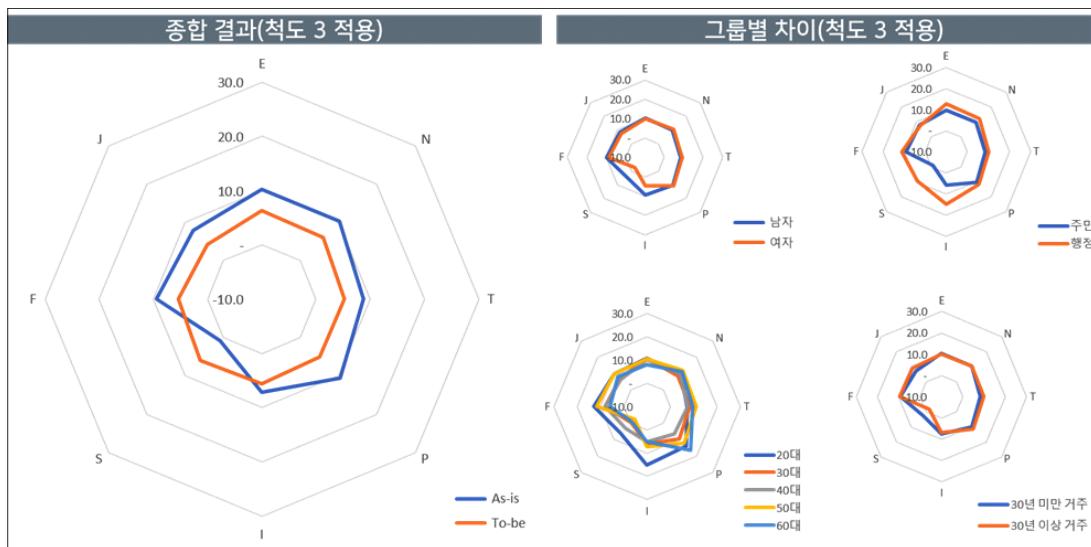
평창군의 현안 체크리스트에서 청년인구 유출과 인구 불균형 심화, 도시 인프라 부족 및 의료 복지 인프라 열악 등이 확인되었다. 인구 대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수가 많고, 낮은 취업자수 및 청년고용률 등이 인구 유출과 연계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규모가 주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2차 및 3차 산업 비중이 낮아 인구 유입 요인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창군의 MBTI 진단 결과는 INFP로 도출되었으나, 척도3 적용 시에는 강원도 전체 결과와 같은 ENFP로 E/I의 지표 간 차이가 크지 않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S(산업 경제적 지표)에 대한 To-be 지향이 확인되었다. 특이한 부분은 주민그룹과 행정(공무원) 그룹간의 인구 지표에 대한 인식으로, 행정 그룹의 정주인구(I)에 대한 지표 인식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령별 그룹간 지표차이도 마찬가지로 정주인구(I)에서 확인되는데, 20대 인구는 정주인구(I)가 지역의 주요 인구적 특성으로 인식하는 데 반하여 다른 30~60대 연령 그룹과 차이를 보였다. 여기서 응답한 20대 응답자들이 대부분 행정(공무원) 그룹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평창군의 경우, E/I, N, T/F, P 지표에 대한 인지가 다소 균형감 있게 도출된 것이 특징이며, 여기서도 물리적 투자(J)보다는 콘텐츠적 투자(P)에 대해 지역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결과가 우세하였다.

[표 4-24] 평창군 지표 분석

구분	E/I	N/S	T/F	P/J
정량 결과	I 청년인구 유출 I 인구 불균형 심화	S 도시 인프라 부족	F 기반 산업 부재	
정성 결과	I	N	F	P
기금 사업				J 교육센터 건립 사업 J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
진단 가이드	I 정주인구 지원책 필요	N 자연가치 활용 필요	F 기반 산업 육성, 지원책 필요	P 콘텐츠 기획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4-11] 평창군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출처: 연구진 작성

평창군의 기금사업은 청소년 방과 후 학습 공간 확충 및 평창읍 평생학습센터 복합화 사업을 1순위로,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 및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사업을 2순위로, 건강 관리센터 조성을 3순위로 설정하였다. 주민들의 지표는 생활인구(외부인구, E) 강화로 설정되어 있으나, 행정 관점에서 정주인구(I) 주력 사업으로 기획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안 체크리스트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이미 인구대비 학교시설이 많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을 물리적으로 확충하는 데에 기금을 활용한 1순위 사업으로 설정한 것은 현황 파악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콘텐츠적 투자(P)에 대한 니즈가 높음에도 대부분의 기금 사업이 물리적 환경 조성(J)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활인구(E) 유입에 대한 전략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보강 또한 로드맵으로 수정 가능할 것으로 진단하였다.

## ⑦ 정선군

정선군의 현안 체크리스트에서 살펴본 결과,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 복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편 반하여 영세 사업체들의 이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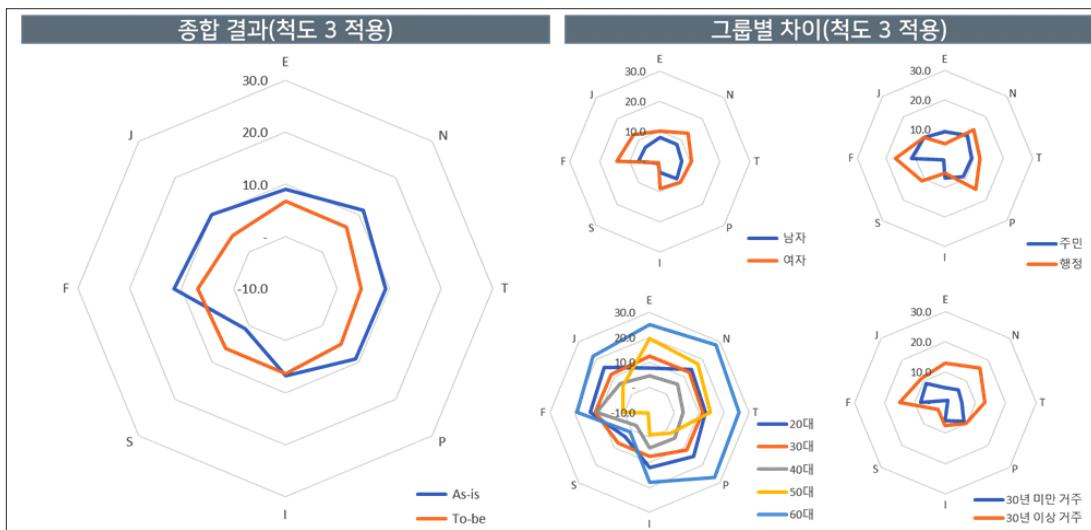
정선군은 척도별 MBTI 결과가 다른 독특한 지역이다. 척도1의 경우 ENFP, 척도2의 경우 INTP, 척도3의 경우 ENFJ로 도출되었다. 지표간 산출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반면, 응답 그룹간의 진단 결과의 차이는 다소 큰 지역으로 지역내 커뮤니티 성격이 다소 분화된 특징을 보인다. 또한, E(생활인구)와 S(경제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주민과 행정 그룹간의 진단 결과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는 카지노사업에 기반한 관광서비스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거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로 인한 관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카지노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큰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콘텐츠 사업(P)일 수도 있으나, 이미 이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정선군의 주민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인프라 투자(J)에 대한 적합성을 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선군에서 제출한 기금사업은 의료, 건강케어 사업으로, 폐광지역 응급의료 기반구축 및 시설 개선으로 앞서 살펴본 정량 및 정성 진단에 부합하는 기금 투자사업으로 판단된다. 2순위 사업은 청년마을 조성 및 일자리케어 투자사업, 3순위 사업은 인재발전소(교육) 구축 사업으로 모두 생활인프라 사업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 경제 및 산업에 대한 필요성(F)이 강하게 부각되고, P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강한 만큼 현재 지역의 세부 분석을 기반으로 로드맵 과정에서 체크해야 할 부분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판단된다.

[표 4-25] 정선군 지표 분석

구분	E/I	N/S	T/F	P/J
정량 결과	I 청년인구 유출 심각	S 교육복지 인프라 부족	F 서비스업 건전성 심각	J 의료 인프라 부족
정성 결과	E	N	F	P
기금 사업	I 청년마을 조성 및 지원		F 일자리 케어 투자사업	J 응급의료 기반 구축
진단 가이드	E 인구 유인책 필요	N 자연가치 발굴 및 활용 필요	F 기반 산업 건전성 회복 필요	P 콘텐츠 기획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4-12] 정선군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출처: 연구진 작성

### ⑧ 철원군

현안 체크리스트 결과, 철원군은 높은 출산율이 확인되며, 자연적 인구증감이 있는 지역으로 분석된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유입인구가 많지 않은 특징을 지닌다. 지역 내 대학교가 존재하지 않고, 유아 보육시설과 의료기간 병상수가 현저히 적은 지역으로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지역이다. 취업시장 규모가 매우 작아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어렵고, 취약 계층 복지 또한 부족한 지역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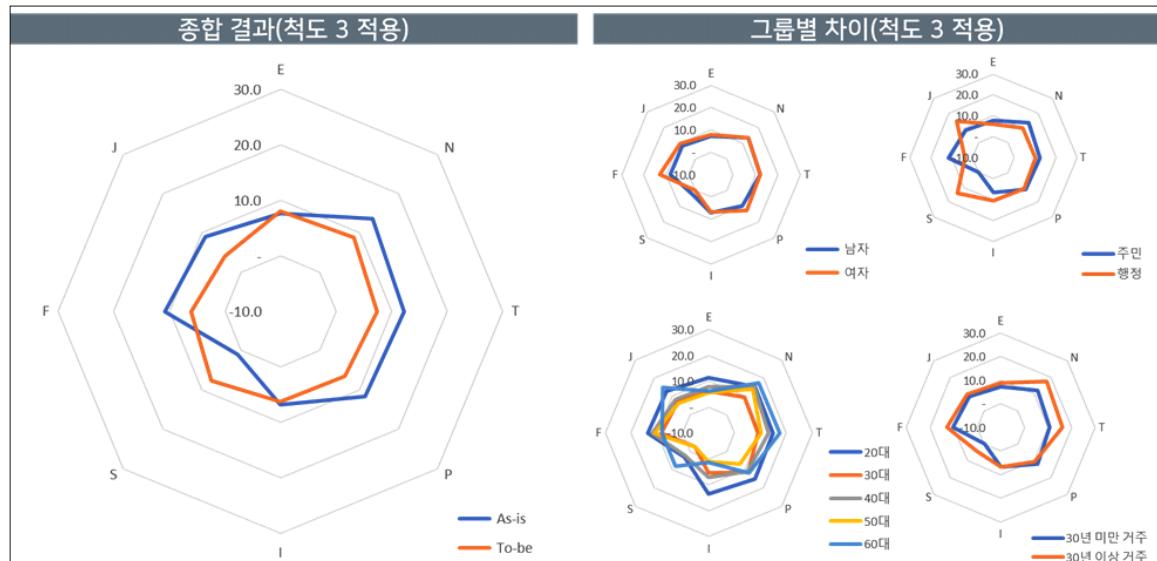
[표 4-26] 철원군 지표 분석

구분	E/I	N/S	T/F	P/J
정량 결과	I 높은 출산율(인구 증감) I 고령화 가속화	S 유아 보육, 교육시설 부족	F 협소한 취업 시장 규모	J 의료 인프라 부족
정성 결과	E	N	T	P
기금 사업			F 식음사업 활성화 지원 T 전통 관련 사업화 테마 발굴 필요	P 외식산업사업 조성 J 건강테마공원 조성 J 한단강 인도교량 사업
진단 가이드	E 인구 유입 방안 필요 I 인구 정착 방안 필요	N 자연가치 활용 필요	T 전통 관련 사업화 테마 발굴 필요	P 콘텐츠적 사업 기획 확대

출처: 연구진 작성

철원군의 MBTI는 흥천과 같은 'ENTP'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다른 지역들과의 차이는 인구에 대한 진단으로, 생활인구(E)와 정주인구(I) 모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 내 자연가치(N)와 전통 문화가치(T)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콘텐츠적 투자(P)가 적합한 지역으로 진단되었다. 이는 장기 거주, 고령화 그룹에서 강하게 N, T에 대해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룹별 차이는 주민과 행정 그룹에서 확인되는데, J(일상적 물리적 투자), S(경제 산업적 인프라)에 대한 행정의 인지와 미래 성장사업(F)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림 4-13] 철원군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출처: 연구진 작성

철원군에서 제출한 기금사업은 외식산업지구 시범지구 조성사업으로 외식사업 업체들을 지원하고 연계 관광 콘텐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1순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2순위 사업은 노인 인구를 위한 건강테마공원 조성사업이며, 3순위 사업은 한탄강 주상 절리 인도교량 사업으로 관광 인프라 사업으로 설정되어 있다. 앞서 진단한 현안 리스트에 의하면 높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영유아 양육시설 및 의료, 교육 인프라 부족에 대한 고려가 노인 인구 시설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지역 대비 지역민들이 진단한 전통 문화가치(T)에 대한 발굴 및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⑨ 화천군

화천군의 현안 체크리스트에서 자연 인구 증가의 지표가 양호함에도 유출인구가 많은 특징이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슈가 많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청년층이 유입될 만한 경제 사회적 요소가 부족하나, 고용 관련 지표들은 우수한 점을 통해 지역 경제적 포텐셜이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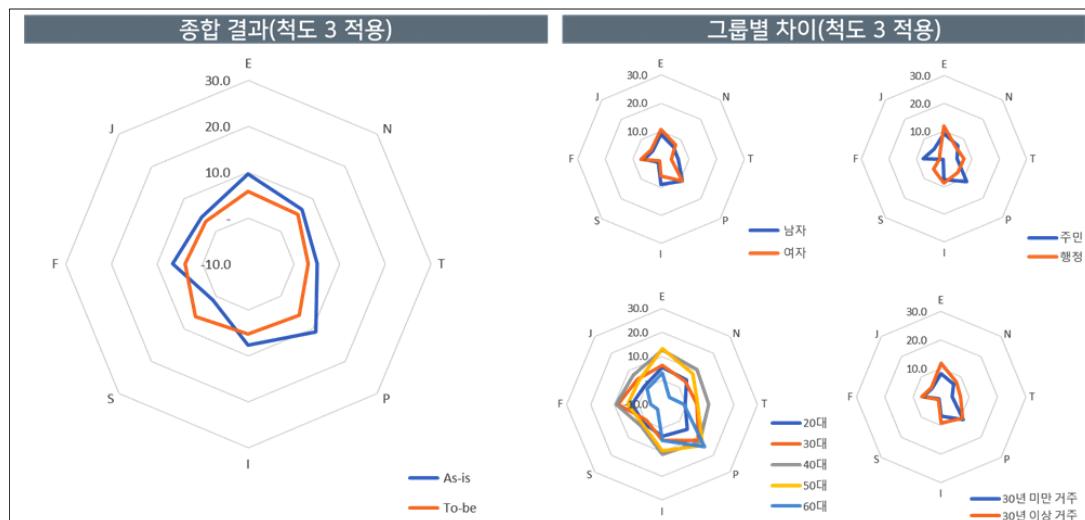
화천군의 MBTI는 철원과 같은 ENTP이며, 생활인구(E)와 콘텐츠적 투자(P)에 대한 강한 진단이 도출되었다. 주민 그룹에서 S(경제 산업적 인프라)에 대한 인지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부분의 그룹에서 큰 이견 차이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강원도 지역 대비 자연가치(N)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전통 문화가치(T)에 대한 인식이 있는 부분이 특징이다.

화천군의 기금사업은 1순위 교육캠퍼스 구축 사업, 2순위 행복주택 건립 사업으로 교육 인프라 조성 및 주택 공급이라는 1차원적인 투자 사업으로 지역의 현안을 분석한 콘텐츠가 부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안 체크리스트에서 확인되는 인구 유출이 경제적인 요인으로 분석되는 만큼 외부인구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는 정성적 진단에서와 같이 콘텐츠적 투자(P)를 기획해야 하는 과제로, 특히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전통가치에 대한 발굴을 제안할 수 있다.

[표 4-27] 화천군 지표 분석

구분	E/I	N/S	T/F	P/J
정량 결과	I 인구 지표 양호하나 유출 인구 많음	S 사회 인프라 부족	F 고용 지표 양호	
정성 결과	E	N	T	P
기금 사업		S 교육, 주택 인프라 개선		J 교육캠퍼스 구축사업 J 행복주택 건립 사업
진단 가이드	I 유출인구 방지책 필요	N 자연가치 발굴 및 활용 필요	T 전통가치 발굴 및 활용 필요	P 콘텐츠 기획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4-14] 화천군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출처: 연구진 작성

## ⑩ 양구군

양구군은 현안 체크리스트에서 인구 지표들이 양호한데 반하여 외부 인구 유출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생활서비스가 부족하고 경제적 규모가 크지 않고 취업시장이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결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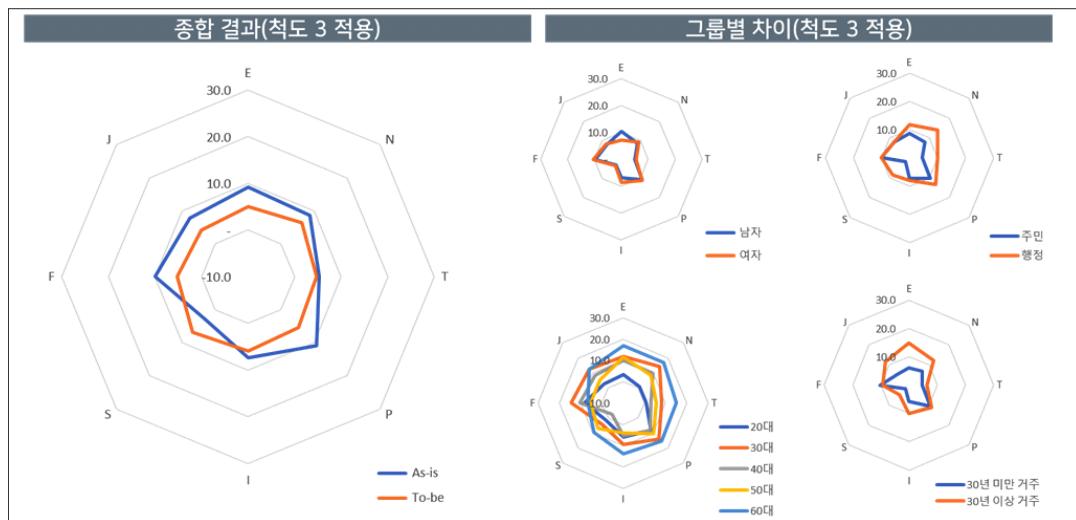
양구군의 MBTI는 다른 강원도 지역들과 같은 ENFP로 진단되었다. 자연 가치(N)를 보유한 반면, 미래 성장에 대한 인프라(F)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콘텐츠적 투자(P)가 적합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차별적인 특징은, 30년 이상 거주한 그룹과 미만 그룹 간에 생활 인구(E), 자연가치(N), 생활 인프라 투자(J)대한 진단 결과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또한, 주민 그룹은 자연가치(N)를 높게 평가하지 않은 반면, 행정 그룹은 지역의 자연가치(N)를 높게 진단한 것에 차이를 보인다.

양구군의 주요 기금사업은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DMO 설립, 로컬크리에이티브 육성, 소상공인 사관학교 등에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순위 사업은 문화예술 마을 조성으로 인문학 테마 마을을 조성 및 공예지역 특성화 사업이며, 3순위 사업은 사회복지 및 의료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앞서 진단한 정량 지표에 따르면 인구지표가 양호함에도 유출인구를 막지 못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요인이기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활성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역의 가치나 산업의 방향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추상적인 관광, 소상공인 지원 방향으로 기금 사업이 기획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역 진단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지역의 가치가 행정 그룹에서 포커싱하고 있는 자연가치(N) 또는 장기 거주자가 판단하는 자연가치(N)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기반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8] 양구군 지표 분석

구분	E/I	N/S	T/F	P/J
정량 결과	I 인구지표 양호하나 유출 인구 많음	S 생활 서비스 부족	F 경제 규모 한계	
정성 결과	E	N	F	P
기금 사업		S 문화예술마을, 인문학 마을 조성 지원	F 지역관광사업 지원(DMO)	J 의료인프라 구축
진단 가이드	E 인구 유인책 필요	N 자연가치 발굴 및 활용 필요	F 기반 산업 지원 방안 적절	P 콘텐츠 기획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4-15] 양구군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출처: 연구진 작성

### ⑪ 고성군

현안 체크리스트에서 고성군은 빈집 비율이 높고 생활 안전 등급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제적 규모가 현저히 작고 취업 시장, 일자리 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도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화된 일부 1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적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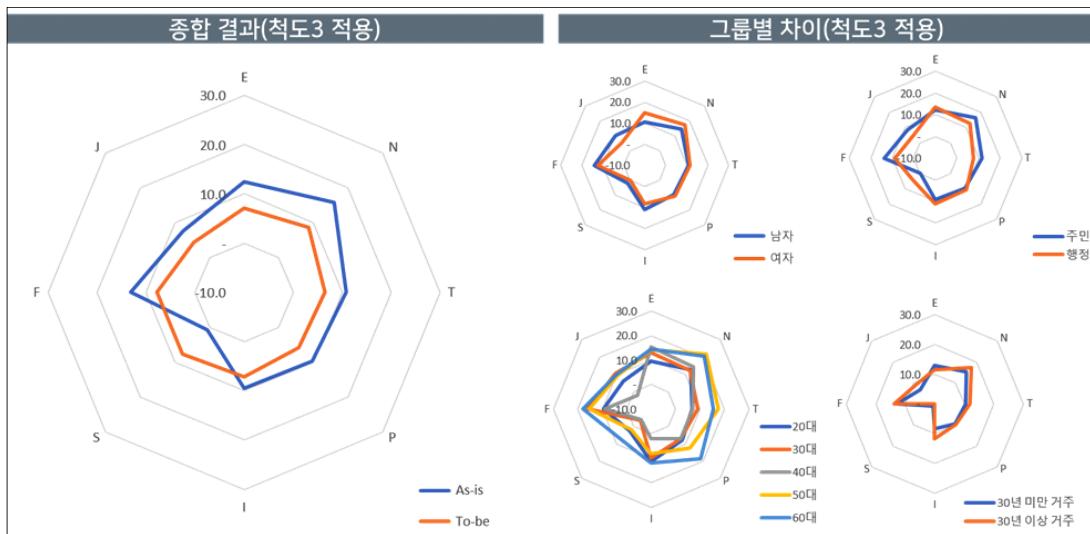
고성군의 MBTI는 다른 강원도 지역과 같은 ENFP로 진단되었으며, 지역적 특징은 모든 그룹에서 자연가치(N)에 대한 강한 응답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응답 그룹에서 항목별 격차가 없는 동질성을 보여주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 문화 가치(T)보다는 향후 미래 성장 동력(F) 적용이 적합하다는 진단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점도 다른 지역들과 유사하다.

고성군은 1순위로 해양심층수 기반 성장형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2순위는 교육사업 프로젝트, 3순위는 화진포 미중길 조성사업 등으로 기금사업을 제출하였다. 모든 그룹에서 진단한 자연가치(N)에 대한 활용 사업이 3순위 정도에 기획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화 전개 방안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진단에서 자연가치(N)를 활용한 미래 산업 동력화(F)로 진단하였다며, 해양심층수 사업 기획은 적합한 방향성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자연가치(N)에 기반을 둔 더 다양한 사업화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2순위 교육사업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앞서 살펴본 정량 및 정성 진단 결과에 기반한 사업전략의 방향성으로 판단되며, 이는 장기 로드맵이나 일부 사업 구체화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표 4-29] 고성군 지표 분석

구분	E/I	N/S	T/F	P/J
정량 결과	I 인구 구조 취약	S 도시 인프라 열악	F 협소한 경제 규모 (1차 산업중심)	
정성 결과	E	N	F	P
기금 사업		S 교육 환경 개선 사업	F 해양 심층수 산업 생태계 조성	J 화진포마중길 조성
진단 가이드	E 인구 유입방안 필요	N 자연가치 발굴 및 활용 필요	F 기반 산업 육성 방안 적절	P 콘텐츠 기획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4-16] 고성군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출처: 연구진 작성

## ⑫ 양양군

현안 체크리스트에서 양양군은 유입 인구 동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거주환경 및 경제활동보다는 '서핑'이라는 테마에 기반한 것으로 예상된다. 다소 낮은 사회 및 행정 서비스 수준에도 많은 서비스 업체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또한 마찬가지로 관광 요소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 부가가치를 고려한다면 지금의 유입 인구와 사업체수를 장기적 동력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양양군의 MBTI는 다른 강원도 지역과 같은 ENFP로 진단되었으며, 모든 그룹에서 자연 가치(N)에 대해 높게 진단하였다. 생활인구(E)에 대한 강한 인지가 행정그룹과 60대 연령층에서 확인되었다. 관련하여 행정 그룹은 정주인구(I)에 대한 인지 또한 함께 하고 있어, 생활인구(E)가 정주인구(I)되고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지역 대비 T, P, F, J 진단 정도가 크지 않고, 자연가치(N)에 기반을 둔 생활인구(E) 유입이 뚜렷하게 정량적으로도 확인되는 독특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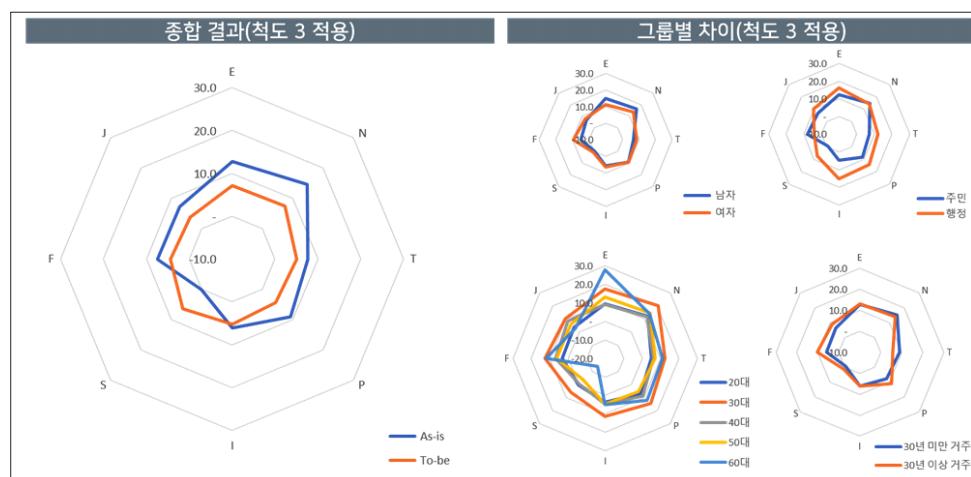
양양군의 기금사업은 1순위가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및 인프라 환경 조성사업, 2순위는 서평메카도시 조성사업이다. 정량 및 정성 분석에 기반하여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2순위 사업을 구체화하는 방향에 근접할 수 있다. 한편, 1순위 사업은 여객이 아닌 화물터미널로, 지역 인구소멸에 집중한 사업 기획이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 사업으로 진단된다.

양양군은 자연적인 인구소멸지역이면서 지역 내 생활 및 행정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며, 자연가치(N)에 기반한 생활인구(E)유입 및 사업체 성장이라는 강한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단계적 기금 사업 계획이 아닌 지역 물류사업을 위한 또 다른 관점에서 사업기획을 추진한 부분은 사업 로드맵 관점에서 부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0] 양양군 지표 분석

구분	E/I	N/S	T/F	P/J
정량 결과	E 인구 유입 동력	S 도시 지표 열악	F 서비스업 활성화	
정성 결과	E	N	F	P
기금 사업	E 서평 마을 활성화		F 국제공항 물류 사업 지원	J 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진단 가이드	E 유입인구 지원책 필요	N 자연가치활용 방안 필요	F 관광 서비스업 활성화 필요	P 기존 산업 콘텐츠 기획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4-17] 양양군 지역 Space-MBTI 진단 결과

출처: 연구진 작성

## 4. 소결

3장에서 개발한 현안 체크리스트를 강원도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해 본 결과, 지역의 강점 요소, 약점 요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인구, 공간, 경제·사회·행정의 세 가지 부문 79개의 지표에 대하여 지표값과 지역 간 비교를 통한 상대적 위치값을 동시에 제공해 줌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표 평가에 대하여 심각, 양호 등의 표기를 시각화하고, 지표 평가에 대한 분석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현안 분석에 대한 효과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마다 현재의 진단 결과와 주기적으로 시계열 진단 결과를 통해 단순히 '인구 증가 수'가 아닌 지역 변화 지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4 페이지로 압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정보 교환이나 평가 등에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 Space-MBTI를 적용해 본 결과, 강원도 전체 지역의 평균 지표는 ENFP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와 함께 향후 개발을 지향하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내 12개 지역 중에서 평균 지표와 차이를 보이는 지역인 홍천, 철원, 화천은 전통가치를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의한 분석의 틀은 그룹간의 격차 분석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 주민 그룹과 장기 거주자의 관점 그리고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본 지역 가치가 다른 사례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 그룹간의 진단 결과는 지역 내 의사소통의 정도와 정보의 전달, 그리고 사업 방향성에 대한 인지, 지역 변화에 대한 인식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행정 차원에서 사업기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보완하고, 하향식(Top-down) 기획을 상향식(Bottom-up)으로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안 체크리스트와 지역 Space-MBTI 결과를 종합하면, 정량 지표에서 도출된 부분이 정성지표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한 지역 특성 진단 결과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원도 내 대부분의 지역이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 유사한 분석 결과를 보이는 가운데, 지역마다 또는 지역내 속성 그룹마다 차별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전체 지역에 적용되는 속성과 지역별 편차 요소 분석을 통해 세부적인 재분석 및 기금 사업 기획 연계를 재검토하여 사업의 안정적 실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결과는 강원도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에 따라, 향후 다른 광역지자체와의 교차 분석을 통해 강원도 지역의 차별적인 특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특성 진단결과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 및 기금사업의 수립에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 진단결과와 2022년 및 2023년 투자사업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일부 기금사업들이 지역 데이터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강원도의 지역 특성으로 자연 및 전통가치에 대한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사업계획에서는 이에 대한 활용이 부족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은 콘텐츠형 사업이 적합한 지역으로 진단되고 있으나, 물리적 투자 사업계획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로드맵 설정 및 세부사업 구체화를 통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진단도구 적용을 통한 지역 특성 진단결과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특성 진단도구는 지역현안을 파악하고 지역특성 기반 유형을 판단하는 진단 체계로, 지역민들이 직접 지역의 매력과 특성을 찾아내고 실질적인 사업기획을 발굴해 내기 위한 방향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황과 수요, 그리고 향후 방향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통해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고, 지역 그룹 커뮤니티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방향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역 특성 진단도구는 특수한 목적과 일부 행정의 의도가 아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기획을 정교화하는 합리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화와 피드백을 통해 진단 속성 및 목적에 따른 재구성화 등 다양한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인구 및 사회 경제적 변화를 지켜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 제5장 결론

- 
1. 연구 요약
  2. 시책 제안
  3. 정책 추진 방향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투자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현안 및 정체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진단하는 체계를 개발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 유형에 적합한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아래의 연구 질문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 연구 질문1 : 인구감소지역의 현안과 지방소멸 대응 사업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
- 연구 질문2 : 인구감소지역의 현안과 특성을 맞춤형으로 진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1. 인구감소지역의 현안과 지방소멸 대응 사업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

인구감소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구감소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건축·도시 분야 15인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현안을 사람 및 장소적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사람 측면의 현안으로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사회, 배타적 지역사회, 인구·사회적 불균형, 미흡한 교육 및 양육

환경, 기타 순으로 총 6건의 현안(하위 17개)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전반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 사회, 교육 등의 불균형이 문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소 측면의 현안으로는 물리적 환경 낙후, 생활 인프라 및 서비스 악화, 도시행정 비효율화, 지역 공동화, 이동성 감소, 기타 순으로 총 6건의 현안(하위 22개)을 도출하였다. 즉 전반적인 물리적 환경과 그로 인한 기반시설 및 서비스의 질 하락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인구감소 지역이 직면한 사람 및 장소적 현안들은 상호 복합적인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8개 부문 35개 공간전략을 도출하여 현재 인구감소지역이 추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전략은 1. 거점 조성 및 재구조화, 2. 경제활동 기반 마련, 3.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 4.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5. 특화주거 공급 및 환경 개선, 6. 지역특화 사업, 7. 공간 장소성 강화, 8. 연계정책 촉진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전략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기초계정)의 2022년 및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사업 466개를 분류하였다. 우선 89개 인구감소지역(기초계정)의 사업 분석 결과, 4.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3.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 '6. 지역 특화 사업', '2. 경제 활동 기반 마련', '5. 특화주거 공급 및 환경개선', '7. 공간 장소성 강화', '8. 연계정책 촉진', '1. 거점조성 및 재구조화'가 관련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사업 순위에 따른 분석 결과, 1순위로 제출된 사업은 '4.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2. 경제활동 기반 마련'이 비중이 높았으며, 2순위는 '관광 특화'가 가장 비중이 높고, '인구유입 특화주택 제공', '일자리 및 창업공간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 사업의 경우 3.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에 해당하는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를 통해 다수의 지역이 인프라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인구를 유입하며 지역 특화사업 및 경제활동 기반 마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1순위로 인프라와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하위 순위로 공간 장소성 강화 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89개 인구감소지역 외 15개 광역지자체(광역계정)의 231개 사업 분석 결과, 4.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3.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 '2. 경제활동 기반 마련', '5. 특화주거 공급 및 환경개선', '6. 지역 특화 사업', '7. 공간 장소성 강화', '8. 연계정책 촉진'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통해 광역 계정의 경우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생활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배분 사업 성격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위별 사업 분석 결과, 1순위 사업은 ‘2. 경제활동 기반 마련’, ‘4.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2순위 사업의 경우에는 ‘4.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2. 경제활동 기반 마련’, ‘5. 특화주거 공급 및 환경’, 3순위 사업은 ‘2. 경제활동 기반 마련’의 비중이 가장 커졌다. 광역 지자체 사업은 기초지자체와 비교 시 경제활동 기반 마련과 인구유입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지역 특화사업에 대한 비중과 우선순위가 낮았다.

종합하면, 기초와 광역 모두 비중과 우선순위에서 차이는 있었으나, 인프라 개선, 경제 활동 기반 마련, 인구유입을 주요 사업전략으로 계획하였다. 이는 위의 전략이 기초와 광역에 모두 중요한 것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초와 광역 간, 그리고 각 지역 간 사업의 차별화가 충분하지 못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해당 지역 현황, 인접지역과의 연계 효과성, 타 지역과의 차별성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합리적인 현안 및 지역 특성의 파악은 지역의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근간이 되며, 향후 투자계획서 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현안 및 지역 특성 진단 체계가 요구된다.

#### 다음으로 2. 인구감소지역의 현안과 특성을 맞춤형으로 진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지방소멸대응 투자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현안과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하지만 현재 투자계획서 평가방식의 한계로 타 지역과의 차별성이거나 위기 정도를 확인할 방법이 미흡하다. 따라서 투자계획서 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현안 및 지역 특성 진단 체계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현안과 특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지역 특성 진단 도구를 개발하였다. 지역 특성 진단 도구는 ‘지역 현안 체크리스트’와 ‘지역 정체성 자가 진단 도구(지역 Space-MBTI)’로 구성된다.

‘지역 현안 체크리스트’는 사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시된 지역의 사람 및 장소 현안들과 연계 가능성 있는 지표들을 수집하여 지역의 인구적, 공간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등에 대한 현안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인구(인구변화, 인구구성, 인구특성), 공간(공간구조, 주거환경, 도시인프라, 교육인프라, 문화·복지 인프라, 안전), 경제·사회·행정(고용, 사업체, 삶의 질, 사회서비스, 행정) 부문으로 구분하여 정량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지표별로 인구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순위를 매기고, 해당 지자체가 하위 몇 퍼센트에 속하는지를 산출하였다. 퍼센트가 낮을수록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높을수록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 강점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는 각 부문별 현황, 강점, 약점에 대해 파악하고, 타 지역과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현안 체크리스트와 더불어 지역 정체성의 자가 진단을 위한 진단 도구인 ‘지역 Space-MBTI (Municipal Base Type Indicator)’를 개발하였다. 이 진단지는 지역 주체들에 의한 체감하는 계획의 수립과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의 정량적 분석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의 쇠퇴 및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단지는 120개의 질문지로 구성되고, 각 질문들은 총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각 카테고리는 사회경제적인 파워로 판단되는 ① 인구(Energy), 물리적인 환경의 특징인 ② 입지(Position),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 및 특장점과 가장 긴밀한 ③ 지역가치(Value) 및 ④ 특수성(Lifestyle)으로 구분하였다. ① 인구(Energy)는 방문 인구(관광객 등)와 정주인구 중 많은 비중에 따라 E(Externality) 또는 I(Internality)로 구분하였다. ② 입지(Position)는 자연적 요소(Nature)가 많은지, 도시적 인프라(Structure)를 구축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구분하였다. ③ 지역가치(Value)는 전통적 유산(Tradition) 관련이 많은지,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미래 가치(Future) 요소가 중점인지에 따라 구분하였다. ④ 특수성(Lifestyle)은 한시적 에너지 또는 계절성이 강한 일의 비중이 높은 지역(Temporary)과 일상성을 기반으로 하는 일상적 스타일의 지역(Journey)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 8가지 세부속성을 조합하여 분석하면 최종 16가지 유형의 지역특성이 도출되어 사회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각 지역유형별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개발한 진단도구의 검증을 위해 강원도 인구감소지역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였으며, 2022년 및 2023년에 각 지역이 제출한 투자계획과 비교해 보고 지역 진단의 필요성과 지역 맞춤형 계획의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강원도 지역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속성과 지역에 따라 차별화되는 특성들이 있었으며, 투자기금 사업추진 시 이러한 유사성 및 고유성을 고려할 경우 사업의 실행력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진단도구는 지자체의 지역 현안을 객관적으로 비교 · 분석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신뢰성 있는 판단과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특성을 고려한 지역의 인구감소 유형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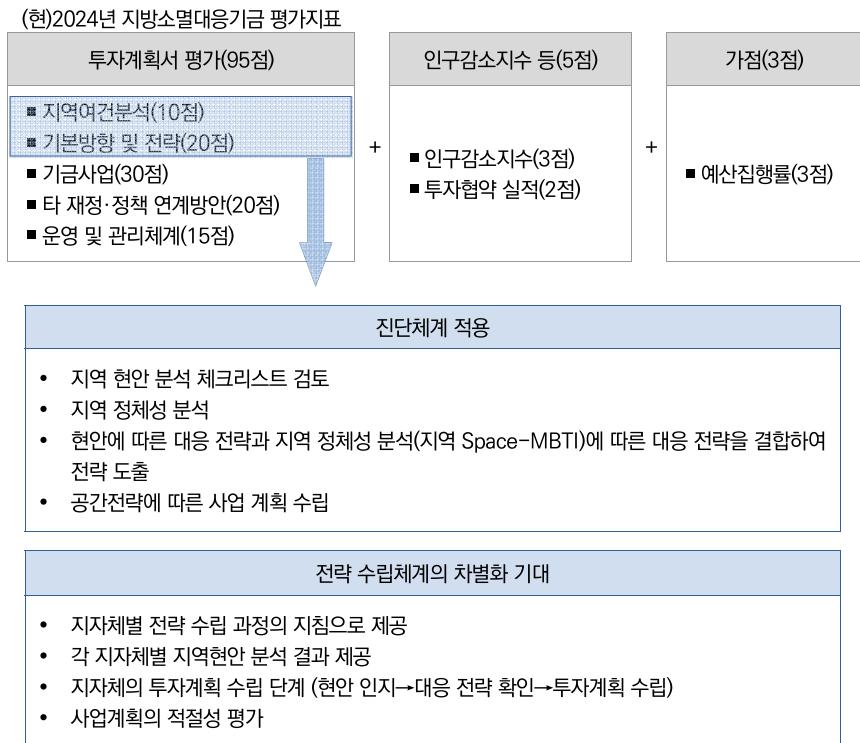
## 2. 시책 제안

### 1) 지방소멸기금 투자계획 수립 체계 및 평가 개선안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지표 중 투자계획서 평가는 지역여건분석(10점), 기본 방향 및 전략(20점), 기금사업(30점), 타 재정·정책 연계방안(20점), 운영 및 관리체계(15점)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합리적 예산의 사용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개별 지자체의 전략과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하게 된다. 현행 평가계획은 평가위원이 지자체가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서면검토, 현장방문, 대면 평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종합평가를 시행한다. 평가위원이 3개월의 기간 동안 89개 지자체의 주요 현안들과 정체성을 파악하고, 전략 수립 방향의 적합성과 개별 사업들의 적절성을 심도 깊게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고유의 지역 정체성과 지역 문제 인식을 통한 전략 수립을 권장하고 이를 인정-평가-보상해야 지역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바, 지자체가 지역 특성 진단도구(현안 체크리스트와 지역 Space-MBTI)를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세부사업들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강조하고 이를 평가체계에 고려함으로써 개별 지역 중심의 차별화된 평가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자체들은 지역 현안과 특성 및 정체성에 따라 얼마나 충실히 전략과 사업을 수립했는지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안 체크리스트와 지역 Space-MBTI는 대응 전략을 적용하기 위한 '경로 찾기 도구(Pathfinder)'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중앙정부와 평가위원에게도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현안과 지역 정체성을 손쉽게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전략의 적절성과 개별 사업들이 해당 전략에 충실한지를 검토할 수 있어, 평가위원들에게 서면검토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현장평가나 대면평가 시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평가위원 개별 특성에 따른 평가점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그림 5-1] 진단체계의 적용 방안

출처: 지방소멸대응기금 2024년 투자계획 평가계획, p.4. 참고 및 추가하여 작성

지방소멸기금 투자계획의 수립과 평가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 진단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특성 진단도구는 현안 체크리스트와 지역 Space-MBTI로 구성되고, 각 도구별로 진단 목적과 방법이 상이함에 따라 진단도구의 필요성, 대상, 적용단계 등 전반적인 활용방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지역 특성 진단 도구의 사용을 위한 사용설명서를 다음 페이지에 예시로 제시하였다. 본 사용설명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요약한 설명서로, 향후 진단도구를 사용하는 대상 및 목적에 따라 보다 상세한 사용설명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가 활용할 경우, 평가단계에서 평가위원이 활용할 경우 등 사용대상 및 목적에 맞는 사용설명서가 필요하다.

※ (예시)지역 특성 진단 도구 사용설명서

# 지역 특성 진단 도구 사용 설명서

Regional Characteristics Assessment Tool Manual

건축공간연구원

## 지역 특성 진단 도구란?

지역 특성 진단 도구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공간, 사회, 경제적 측면에 대한 지역 현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지역민이 생각하는 지역의 정체성에 대해 자가 진단하는 도구입니다.

### 지역 특성 진단 도구의 필요성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 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및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적, 공간적, 사회적 특징에 따라 지역이 쇠퇴하거나 성장하는 원인은 다양하며,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 또한 다양합니다.

지역 특성 진단 도구는 지역 현안과 가치에 대해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지역의 현황과 자원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적합한 인구감소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 특성 진단 도구의 특징



지역의 다양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로 파악 가능합니다.

인구, 공간, 사회, 경제, 행정 측면에  
서 지역의 현황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다른 인구감소지역과 비교  
한 상대적 위치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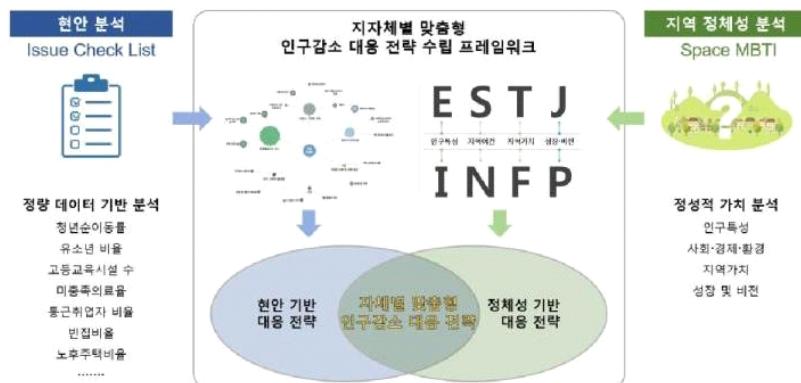


주민이 생각하는 지역의 특장점  
과 성장방향을 확인 가능합니다.

지역주체들이 체감하는 지역의 현황  
과 희망하는 지역의 성장방향을 자가  
진단 할 수 있으며, 지역의 유형을 확  
인 가능

### 지역 특성 진단 도구의 구성

지역 특성 진단 도구는 정량적 분석 도구인 '현안 체크리스트'와 정성적 분석 도구인  
'지역 Space-MBTI' 2가지 파트로 구성됩니다.



## 지역 특성 진단 도구 활용 방법

### Who?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담당 공무원, 투자계획 수립 용역사, 인구감소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

### Wh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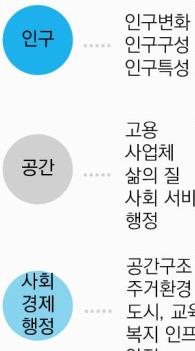
투자계획 수립 단계 중 첫번째 단계에서 활용합니다.  
지역 특성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가장 먼저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잠재력 및 가치를 진단합니다. 이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 적합한 지방소멸 대응 기본방향 및 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획서 양식에서는 지역 여건분석 및 전망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여건분석 및 전망

- 기본방향 및 전략
- 기금사업
- 타 재정, 정책 연계방안
- 운영 및 관리체계
- 기타

### How?

1단계 | 현안 체크리스트의 각 부문별 지표를 확인하여 지역의 현황을 파악합니다.



[현안 체크리스트의 현안 지표 부문]

2단계 | 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 Space-MBTI'를 조사하여 지역 정체성과 잠재력을 진단합니다.



[현안 체크리스트의 현안 지표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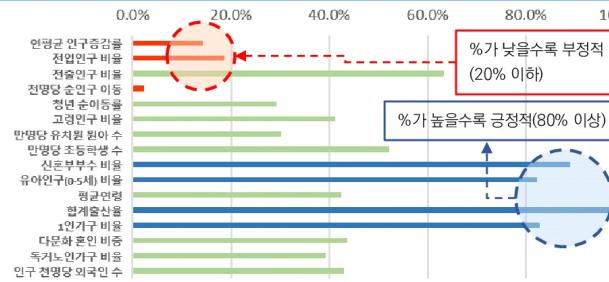
3단계 | 현안 체크리스트를 통해 파악한 객관적인 지역의 강·약점과 지역 Space-MBTI를 통해 도출된 지역의 고유 가치 및 특징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사업을 점검합니다.

## 지역 특성 진단 도구의 적용 강원도 철원군(사례)



### 지역 현안 체크리스트

[인구 부문 종합 평가(빨간색: 심각, 파란색: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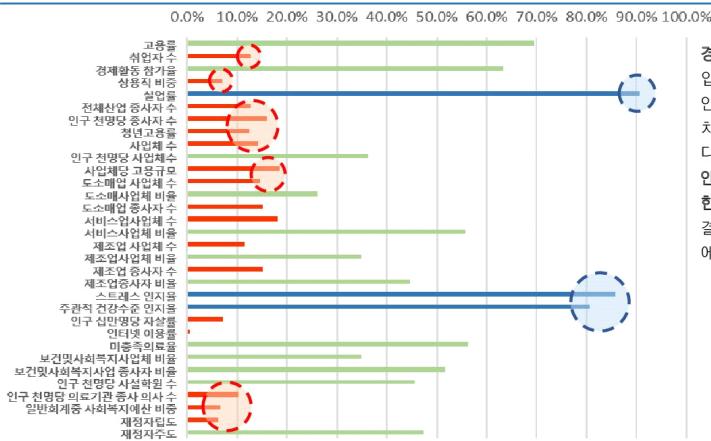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며, 이것이 가능한 인구구조를 보입니다. 자연적 인구증감의 측면에서는 모든 지표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호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지역 외로 전출되는 인구가 적음에도, 점차 가속화되는 고령화와 지역 내로 유입되는 인구가 매우 적어 사회적 인구 이동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을 보입니다. 사회적 인구 유입 또는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간 부문 종합 평가(빨간색: 심각, 파란색: 양호)]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지표들은 평균적 수준을 보입니다. 하지만 도로 포장률이 낮고 지역 내 대학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아천명당 보육시설 수와 인구대비 의료기관방법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해당 지역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거나 관계인구를 확대하는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행정 부문 종합 평가(빨간색: 심각, 파란색: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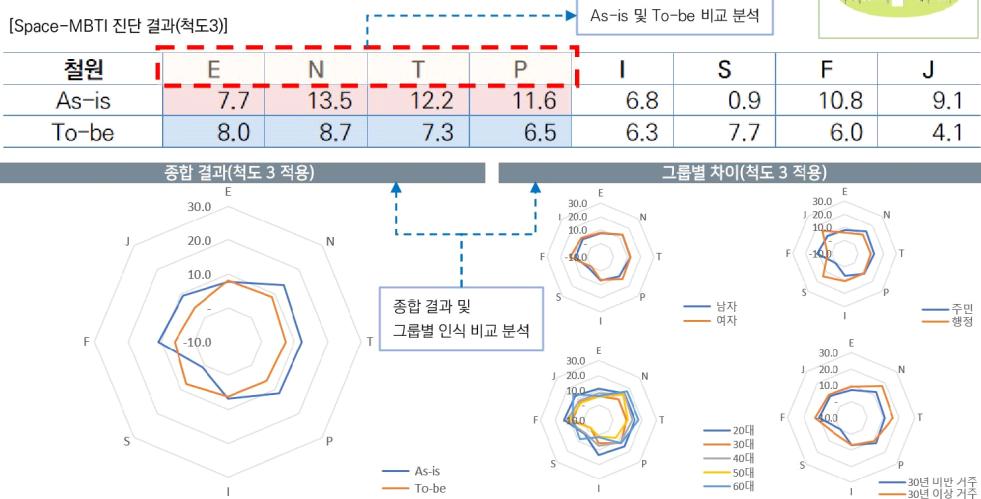


경제적 규모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이에 취업 시장의 규모도 매우 작고, 안정적 일자리도 제공하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도 매우 낮게 나타납니다.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나 복지가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내부 혹은 외부의 사람들에게 경제적 유인 요소가 적습니다.

## 지역 특성 진단 도구의 적용 강원도 철원군(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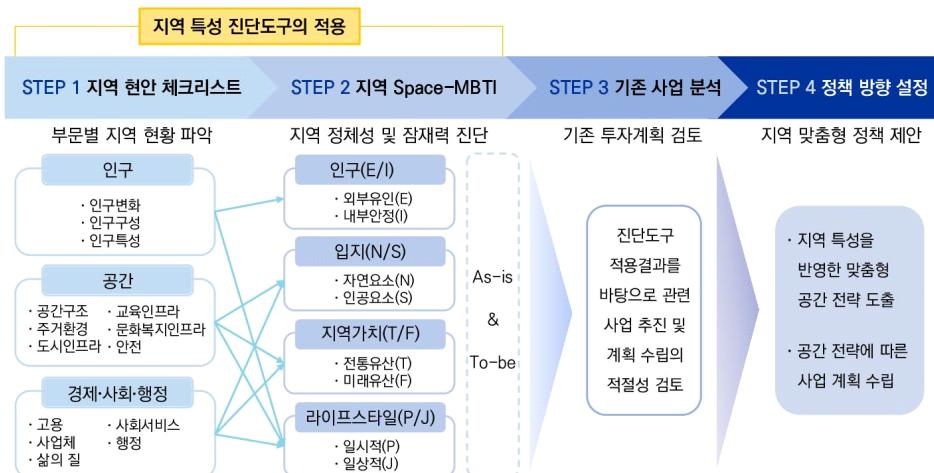
### 지역 Space-MBTI



#### 결과 요약

- 생활인구(E)와 정주인구(I) 모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
- 지역 내 자연가치(N)와 전통 문화가치(T) 보유, 이를 활용한 콘텐츠적 투자(P) 적합한 것으로 진단
- J(일상적 물리적 투자), S(경제 산업적 인프라)에 대한 행정의 인지와 미래 성장사업(F)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 차이

### 인구감소지역 공간 특성 진단 프로세스



## 2)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관련 정책 개선 제안

### □ 안정적 지방소멸기금 배분 기준의 필요

지방소멸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기운영형 사업에 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하나, 대부분 단기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지자체별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기금의 배분이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 동시 지급되지만, 광역 단위의 기초 지자체 간의 연계성 있는 통합적 관점의 계획 수립 사례가 부족하다. 따라서 인접 지자체들간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광역차원에서의 계획 수립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

### □ 지방소멸기금 배분 방식의 문제점 및 한계

우선, 기준에 제시된 사업계획서 평가의 '가이드라인'은 단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에 맞춰져 있고, 사업계획서 평가 등급에 따라 기금이 배분되어 장기 사업계획의 수립과 혁신적 아이디어의 발굴에 한계가 있다. 이에 장기 로드맵 작성에 기반한 연간 계획의 수립과 혁신적 아이디어 적용이 가능한 Open-end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광역단위의 기초 지자체들은 각 지자체간 유사한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금이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민간 자금 활용을 통한 사업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지자체별 연관 사업을 기획하여 지자체간 경쟁이 아닌, 광역단위의 지역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광역 관점의 통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정책 대응 방안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 활용 사업의 안정적인 실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7조, 제28조의 투자계획 제출 및 성과분석 과정에서 광역 차원의 사업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타 부처 연계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유도책을 마련해야 한다.

## □ 제도 개선 방안

- 지방기금법 : 광역지원계정의 로드맵 계획 수립에 의한 평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7조, 제28조 중 광역지원계정을 중심으로 광역차원의 장기 로드맵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기반하여 기금 활용 사업의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

## □ 기대 효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과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지자체간 기금 확보 경쟁이 아닌 광역 범주에서 다부처 사업 협력 등 지역 상생을 유도하고 중복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금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시행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유도하며 기금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

### 3. 정책 추진 방향

인구감소지역은 앞서 연구결과처럼 지역의 인구적,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 인구감소 양상이 상이하므로, 다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인구감소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 문제로 개별 지역의 사업에 앞서 전반적인 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 기본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15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정책 기본방향은 크게 7가지 방향으로 ‘1. 인구감소 원인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2. 지역별 전략 차별화’, ‘3. 도시 관리 차원의 공간계획 연계 필요’, ‘4. 도시 생산성 및 자립성 향상’, ‘5.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전략 마련’, ‘6.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7. 중앙 및 지자체 역할 정립’이다.

- 1. 인구감소 원인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정책 기본방향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점은 ‘인구감소 원인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이다. 인구감소지역들은 인구증감률, 고령화율, 생산가능인구비율 등 인구적 특징이 상이하며, 산업구조, 토지이용유형, 생활인프라 및 서비스 등의 물리적, 환경적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A지역의 경우 인구유출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는 사업이 필요할 수 있지만 B지역의 경우 자연적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에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즉, 각 지역이 봉착한 인구감소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세부방향으로는 생활인구 정의 및 유입, 인구유출 최소화 및 정착 지원, 출산율 저하 원인 분석 및 단계별 전략수립으로 정리할 수 있다.

- 2. 지역별 전략 차별화

두 번째는 ‘지역별 전략 차별화’이다. 지역의 물리적, 인구·사회적, 경제적, 규모적 특성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유형은 상이하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전략과 적용 기준을 차별화하여야지만 각 지역의 현재 및 미래의 인구감소 현안에 대응하고 지역의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다. 세부 방향으로는 지역 특성별 사업 추진, 지역별 연계정책 차별화, 지역별 적용 기준 차별화, 소규모 지역 대상 사업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3. 도시 관리 차원의 공간계획 연계

세 번째는 ‘도시 관리 차원의 공간계획 연계’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역의 적정밀도, 입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규 개발 중심의 양적 개발방식이 아닌 도시 관리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의 구조적인 이슈에 대응하는 공간구조재편, 신규 및 기존 시설의 입지 적정화, 적정 규모, 밀도 등에 대한 적정도시계획, 인접 지역 간 사업 및 정책 연계, 체계적 계획 수립을 통한 난개발 방지를 고려한 사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 4. 도시 생산성 및 자립성 향상

네 번째는 ‘도시 생산성 및 자립성 향상’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도시의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인구적 관점에서 인구소멸에 접근하기보다 도시 기능적 관점에서 도시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의 산업구조 검토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 및 신산업 유치, 소규모 도시의 생산성 향상, 도시 자립성 향상을 위한 도시성장 선순환 구조 마련,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농업 첨단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5.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전략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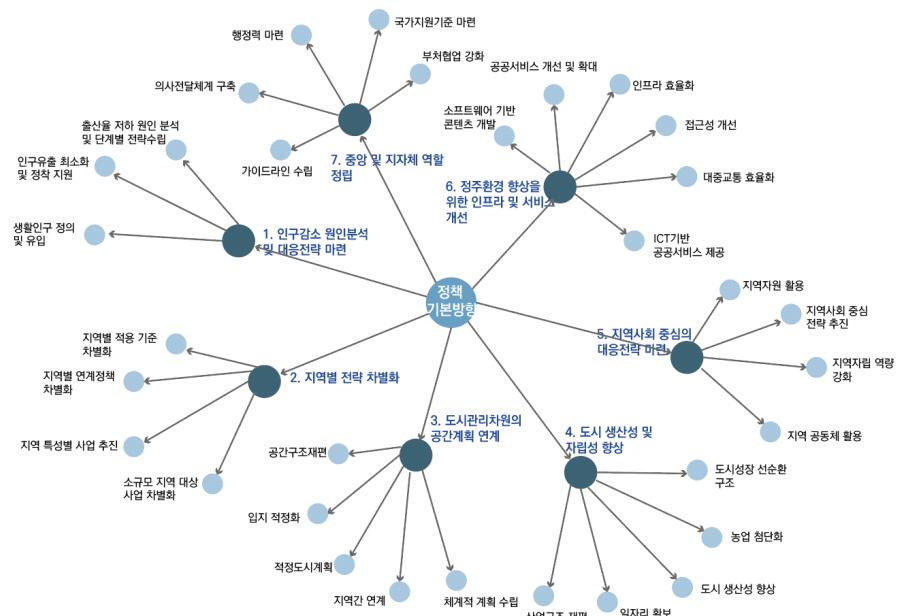
다섯 번째는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전략 마련’이다. 인구감소대응사업들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경향이 높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특징들과 인구감소 원인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사회의 특징 및 공동체 현황, 지역 자원의 잠재력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과 지역사회와의 융합 정도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의 활용, 지역사회 중심의 전략 추진, 지역자립 역량 강화, 지역자원 활용 등 지역사회의 물리적, 비물리적 자원을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6.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여섯 번째는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이다. 지역의 정주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거주인구 또는 생활인구, 연령층 등의 수혜대상, 물리적 및 사회적 접근성,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따라 인프라 및 서비스의 확충 및 효율화가 필요하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대다수는 중소규모 도시로, 인프라 및 서비스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CT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서비스 개선 및 확대, 대중교통 효율화, 소프트웨어 기반 콘텐츠 개발, 인프라 효율화, 접근성 개선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7. 중앙 및 지자체 역할 정립

마지막으로 ‘중앙 및 지자체 역할 정립’은 인구감소대응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가이드에 대한 기본방향이다. 적정 인프라 및 서비스의 공급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지원기준 마련, 사업의 실효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부처협업 강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의사전달체계 및 가이드라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력 강화 등이 세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5-2] 정책 추진 방향

출처: 연구진 작성

- 정책 기본방향과 공간전략간 관계



[그림 5-3] 정책 기본방향과 공간전략 간 관계

출처: 연구진 작성

##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과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의 관리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의를 지닌다. 첫째,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관리를 위해 지역의 현안 및 강점과 약점, 특성 및 정체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체계를 개발하였다. 둘째,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의 지역 맞춤형 방향제시를 위한 틀ikit을 제공하였다. 셋째,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지역 파트너십을 함께 공유하고 의견의 차이와 합의점을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진단 과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한 공간전략 중 일부가 공간 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다. 8개의 공간전략과 35개의 세부 전략 중 '학교 특성화', '부처협업 확대', '고향기부금 연계' 등 일부 전략의 경우, 공간적 측면이 아닌 경제적, 정책적 전략에 해당하는 예도 있다. 이는 공간적 측면에서의 전략 도출을 우선시 하였지만, 공간전략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계 전략을 함께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공간전략에 대해 적용 분야, 범위, 대상 등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공간전략과 연계 전략 간의 관계성을 정리하여 전략의 적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분석함에 있어 2022년, 2023년도의 투자계획의 분석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토의함에 따라 한정된 기간에만 해당하는 시사점으로 머물 수 있다. 2024년 투자계획의 방향성은 생활인구에 대한 강조, 거점공간에 대한 고려 등이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 다른 투자계획의 한계점 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진단체계의 개발은 연구진의 브레인스토밍에 의존하여 보편적 합리성을 지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현안 체크리스트의 분석지표와 지역 정체성 자가진단 질문지는 진단 목적, 방향성에 따라 분석 데이터의 종류 및 범위,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 Space-MBTI의 시범적용은 강원도 지역 12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해 보았으며, 2022년, 2023년 투자계획에 한정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에는 매년 신규 제안되는 투자계획의 종합분석을 통해 시계열적인 대응 방안의 흐름을 분석하고 정책 발전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현안 체크리스트의 경우, 시계열적 모니터링 도구로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데, 향후 지역의 통계자료의 연차별 구축을 통한 비교와 지역의 대응에 따른 지역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지역 Space-MBTI의 시범 적용 시 설문에 있어 강원도 인구감소지역별로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수가 소수였던 한계가 있다. 향후 지역 Space-MBTI 적용을 위해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대상 설문을 시행할 경우, 표본에 따른 샘플링 등 가능하면 유의한 표본수를 확보하여 그룹간 비교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진단체계를 통해 전국의 적용을 원하는 인구감소지역을 진단해 보고 지역간 차이를 분석하여 대응방향에 대한 다양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진단체계가 지역의 종합적인 현황과 잠재력 및 가치를 진단하는 도구인 점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 외 다른 지역에도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도시진단 도구로서 활용성이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진단은 그 진단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도시 재생, 지역 정책 발전, 도시 정비 사업, 신도시 개발 사업 등 각각 다른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진단도구의 범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시진단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고려하고, 필요한 기준 설정과 적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은 2022년부터 10년간 지속된다. 10년 한시적인 지원이지만 그 이후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역의 대응 노력을 더욱 발전할 필요가 있다. ‘사람’과 ‘장소’의 측면에서 지역의 현안, 잠재력,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공간전략’을 처방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제안들이 인구감소 지역들이 우려하는 ‘지방소멸’의 과정을 역전시킬 엉킨 실태를 푸는 도구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 개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514호, 2023. 7. 4., 타법개정]
- 구형수 외. (2016). 저성장시대 축소시대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구형수 외. (2018). 저성장시대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유형별 대응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김종근. (2020). 도시쇠퇴에 따른 지역발전 정책 방안: 도시관리비용 부담완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9(1), 148-156.
- 김태섭. (2021). 장날도 적막한 합천... 20만 인구 4만 남아. 경남도민일보. 8월 4일 기사.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902> (검색일: 2023.08.21.)
- 김현호 외. (2021).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내각부 2019 제2기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 종합전략\_ <https://www.chisou.go.jp/sousei/info/pdf/r1-12-20-senryaku.pdf>
- 노기현(2016). 일본의 건축리모델링 관련법제 \_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등록자료,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뉴스핌. (2022). 소멸위기 지역을 가다 (2)부산 영도구. 4월 21일 기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21000844> (검색일: 2023.08.21.)
- 뉴스핌. (2023). 소멸위기 지역을 가다 (6)전라남도. 5월 1일 기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501000001> (검색일: 2023.08.21.)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https://www.gaok.or.kr/gaok/bbs/B0000010/view.do?nttId=14439&menuNo=200090> (검색일: 2023.01.26.)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https://www.city.go.kr/mobile/info/urban/policy03/link.do> (검색일: 2023.09.22.)
- 모리카와 히로시(森川 洋). (2020). '지방창생 정책과 그 문제점' \_인문지리 제72권 제3호. pp.299-315.
- 민성희 외. (2019).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 박성남, 류수연, 최가윤. (2023). 인구감소지역 군집분석에 따른 군집별 대응방향. 한국도시 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4(4), 39-52
- 빅카인즈 홈페이지, <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 (검색일: 2023.08.21.)
- 성은영 외. (2015).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전략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송미령외. (2021). 2020 지역발전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안의호. (2022). 3만명대로 주저앉은 태백시 인구, 소멸 위기 고착화. 강원도민일보. 8월 19 일 기사.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0647> (검색일: 2023.08.21.)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B%9C\\_\(%ED%96%89%EC%A0%95\\_%EA%B5%AC%EC%97%AD](https://ko.wikipedia.org/wiki/%EC%8B%9C_(%ED%96%89%EC%A0%95_%EA%B5%AC%EC%97%AD) (검색일: 2023.08.21.)
- 유대용. (2023). 곡성 신생아 '0명'…전남 동부권 출생아 1천명↓ 인구절벽. 전남CBS. 3월 7 일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905877> (검색일: 2023.08.21.)
- 이상호. (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정주원·이아라. (2022). 인구감소지역 유형에 따른 특성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 제현정. (2018). 인구감소지역의 유형별 실태와 지방의 도시계획적 대응 비교. 서울대학교.
- 지방정부TVU. (2022). 연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 <https://thevoiceofus.co.kr/mobile/article.html?no=9892> (검색일: 2023.00.00.)
- 차미숙 외. (2021). 지방소멸 대응대책 수립 연구용역,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 최혁규. (2022). 영도 고령층 30% 돌파…인구 줄자 학교 등 감소 '악순환'. 국제신문. 11월 16 일 기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y=20221117.22003005005> (검색일: 2023.08.21.)
- 합천일보. (2023). "인구소멸 면 미래 아냐? 경남 5년 후 공장 멈출 수도"[지방소멸은 없다]. 3월 12일 기사. <https://www.hap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015> (검색일: 2023.08.21.)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검색일: 2023.01.26.)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sub/a06/b06/localextinctionFund/screen.do> (검색일: 2023.01.26.)

행정안전부. (2022a). 연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한다. 2월 8일자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22b).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 7월 7일자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22c). 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 . 8월 6일자 보도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2023.05.11.)



---

# A Study on a Diagnostic System for Population Decline Areas to Develop Customized Spatial Strategies

SUMMARY

Park, Sungnam  
Choi, Gayoon  
Ryu, Suyeon  
Jang, Minyoung

---

With the increasing demand for social and policy measures to address population decline and local extinction crisis, support policies for population decline areas have expanded since 2017, primarily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November 2021,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signated 89 areas as population decline areas based on the Population Decline Index. In December of the same year, Articles 22 through 29 were newly established in the "Local Autonomy Finance Management Act," introducing the "Fund to Respond to Local Extinction" to be suppor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years 2022 to 2023. However, the current Fund to Respond to Local Extinction faces challenges in providing strategic responses tailored to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mainly due to limitations in objective, specialized analysis of regional issues, insufficient spatial planning guidelines, and underdeveloped support systems. As a result, this hinders the appropriateness, diversity, and practicality of regional projects and makes it difficult to carry out differentiated projects that reflect regional conditions and spatial characteristic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grasp the current issues in population decline areas arising from the existing urban structure centered on quantitative growth and population and

social changes. It also seeks to develop a regional diagnostic system for effective urban management. Furthermore, the study intends to propose policy direction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to address regional depopulation and promote regional revitalization. To achieve these objectives, we will conduct the research through the following two research questions.

Research question 1: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issues in population decline areas and projects to respond to local extinction?

Research question 2 : What methods can be employed to customize the diagnosis of current issues and characteristics in population decline areas?

The spatial scope of this study includes 89 local government units designated as population decline areas and 15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units. Specifically, the study will pilot the diagnostic tools proposed within this research in 12 population decline areas located in Gangwon Province. In terms of content scope, the study provides recommendations concerning investment plans for the Fund to Respond to Local Extinction for the years 2022 and 2023, as well as policies and measures that can be linked to the Fund to Respond to Local Extinction for all 89 local government units and 15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units. The research methodology involves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quantitative data (regional statistics) and qualitative data (expert opinion surveys) through a mixed-method analysis. Qualitative data analysis is conducted by coding and text mining using NVivo12, while quantitative data analysis involves cluster analysis using SPSS.

Research question 1: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issues in population decline areas and projects to respond to local extinc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issues in population decline areas, it is essential to look beyond the mere aspect of population decline and consider all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s it has on the region. In this study, to address this, the opinions of 15 experts in the fields of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were gathered to identify the current issues in population decline areas from both a human and spatial perspective. From a human perspective, six major issues (along with 17 sub-issues) were identified,

including a decreas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a society characterized by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exclusive local communities, demographic and social imbalances, inadequate educational and childcare environments, and other related concerns. These issues highlight the imbalances in various aspects, such as the economy, society, and education, resulting from overall population decline. From a spatial perspective, six primary issues (along with 22 sub-issues) were identified, including physical environmental deterioration, a decline in quality of life infrastructure and services, inefficiencies in urban administration, a lack of community cohesion, reduced mobility, and other related concerns. It appears that the most significant problem stems from the overall physical environment and the consequent deterioration in infrastructure and service quality. These human and spatial issues faced by population decline areas are complex and interrelated, emphasizing the need to develop strategic responses to address these problems effectively.

In line with this, expert opinions were collected to derive 35 spatial strategies across eight sectors. The goal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vestment projects funded by the Fund to Respond to Local Extinction currently being undertaken in population decline areas. The derived strategies can be categorized as follows. 1. Creating Hubs and Restructuring, 2. Establishing an Economic Activity Base, 3. Expanding the Population for Daily Life and Settlement, 4. Improving Infrastructure and Services, 5. Providing Specialized Housing and Environmental Enhancement, 6. Regional Specialization Projects, 7. Enhancing Spatial Identity and 8. Promoting Integrated Policies.

According to these strategies, the 466 projects from the 89 population decline areas (basic accounts) for the years 2022 and 2023 were classified. Analyzing the projects based on the results, the top-ranked projects submitted by the 89 population decline areas were related to '4. Improving Infrastructure and Services,' '3. Expanding the Population for Daily Life and Settlement,' '6. Regional Specialization Projects,' '2. Establishing an Economic Activity Base,' '5. Providing Specialized Housing and Environmental Enhancement,' '7. Enhancing Spatial Identity,' '8. Promoting Integrated Policies,' and '1. Creating Hubs and Restructuring.' Furthermore, when looking at the project rankings, the top-priority projects were heavily focused on '4. Infrastructure and Service Improvement' and '2. Establishing an Economic Activity Base.' Second-priority projects were primarily related to 'Tourism Specialization,' followed by 'Providing

'Specialized Housing for In-Migration' and 'Job Creation and Entrepreneurial Spaces.' For the third-priority projects, there was a relatively high emphasis on '3. Expanding the Population for Daily Life and Settlement.' This analysis reveals that many regions are actively working on improving infrastructure and services, attracting population inflow and pursuing regional specialization and economic activity base projects. Notably, they prioritize infrastructure and job creation projects as their top choices, while spatial identity enhancement projects and service program support tend to rank lower.

In the analysis of 231 projects from the 15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units (metropolitan accounts), the projects were classified as related to '4. Infrastructure and Service Improvement,' '3. Expanding the Population for Daily Life and Settlement,' '2. Establishing an Economic Activity Base,' '5. Providing Specialized Housing and Environmental Enhancement,' '6. Regional Specialization Projects,' '7. Enhancing Spatial Identity,' and '8. Promoting Integrated Policies.' This suggests that the metropolitan accounts prioritize efforts to attract a resident population and allocate projects to support daily life infrastructure and services. Analyzing the projects based on their rankings, the top-priority projects were focused on '2. Establishing an Economic Activity Base' and '4. Infrastructure and Service Improvement.' Second-priority projects had a high emphasis on '4. Improving Infrastructure and Services,' '2. Establishing an Economic Activity Base,' '5. Providing Specialized Housing and Environmental Enhancement,' while third-priority projects showed a significant emphasis on '2. Establishing an Economic Activity Base.' In comparison, the metropolitan accounts placed a relatively higher importance on strategies related to establishing an economic activity base and attracting a population compared to the basic accounts. However, the emphasis on regional specialization projects was lower, and they ranked lower in priority in the metropolitan accounts.

To sum it up, both basic and metropolitan areas prioritized strategies related to infrastructure improvement, establishing an economic activity base, and attracting a population. This signifies the importance of these strategies in both basic and metropolitan areas. However, the lack of differentiation in projects between basic and metropolitan areas and among different regions indicates the need for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regional conditions, synergies with neighboring areas, and distinctiveness compared to other regions. This issue arises from a lack of information on the current regional situ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jacent

areas, which serves as the foundation for formulating differentiated responses for each region. To enable a fair evaluation of investment plans in the future, a diagnostic system for comparable current issue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is required.

Research question 2 : What methods can be employed to customize the diagnosis of current issues and characteristics in population decline areas?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investment projects for addressing local extinction, it is crucial to accurately analyze and assess the current issues and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decline areas. However, the current evaluation methods for investment plans have limitations in terms of assessing the distinctiveness of these areas and the severity of the crisis compared to other regions. Therefore, it is worth considering the application of a diagnostic system for comparable current issue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that can be used in the evaluation of investment plans. To address this, this study has developed regional diagnostic tools for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f the current issues and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decline areas. The regional diagnostic tools consist of a Regional Issue Checklist and a Regional Identity Self-Diagnostic Tool.

The Regional Issue Checklist is designed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current issues in various aspects of the region, including population-related, spati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It was developed by collecting indicators related to issues involving people and places through expert opinions. The tool is divided into sections covering population (population changes, population compositi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pace (spatial structure, living environment, urban infrastructure, educational infrastructure, cultural and welfare infrastructure, safety), and economic, soci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employment, businesses, quality of life, social services, administration). Quantitative data was collected and used to rank indicators based on their positive impact on population change. The tool calculates the percentage ranking for each indicator, with lower percentages indicating a negative impact and higher percentages signifying relative strengths compared to other regions. This enables each local government to understand their current status, strengths, and weaknesses in each section, allowing for comparison and analysis in relation to other regions.

Furthermore, in addition to the Issue Checklist, a diagnostic tool called the "Regional Space-MBTI (Municipal Base Type Indicator)" was developed for self-diagnosing regional identity. This diagnostic tool is designed to stimulate local stakeholders to perceive and participate in planning. It goes beyond quantitative analysis, allowing for the exploration of the decline and potential of the region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 diagnostic tool consists of 120 questions, and each question is categorized into four main categories. These categories are assessed based on their social and economic influence and divided as follows. ① Energy, ② Position, characteristics of physical environment, ③ Valu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local identity and features and ④ Lifestyle. ① Energy was divided into E (Externality) or I (Internality) depending on the share of visiting population (e.g. tourists). ② Position was divided depending on the presence of natural elements or urban structure. ③ Value is divided depending on whether the area is more related to tradition or area focuses on future values. ④ Lifestyle was divided into temporary area where temporary energy or share of seasonal activities is high and journey area characterized by routine style. By structuring these categories and attributes, a total of 16 distinct regional types are derived. This allows for a diagnostic assessment of the identity and values associated with each regional type, as perceiv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The diagnostic tool developed was pilot-tested on 12 depopulation areas in Gangwon Province, and a comparison was made with the investment plans submitted by each region for 2022 and 2023. This process aimed to evaluate the necessity of regional diagnostics and the direction for tailored regional planning.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ere both common attributes applicable to the entire Gangwon Province region and unique characteristics specific to each area. Taking these similarities and specificities into account when implementing investment projects is expected to enhance the execution of these projects.

Efforts to address local extinction need further development. It is essential to actively diagnose and incorporate the current issues, potential, and identity of regions from both the people and places perspectives. By doing so, region-specific spatial strategies can be formulated. The diagnostic tools proposed in this study can provide an objective comparison and analysis of local issues, enabling reliable judgments about the current situation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roject plans tailored to the population decline types specific to each region. Furthermore, it is hoped that these tools can serve

as a means to untangle the complex threads contributing to the concerns of depopulation areas regarding local extinction.

**Keywords :**

Population Decline Area, Local Extinction, Fund to Respond to Local Extinction, Spatial strategy, Regional Characteristics Diagnostic Tool



# 부록 1. 투자계획 사업 사례

\*사업 사례는 2022,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① 거점조성 및 재구조화

### ■ 세부전략: 생활권 설정

#### 03. 부산 영도구: 인구활력도시 「영도 생활권 계획」 수립 추진

- **사업 배경:**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초 고령인구 비율이 매우 높아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지만 지역별로 여건이 상이하므로 장기적이고 실행 가능한 인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에 대한 면밀한 여건 분석 및 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판단
- **사업 목적:**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권별 여건 분석 및 정책 개발 용역 추진
- **사업기간 및 예산:** 2022~2023년 / 300백만원
- **사업 내용**
  -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3개의 중생활권(남항, 청학, 동남)으로 구분, 중생활권 하위 9개의 소생활권으로 세분화시킴
  -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지역 여건변화와 주이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



영도구 중생활권 구분

- | 생활권 구분 (소생활권) | 지역 여건       | 정책 방향      |
|---------------|-------------|------------|
| 남항 중생활권 (4개소) | 노인인구 집중     | 노인인구 복지 증진 |
| 청학 중생활권 (2개소) | 산업, 관광자원 기반 | 유동인구 유입 방안 |
| 동남 중생활권 (3개소) | 취약계층 밀집     | 취약계층 지원    |
- **시사점:**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맞춤형 계획 수립으로 지역의 강점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의 발굴과 시행이 가능해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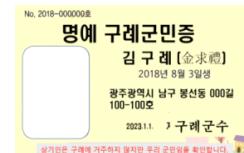
### ■ 세부전략: 지역 거점 조성

#### 50. 전남 구례군: 생활인구<sup>24)</sup> 형성 거점 '구례 활력타운' 조성

- **사업 배경:** 관광 인구(유입 인구, 65%)가 정주 인구(35%)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광 인구가 구례군 인구 유입 및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사업 목적:** 관광(유입) 인구의 생활 인구로 전환
- **사업기간, 예산, 규모:** 2022~2024 / 4,790백만원 / 899.58m<sup>2</sup>
- **사업 내용**
  - 생활인구 형성 거점으로 활용될 구례 활력타운 조성 사업
  - 現 구례읍사무소를 활용하여 명예군민 자치센터로 운영
  - 도시재생사업에서 육성 중인 예비 창업 청년 등의 구례정착을 위한 창업공간 '구례스토어' 조성
  - **시사점:** 구례의 역사건축물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성을 제고



현 구례읍사무소



명예 구례군민증(예시)

24) 지자체 투자계획에서 관계인구로 표기된 제목 및 내용은 「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생활인구로 정정하여 표기하였으며, 타 지자체 투자계획 사례도 동일하게 적용함

## ② 경제활동 기반 마련

### ■ 세부전략: 농공단지 특성화

#### 76. 경북 의성군: 안계 올~래(來), 마을성장 프로젝트!

- **사업 배경:** 귀농 유치 분야에서 2021년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둔 지역으로 귀농귀촌 정책 역량이 높으므로, 귀촌 역량 강화 전략이 인구 유입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 **사업 목적:** 귀농,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유입과 기존 유입 인구의 안정적 정착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인구 확대
- **사업기간, 예산, 대상자:** 2022~2026 / 4,240백만 원 / 안계면
- **사업 내용**
  - 공유가공센터, 체류형 게스트하우스 조성
  - 농산물 가공교육 및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운영
  - 기 조성된 임시주거 컨테이너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장기 체류 공간으로 전환
  - 의성愛 청춘 공작소, <금수장 2호> 청춘샛별멘션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 창업 선도
- **시사점:** 국가,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연계 시행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으로 유입 인구의 장기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



로컬푸드 공유가공센터



컨테이너 임시거주지 리모델링

### ■ 세부전략: 일자리 창업공간 제공

#### 22. 충북 괴산군: <산촌 청년창업특구>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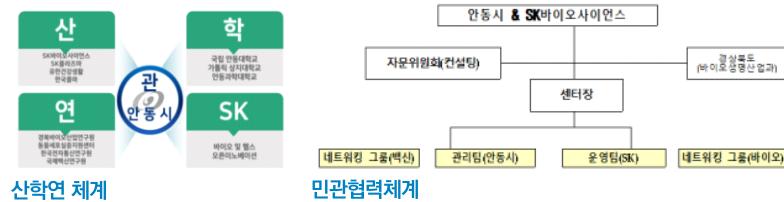
- **사업 배경:** 최근 산림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사업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산림자원이 풍부한 괴산군은 산촌형 사업 특구지로 지정 운영하는 전략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 **사업 목적:** 산림형 사업 발굴과 귀산촌 인구 정착 지원
- **사업기간, 예산, 대상자:** 2022~2027 / 6,100백만원 / 장연면 폐교(장연종, 장풍초) 일대
- **사업 내용**
  - 폐교(장풍초, 장연종) 부지들을 활용한 주거, 일자리, 문화 융합형 특구를 조성 산림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 시행 부지로 활용
  - 산촌의 풍부한 지역자산을 활용한 청년 주체 공동체 사업 성장 지원

하드웨어 사업 (9개)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산림바이오매스발전소, 산림자원순환센터, 반려식물 온실카페, 폐열활용 온수풀 오토캠핑장, 임대용 국산목재목조주택, 스마트모빌리티Hub센터, 산촌청년 공동체 활성화센터, 분양형 산림다자
소프트웨어 사업 (5개)	청년중간지원조직 운영, 산림일자리 창업프로그램, 목공창작 교실, '산촌굿즈' 디자인 개발, 반려식물 플랜테리어교실

- **시사점:**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미래 선도 사업으로 적극 활용한 인구 유입 전략. 또한, 유휴부지의 활용과 에너지자립 시스템 적용한 친환경 특구지역 조성 계획은 탄소중립 사업 시행 특구 지역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 69. 경북 안동시: 미래선도산업 육성 청년기업 지역생태계 조성

- 사업 배경: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5) 제정 등 장기적인 지원 정책으로 바이오산업 기반이 잘 갖추어진 곳으로 지속적인 관련 사업 기반 지원사업이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 사업 목적: 민간주도형 지역 특화 산업 발전과 청년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 사업기간 및 예산: 2022~2026 / 2,083백만원
- 사업 내용
  - 새로운 경북바이오산업단지 지정
  - 민관협업형 프로젝트 계획. 안동시가 바이오백신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 SK 바이오 사이언스 가 센터 운영
  - 기존기업과 창업·벤처기업 지원: 행정지원, 연구장비, 생산장비 등 장비구축 지원, 기업육성, 유관 기관 협력, 역외기업 유치
  - 시사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제도, 정책 지원으로 바이오 지역 선도 산업이 발전되어 옴. 또한 민간 기업들과 협력체계가 지역 핵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



### ■ 세부전략: 특화산업 육성

#### 09. 경기 연천군: 식물 바이오 소재 생산기점 구축 사업

- 사업 배경: 특산작물을 활용한 전략으로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원 사업들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사업 목적: 연천군 특산품을 활용한 스마트 팜, 바이오소재 생산기반 구축
- 사업기간, 예산, 대상지: 2022~2027 / 27,200백만원 / 연천군BIX산업단지 내
- 사업 내용
  - 연천군 농식물 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스마트팜 시설, 바이오소재 생산시설 개발
  - 정밀환경제어가 가능한 식물공장 구축 및 식물바이오소재 생산
- 사업 운영
  - 시기별 운영: 스마트팜 시설 구축(2022~23) → BGMP(천연물 정제추출가공) 시설 구축 (2023~24) → CMO(바이오의약품위탁생산) 시설 구축(2025) → BGMP 인증, CMO 운영 (2027)
  - 국내최초 CMO 시설(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연계 운영, 산업개발센터를 건립하여 기업활동 전주기 지원
- 시사점: 지역 특화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사업으로 타 사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지역 내 투자유치액 695억원),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통한 사업의 지속성 제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증대, 생활인구와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



### ③ 생활 및 정착인구 확대 전략

#### ■ 세부전략: 귀촌 귀향 유도

##### 51. 전남 담양군: 청년이 그린마을 조성

- 사업 배경:** 농업인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현상 심화.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젊은 농업인·귀농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사업 목적:** 청년주도 스마트팜 마을 조성하여 귀촌 청년농부의 유틸리티 및 정착 유도
- 사업기간, 예산, 대상자:** 2022~2023 / 66,685백만원 / 봉산면 일원
- 사업 내용**
  - 하드웨어 사업: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 귀농인 주거 환경 개선
  - 소프트웨어 사업: 청년농부 육성, 대숲맑은 담양 디저트산업 활성화
  - 운영방법:** 청년농부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지속 성 확보, 스마트팜 담당 공무원 지정하여 운영실적 확인 및 개선사항 점검
  - 시사점:** 귀촌 청년농부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인프라 제공 및 기존 농업인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주기적 사업 점검 과정으로 문제점 파악, 사업의 실적 점검뿐 아니라 환류 과정을 통한 사업 운영관리의 지속성 확보



청년이 그린마을 구상도



스마트팜 모식도

#### ■ 세부전략: 커뮤니티 프로그램

##### 32. 충남 부여군: 백마강 123사비 청년공예마을 활성화 사업

- 사업 배경:** 청년층 유출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 청년층 유입 전략 필요. 기존 사업('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2018~2022)')의 후속사업으로 청년인구의 정주인구로의 정착 유도하기 위한 사업 필요
- 사업 목적:** 관광자원(청년공방)을 활용한 생활인구(공예인들) 증가
- 사업기간, 예산, 대상자:** 2022~2023 / 700백만원 / 규암리 일원
- 사업 내용**



부여 마을창고

브랜딩사업	아트상품 개발제작, 공모 및 연구지원, 홍보 판매촉진
공예확산 프로그램	123사비 유통채널 확장, 교육 및 확산 프로그램, 부여 아트페어, 갤러리 운영, 확산 프로그램
시설활용 프로그램	정착센터 운영, 레지던시 운영, 아트큐브 운영

- 기존 사업으로 조성된 공간 인프라와 연계 운영: 공예마을 창업지원으로 조성된 14개 공방, 창업 비즈니스 공간인 부여 마을창고
- 시사점:** 기존 사업에 의해 필요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다양화, 다각화를 통해 공간의 협력도를 높여 관광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 유입 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 54. 전남 영광군: 청년 스타강사 양성

- **사업 배경:** 교육 부문의 불만족이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반면, 방과후 강사는 관외 섭외 비율이 높으므로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 및 교육의 질 향상이 필요
- **사업 목적:** 교육 일자리 양성 사업을 통한 교육 만족도 향상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예산:** 2023.1~12 / 471백만원
- **사업 내용**
  -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창업 인큐베이팅 장소로 활용: 누구나 학교(프로그램실), 누구나 가게(창업 인큐베이팅실)
  - 방과후 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 추진 방법**
  - 빈 점포 리모델링 / 강사 모집 및 클래스 운영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정착 동기 부여: 1년차 창업 준비 운영비 지원(1인 1500만원), 2년차 창업 성공시 추가 지원(1인 1500만원)
- **시사점:** 사전에 청년 대상 조사, 청년정책협의체로부터 이주 결정요인을 조사하여 제시된 요구를 수용한 정책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제고



누구나 학교(2층)



누구나 가게

#### 65. 경북 문경시: 경북연합 청년 거버넌스: 경북에서 가치살자

- **사업 배경:** <가치살자>는 문경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구성원과 사업체 대표가 모인 커뮤니티비즈니스 그룹. 우수 사업으로 평가된 이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청년 유입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
- **사업 목적:** 청년 인구의 유입, 정착을 위한 인프라구축, 기회 제공
- **사업기간:** 2022~2025
- **사업 내용**
  - 경북청년 연합체 구성과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지방에 새로운 청년인구의 흐름을 만들고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이 함께 모여 고민(경북청년 가치살자)하는 사업과, 청년인구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창업 등 청년이 일하기 즐거운 여건을 만드는 종합 기반을 마련
  - 경북청년 연합체가 연계사업들의 추진(경북 청년자립마을활성화지원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운영방안:** 경북협의체 구성, 운영
- **시사점:** 지역주도 일자리창출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된 <달빛탐사대>사업에 이은 사업으로, 새로 유입·정착된 청년들이 경북지역을 연계하는 청년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대안을 고민하여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청년(대상자)주도 사업



문경청년 협의체 <가치살자> 대통령상 수상

#### ④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 ■ 세부전략: 사회서비스 확대

###### 83. 경남 산청군: 의료조합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사업

- **사업 배경:** 초고령지역('21 고령비율 38.3%)이지만 의료서비스가 매우 취약. 61년 개원한 산청성심원 역시 의료인 채용의 어려움으로 2017년 폐쇄됨. 고령 인구를 위하여 지역의료 공공성 향상을 위한 전략 필요
- **사업 목적:** 성심원을 리모델링 하여 의료서비스 거점 시설로 이용
- **사업기간, 예산, 대상지:** 2022~2023 / 500백만원 / 성심원 내 프란치스꼬관
- **사업 내용**
  - 건물 1, 2층(프란치스꼬관)을 리모델링하여 한의원, 건강관리시설, 교육시설, 소모임 지원시설 등으로 활용
- **운영방법**
  -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인 경남산청의료복지협동조합을 운영관리 주체로 설정하여 자치적 운영
  - 의료원 리모델링 후 주치의 제도, 방문 진료(왕진), 건강 리더 활동, 치유 센터 운영, 일상적인 진료 프로그램을 도입 예정
- **시사점:** 기존 시설, 부지를 활용한 고령인구 맞춤 사회서비스 확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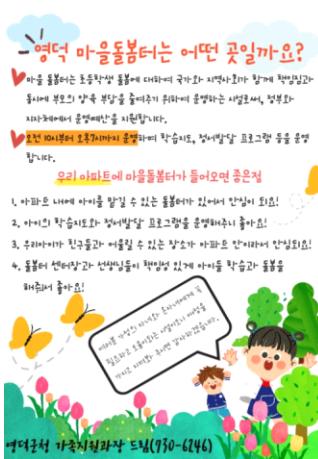


성심원 의원(1961년)

##### ■ 세부전략: 생활인프라 조성 및 효율화

###### 70. 경북 영덕군: 엄마도 아이도 맘~편한 「아이행복해 마을돌봄터」 조성

- **사업 배경:**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했지만 영덕군 내 아동 돌봄시설이 1개소에 불과. 설문조사 결과, 직장 여성의 69.3% 공적돌봄체계를 요구하였음. 이에 돌봄 공백을 메울 가정형 아파트 공공돌봄터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 **사업 목적:** 양육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인구 유출 방지, 마을 돌봄시스템 구축으로 일·가정 양립 실현
- **사업기간 및 예산:** 2022~2023 / 400백만원
- **사업 내용**
  - 마을돌봄터 2, 3호점 조성: 아파트 매입 후, 내부 인테리어 작업으로 놀이공간, 수면공간, 독서공간 등 조성
- **사업 운영**
  - 참여희망 아파트 공개 모집을 통해, 30평형대 아파트 2채 매입
  -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마을돌봄터 설치 협약 체결,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 돌봄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연간 88백만원(군비)을 지원 예정
- **시사점:** 이 사업은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구성. 열악한 교육서비스는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군민의 요구에 대응한 교육 서비스 제공 사업은 인구 감소 대응 방법으로 효과적일 수 있을 것



영덕 마을돌봄터 홍보포스터

## ■ 세부전략: 서비스 플랫폼 제공

### 67. 경북 상주시: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 사업 배경: 인구 활력 주민수요조사에서 교육 환경 개선이 높은 비율로 조사됨. 교육환경 개선이 인구 유지 및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계획
- 사업 목적: 1읍면 1학교 유지를 위한 교육환경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 사업기간 및 예산: 2022~2031 / 31,200백만원
- 사업 내용
  - 온마을 아이들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교육사업 운영
  - 온마을 스쿨버스 운영: 상주시 내 모든 학교의 학생이 이용 가능한 전산화된 스쿨버스 통합 체계
  - 온마을 아이들 3in1 스테이션(청소년 활동 공간) 조성 및 운영
- 시사점: 상주시 전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정주인구 유출 예방 효과 기대

온마을 아이들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 운영	온마을 스쿨버스 운영	온마을 아이들 3in1 스테이션 운영
(거점) 상주시 중앙로 179, 현 Wee센터		
2022년~2031년(10년)		
11,300백만원	14,400백만원	5,500백만원
<b>31,200백만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과 연계한 창의적 미래교육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주시 교육포털 홈페이지 개설</li> <li>*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li> <li>* 고교학점제 연계 지원</li> <li>* 전로진학센터 운영</li> <li>* 학교교육과정 지역 연계활동 지원</li> <li>* 학교통폐합 및 공간재구성 추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 지역 유소중·고등학생 대상 상주시 전체 학교 통학버스 통합 운영</li> <li>- 운영내용 : 오전, 오후 통학 + 학생 체험 활동 지원 + 방과후 활동지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다양한 자유 활동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 후 및 주말 프로그램 + 자유활동 공간 + 쉼터 기능</li> </ul> </li> <li>- 교육청 연계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li> </ul>

### 교육 사업 주요 내용

## ⑤ 특화주거 공급 및 환경 개선

### ■ 세부전략: 인구유입 특화주택 제공

#### 32. 충남 부여군: 농촌 근로자(외국인+내국인) 기숙사 건립

- 사업 배경: 인구 고령화로 농촌 일손이 부족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한 체류형 생활 인구 유입 전략이 필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증가되는 반면 숙소 미확보 근로자 비율('22년 기준 58%)이 높으므로 이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 필요
- 사업 목적: 농촌의 생산기능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지원
- 사업기간, 예산, 규모: 2022~2023년 / 6,500백만 원 / 5,989m<sup>2</sup>
- 사업 내용
  - 유휴시설인 관광호텔을 매입하여 농촌 근로자 기숙사 시설로 리모델링 계획
  - 시설계획: 교육, 공용시설, 식당 및 편의시설, 남녀 각 21실, 50명 수용
  - 사업 운영: 부여군농촌인력중개센터(2021), 부여군 귀농인희망센터가 거점 지역 내에 위치하여 농촌인력 수급의 원활성 제고
  - 시사점: 지역의 유휴시설을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필요 시설로 활용하는 사업.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생활인구 유입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기숙사 예정 유휴시설(호텔)



기숙사 운영 추진체계

#### 33. 충남 청양군: 청년&주거취약계층, 보금자리 주거공간 조성

- 사업 배경: 주택보급률 충남내 최하위, 높은 노후주택비율로 거주기능 공간이 부족하여 공공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필요
- 사업 목적: 관광(유입) 인구의 생활 인구로 전환
- 사업기간 및 예산: 2022~2023 / 6,680백만원
- 사업 내용
  - 쉐어하우스 '함께살아U' 건립: 공무원 관사 철거 후 신축
  - '빈집이음' 사업: 빈집과 주민을 이어주는 사업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최대 5년간 거주, 창업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사업 운영
  - 쉐어하우스는 청양군 미래정책과에서 직영 운영하며 일자리정보센터와, 청년지원센터와 연계 운영
  - 빈집 사업은 빈집 소유자에게 5년간 무상임대 조선을 이행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시사점: 지역 내 공간을 활용한 인구감소 대비 방안 마련. i) 공간 기능 재정립: 공무원 관사 이용인구: 공무원→주민), ii) 빈집 정책: 기존의 정책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 마련

### 주택지원

#### 청년&주거취약계층 보금자리 주거공간 조성

##### 청년쉐어하우스 '함께살아U' 조성

##### 빈집과 주민을 잇는 '빈집이음' 사업 지원

##### 증정기 사업 전원주택 마을조성

중장년 맞춤 주거지원 확대

##### 증정기 사업 탄소중립 아동친화 주거단지

육아기 맞춤 주거지원 확대

##### 증정기 사업 고령친화마을 조성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 인구감소 주거안정 계획

#### 60. 전남 함평군: 근로자 주거복지센터 조성

- 사업 배경:** 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복지편의시설의 부족,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주거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요구가 높게 조사(편의시설 및 원룸형 주택, 87%)됨
- 사업 목적:** 문화편의시설 건립으로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
- 사업기간, 예산, 대상지 및 규모:** 2023~2025 / 8,000백만원 / 백호리 일반산업단지 내 / 2,880㎡
- 사업 내용**
  - 주거복지센터 신축: 문화편의시설(1층), 기숙사(2~4층), 옥상(하늘정원)
  - 소프트웨어 사업: 전시 프로그램,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생활체육강사 건강 프로그램 운영
- 시사점:** 지역에 일터를 기반으로 둔 생활형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수요 조사를 통한 수요자 맞춤 사업



사업예정지



주거복지센터 조감도(예시)

#### 67. 경북 상주시: 청춘상주 모락[樂]모락[樂](청년정책 지원사업)

- 사업 배경:** 기 추진중인 청년인구 유입 사업들에 의해 청년인구 유입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유입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
- 사업 목적:** 청년인구 주거 시설, 청년공간 모임 환경 제공으로 체계적인 정착 지원
- 사업기간 및 예산:** 2022~2025 / 9,745백만원
- 사업 내용**
  - 청년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홍보 → 하드웨어 구축: 청년 거주공간 → 청년 취업·창업 프로그램 운영 →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상주로컬창업학교
  - 청년정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 수렴(2020). 단계적인 사업 계획으로 체계적으로 청년정책 지원사업 운영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간담회

구성 1 청년 살아보기 프로그램 활성화	구성 3 청년 드림하우스 조성	구성 3 취업·창업 디딤돌 구축	구성 4 청춘X상주 도약캠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2023년~2025년(3년)	2023년~2024년(2년)	2023년~2025년(3년)	2022년~2025년(4년)
2023년~2025년(3년)			
300백만원	8,800백만원	150백만원	495백만원
<b>9,745백만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지역체험 프로그램 재정비 및 홍보 강화</li> <li>- 상주시 청년 정책 홈페이지 구축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상시 신청 접수</li> <li>- 청년 희망주택 신축: * 공동하우스 1기동 (36명 주거 공간 조성), 주차장, 공용공간</li> <li>- 청년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 원룸 등 다세대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쉐어하우스 구축 (36명 거주 공간 조성)</li> <li>- 청년 내일 플러스센터 진로상담,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강화</li> <li>- 동아리 등 활동지원</li> <li>- 자격증 취득 지원</li> <li>- 시/기업/청년 연계한 일자리 매칭 사업</li> <li>-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캠프 운영</li> <li>- 지역기자 7대 분야 사업 아이템 발굴</li> <li>- 기초교육 실시 및 우수팀 선발을 통한 사업화 지원</li> </ul>			

청년 인구정책 지원사업 주요 내용

## ⑥ 지역 특화 사업

### ■ 세부전략: 관광 특화

#### 49. 전남 곡성군: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핵심연계거점 조성

- 사업 배경: 섬진강변 관광사업이 침체됨에 따라 지역 경제 침체 지속. 섬진강권 4개 지자체(곡성, 구례, 광양, 하동)가 '초광역 섬진강권 통합관광 벨트 조성' 협약. 관광산업을 활성화로 생활인구 유입 유도
- 사업 목적: 관광콘텐츠 개발로 생활인구 유입과 관광산업 재도약
- 사업기간, 예산, 대상지: 2023~2024년 / 6,000백만원 /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일원
- 사업 내용
  - 레저케이션 빌리지 조성: 레저케이션 호텔, 아트갤러리, 기차마을 로컬공방 골목길
  - 섬진강 그린루프(Greenloop) 조성: 증기기관차 개선, 공유자전거 플랫폼 구축
- 사업 추진
  - 섬진강권 4개 지자체 관광벨트 업무협약(2021년) → 지자체 실무협의회 구성 → 추진체계 조직(지역기업, 사회단체, 정부, 전문가)
  - 시사점: 타 지자체와 지역 간 경계를 넘어 통합 관광권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 사업으로 섬진강변 관광지의 조화로운 발전과 연계 일자리 증대 효과 기대



레저케이션 빌리지 구상안

### ■ 세부전략: 장소특화 공간전략 제시

#### 26. 충북 옥천군: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

- 사업 배경: 군 전체 면적의 83.8%가 특별대책권역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보존되어 있음. 대청호 부근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관광 수요 증가 요인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에게는 교통불편을 야기하고 대청호에 대한 대책 필요성
- 사업 목적: 대청호 수몰지역 내 친환경전기도선 도입 및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지역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 사업기간 및 예산: 2022~2024 / 11,020백만원
- 사업 내용
  - 수상교통망 구축: 전기도선 건조, 선착장, 진입로 정비 및 부대시설 설치
- 사업 기대효과
  - 생태관광지역의 순환형 이동체계 구축 실현: 유일한 교통시설(국도)을 이용할 경우 1시간 이상 소요, 친환경전기도선을 이용 시 관광지 내 주요시설 30분내 이동 가능
- 시사점: 지역의 방해요인일 수 있는 규제지역(대청호)을 기회화 활용



대청호 친환경전기동력선 운항계획(안)



선착장(예시)

## 26. 충북 옥천군: 금강변 친수공원 쉼터조성(물멍, 꽃멍)

- 사업 배경:** 금강변 친수 공원 내 유채꽃 단지는 충북 최대 규모(83,000㎡)로 명소화 되어가고 있음. 친수공간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제공함에 따라 생활인구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 사업 목적:** 금강변 친수공원과 연계하여 산책로 및 휴식공간을 조성, 생활인구 증가 도모
- 사업기간 및 예산:** 2022~2023 / 1,100백만원
- 사업 내용**
  - 금강변 친수공간과 연계한 전망대 및 데크길 조성: 유채꽃단지와 금강이 조망 가능한 시설 설치로 물멍, 꽃멍(물이나 꽃을 보면서 정신적 휴식을 취함) 공간 마련
  - 사업 운영
    - 코로나로 연기된 유채꽃 축제의 재운영
    - 금강을 따라 금강유원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 관광 자원과 연속성 확보 가능
  - 시사점:** 최근 SNS에서 사진찍기 좋은 장소로서 주목받는 장소를 네이밍화(물멍, 꽃멍) 하여 특화한 전략, 생활인구 증가 기대

거리 두기 풀리니... 옥천 유채꽃 단지 '구름 인파'



유채꽃 단지에 관한 언론보도(22' 충북일보)



데크길(예시)

### ■ 세부전략: 학교 특성화

#### 59. 전남 진도군: 진도국악고 중심 신바람 공연예술전문가 육성 및 정착 지원

- 사업 배경:** 전국 유일의 '민속문화예술특구' 지역으로 국악원 중심으로 국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예술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일자리, 주거 지원이 인구 유입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사업 목적:** 진도국악고등학교 연계 문화예술기반 확충 및 관련 인구 유입
- 사업기간 및 예산:** 2022~2026 / 2,700백만원
- 사업 내용**
  - 진도군 국악 및 전통문화 전문기관 기반 공연예술 전문가 양성
  - 군립민속예술단 운영 활성화로 실전경험 강화 및 대중 접점 확대
  - 전통문화·국악 저변확대 및 지역축제 연계
  - 사업 운영**
    - 전년도 성과분석, 계획 및 전략 구상 → 참여자 모집 → 인프라 구축 → 전문인력 양성, 공연활동 추진 → 군립민속예술단 순회공연, 경연 프로그램 운영 → 우수활동 콘텐츠화 및 우수사례 확산
    - 시사점:** 진도국악고, 국립남도국악원 중심으로 문화·예술 클러스터 구축,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복지 향상 및 예술인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소멸 위기 대응



진도국악고등학교

군립민속예술단 전통문화 계승 경연 프로그램 구성

①(경연) 저변 확대	②(공유) 콘텐츠 피칭	③(참여) 예술인 유입
국악·전통문화의 현대화 재해석의 경연 프로그램 운영(상설공연 연계)	공연 창작물 콘텐츠화 유튜브 피칭 및 온라인 전시(우수사례 확산)	진도군민, 진학 가구, 예술인 등 프로그램 참여 및 진도군 유입

전통문화 계승 경연 프로그램(가칭)

## ⑦ 공간 장소성 강화

### ■ 세부전략: 원도심 활성화

#### 41. 전북 부안군: 줄포 소도심 신활력 사업

- 사업 배경: 항구 기능 상실 이후 쇠퇴한 지역으로 초 고령사회에 진입. 초고령사회 대응한 지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 사업 목적: 줄포상설시장의 유류시설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 사업기간, 예산, 대상지: 2022.10~2023.12 / 570백만원 / 줄포상설시장 일원
- 사업 내용
  - 줄포상설시장 유류 부지 및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생산공방, 로컬푸드 판매장, 마실장터 조성
  - 시설들을 작업장, 거점공간, 노점구역 등으로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
- 운영방법
  - 생산공방 활용: 줄포시장 특산품 제조 생산인력(노인일자리사업 연계) 모집
  - 로컬푸드 판매장 활용: 상인, 주민, 방문객 거점공간
  - 마실장터 활용: 어르신들 부안형 푸드플랜 기획 생산(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참여 촉진
- 시사점: 유류시설, 부지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줄포상설시장



줄포시장 저온창고(유류시설)

### ■ 세부전략: 유류자산 활용

#### 58. 전남 장흥군: 힐링 문흥(文興) 가족친화환경 조성

- 사업 배경: 대상지 인근에 신규아파트 건립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유입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휴식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 옛 교도소 유류 공간을 주민 편의 공간으로 전환
- 사업기간, 예산, 규모: 2022~2023 / 3,000백만원 / 약 10,000m<sup>2</sup>
- 사업 내용
  - (옛)장흥교도소 부지에 산책로 및 공원 조성
  - 건축물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공간 조성
  - 문화공간과 연계된 다양한 예술프로그램 운영
- 사업 운영
  - (옛)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전문가, 지역주민, 어린이 의견 수렴
  - (옛)장흥교도소 원형, 활용현황에 관한 기록 보전 노력(용역)
- 시사점: 발전이 미흡했던 교도소 부지를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정착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대상지



문흥 가족친화환경조성

#### 59. 전남 진도군: 관광자원과 연계한 청년인구 거점, 청솔(청년 솔비치)타운 조성

- **사업 배경:** 대명리조트 개장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였으나 배후지역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활용 가치가 높음. 배후지역을 활용한 인구 유도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사업 목적:** 역사·문화·관광 자원 연계 청년인구 유입 유도
- **사업기간 및 예산:** 2022~2024 / 4,300백만원
- **사업 내용**
  - 배후지역 내 폐교인 의동초교를 재정비하여 청년인구 유입 거점 시설 구축: 청솔 스토어(청년창업몰), 청솔 공방, 청솔 주택(청년주거공간)
  - 청년-지역 간 공존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지역주민 소통 북카페운영, 공유주방 등) 추진
  - 조성 후 지역개발, 귀농, 생활편의시설 등 거주민, 유입인구 거점 공간으로 활용
- **시사점:** 관광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있는 지역 관광 자원과 유휴시설을 연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의동초교(폐교)



주요 사업 내용

## ⑧ 연계정책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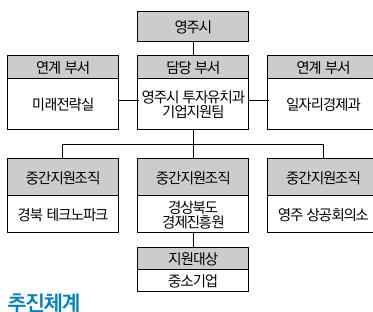
### ■ 세부전략: 부처협업 확대

#### 72. 경북 영주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기업일자리 확대 기반 확충

- 사업 배경:**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종사자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을 통한 생산기능인구 유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사업 목적:**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인력 확대를 통한 인구 유입
- 사업기간 및 예산:** 2023~2026 / 5,200백만원
- 사업 내용**
  -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디자인제작, 홍보물제작, 컨설팅, 특허출원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 사업: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컨설팅 지원
  - 농공단지 특화맞춤형 기업지원: 1:1 맞춤형 지원
  -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 사업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의 관련 사업들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성장 지원 사업 추진
- 시사점:**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타 부처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영주시 업무협약



### ■ 세부전략: 지원기관 운영

#### 04. 대구 남구: 인구감소위기대응센터 운영

- 사업 배경:** 인구감소위기대응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 사업 목적:**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시키기 위한 센터 운영
- 사업예산 및 기간:** 2022~2026 / 1,600백만원
- 사업 내용**
  -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인구감소위기대응센터를 중심으로 내외부조직, 주민 대표기구, 협력기관 등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 신규 기금사업 발굴, 기금사업 중간점검, 성과분석 및 환류(PLAN, DO, CHECK, ACTION)
- 사업 추진 체계**



인구감소위기대응센터 전략

구분	역할
사업부서	대구시 정책기획관실 사업 종괄운영 및 관리
운영주체	대구테크노파크 인구감소위기대응센터 운영
협력기관	대구경북연구원 내구테크노파크 기금사업의 성과 분석 및 의견제시
민관협의체	대구시 인구정책조정위원회 기금사업 자문 및 컨설팅

- 시사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을 위한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 운영하여 개별사업 간의 효과적인 연계,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성과 제고

## 부록 2. 지역 특성 진단표

No	구분	질문	기초 정보						응답
SQ1	지역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지역별 표기(시군구 기준)						
SQ2	성별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SQ3	나이	귀하는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69세	⑥ 70세 이상	
DQ1	거주 기간	지역에 거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35년 미만	35~40년 미만	40년 이상		
DQ2	소속	귀하의 지역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① 일반주민	② 지역리더 (이장, 부녀회장)	③ 공무원, 행정 관련 업무자	④ 지역 상인 및 관계자	⑤ 기타 (기입)		
DQ3	유형	지역 정착 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원주민	② 다른 지역에서 이주 (1년)	③ 구촌/구농 (U년)	④ 일시적 거주	⑤ 기타 (기입)		

No.	Q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응답
1	1-1	우리 지역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은 편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2	1-2	우리 지역은 외부 관광객들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준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3	1-3	우리 지역은 주말용 별장용으로 생활을 해도 좋은 지역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4	2-1	낯선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주기를 바란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5	2-2	지역 경제를 위해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더 확충되기를 바란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6	1-4	주변에 주말용이나 별장용으로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7	1-5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느껴진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8	1-6	최근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들이 주변에 많이 보인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9	2-3	관광객들이 더 오게 하려면, 지역 상점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0	2-4	예술인 마을, 외국인 마을 등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더 들어오면 좋겠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11	1-7	타 지역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기에 우리 지역은 괜찮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No.	Q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응답
12	1-8	젊은 사람들이 더 들어와서 살면 지역 환경이 더 나아지는 것이 느껴진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13	1-9	주변에 청년들이 장사를 하는 모습이 지역에 활기를 넣어준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14	1-10	젊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필요하며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사는 주민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15	2-5	청년들이 다양한 지원을 더 받아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16	3-1	우리지역은 아주 자랑스러운 자연경관 및 특산물을 보유하고 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17	3-2	우리지역 자연환경은 지역 경제의 밑거름이며 계속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18	4-1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이나 상점이 더욱 더 많아져야 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19	3-3	우리 지역의 자연자원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20	4-2	지역특산품 중심의 경제활동이 농업/어업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21	3-4	우리 지역은 고유의 자연 경치를 보기 위해 오는 관광객들이 많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22	3-5	우리 지역 자연환경은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23	3-6	우리 지역으로 관광온 사람들이 자주 가는 상점이나 관광시설이 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24	4-3	우리의 특산품을 체험하고 판매하기 위한 상점이나 시설이 더 늘어났으면 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25	4-4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의 자연 경치를 보기 위해 더 자주 많이 오면 좋겠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26	3-7	우리 지역의 대중교통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잘 조성되어 있는 편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27	3-8	우리 지역은 아직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곳이 더 많이 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28	3-9	우리는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관광 거점으로 도내에서 중요한 입지가 될 수 있는 곳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29	3-10	우리 지역의 자연 경치는 계절 변화에 따라 매력 있는 요소들이 많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30	4-5	우리 지역의 자연 가치가 전국 및 세계에 더욱 알려지면 좋겠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31	5-1	우리 지역은 대표적인 문화유산도시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32	5-2	우리 지역은 국민 누구나 아는 역사적, 전통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33	6-1	우리는 우리만의 지역 전통문화의 가치를 지키고 계승해 나가야 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34	6-2	유·무형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35	5-3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 내 생활의 약간의 불편함은 감내할 수 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36	5-4	우리 지역 문화유산은 이미 유명한 관광자원으로 알려져 있어 방문객도 많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37	6-3	우리 지역에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 더 많이 남아있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38	6-4	우리 지역 문화유산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면 좋겠다.	⑦	⑥	⑤	④	③	②	①	-

No.	Q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응답
39	5-5	내가 사는 집이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 방문자들에게 보여줄 의사가 있다.	(7)	(6)	(5)	(4)	(3)	(2)	(1)	
40	5-6	문화유산을 전수하고 지키기 위한 전통 행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6)	(5)	(4)	(3)	(2)	(1)	
41	5-7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지자체에서 지역 행사나 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7)	(6)	(5)	(4)	(3)	(2)	(1)	
42	5-8	우리 문화유산은 대표적 지역가치로 성장시킬 만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7)	(6)	(5)	(4)	(3)	(2)	(1)	
43	5-9	오랜 역사가 아니더라도 보존 가치 있는 지역유산이 우리 지역에 있다.	(7)	(6)	(5)	(4)	(3)	(2)	(1)	
44	5-10	개발사업 도중에 문화재가 출토되면 문화재에 대한 보존이 공사보다 중요하다.	(7)	(6)	(5)	(4)	(3)	(2)	(1)	
45	6-5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직이나 기능이 필요하다.	(7)	(6)	(5)	(4)	(3)	(2)	(1)	
46	7-1	우리 지역에는 누구나 알만한 우리 지역의 대표 전통 축제가 있다.	(7)	(6)	(5)	(4)	(3)	(2)	(1)	
47	7-2	지역 축제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준다.	(7)	(6)	(5)	(4)	(3)	(2)	(1)	
48	7-3	지역 축제가 우리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개최 시기나 장소가 조금 변경되어도 괜찮다.	(7)	(6)	(5)	(4)	(3)	(2)	(1)	
49	8-1	원거리에서 지역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7)	(6)	(5)	(4)	(3)	(2)	(1)	
50	8-2	지역 축제가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언젠가 지역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7)	(6)	(5)	(4)	(3)	(2)	(1)	
51	7-4	우리 지역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 일의 강도에 차이가 있다.(농번기, 농한기)	(7)	(6)	(5)	(4)	(3)	(2)	(1)	
52	7-5	지역 축제는 우리의 경제적 도움이 되는 활동이기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이다.	(7)	(6)	(5)	(4)	(3)	(2)	(1)	
53	7-6	갑작스러운 지역 행사라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참여하려는 사람이다.	(7)	(6)	(5)	(4)	(3)	(2)	(1)	
54	8-3	지역 축제가 있으면 지역 주민들은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들이 어느 정도 있다.	(7)	(6)	(5)	(4)	(3)	(2)	(1)	
55	8-4	지금의 이 축제를 잘 활용하면 지역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6)	(5)	(4)	(3)	(2)	(1)	
56	7-7	우리 주변에는 축제를 위한 기반시설 및 장소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7)	(6)	(5)	(4)	(3)	(2)	(1)	
57	7-8	전통 축제를 더욱 많이 알리고, 프로그램도 강화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7)	(6)	(5)	(4)	(3)	(2)	(1)	
58	7-9	우리 지역에는 축제나 지역 행사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7)	(6)	(5)	(4)	(3)	(2)	(1)	
59	7-10	더 많은 축제와 행사로 지역을 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	(6)	(5)	(4)	(3)	(2)	(1)	
60	8-5	우리 지역에 축제나 행사를 위한 시설 등 투자가 더 필요하다.	(7)	(6)	(5)	(4)	(3)	(2)	(1)	
61	1-11	우리 지역은 주변에 오랫동안 일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7)	(6)	(5)	(4)	(3)	(2)	(1)	
62	1-12	우리는 지역 내 사람들끼리 서로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7)	(6)	(5)	(4)	(3)	(2)	(1)	
63	1-13	주변 인근지역 사람들과 교류하고 종종 방문이 있는 편이다.	(7)	(6)	(5)	(4)	(3)	(2)	(1)	
64	2-6	외지인의 찾은 방문이 오히려 우리지역에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7)	(6)	(5)	(4)	(3)	(2)	(1)	
65	2-7	지역민 거주민을 위한 일자리나 복지가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	(7)	(6)	(5)	(4)	(3)	(2)	(1)	

No.	Q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응답
66	1-14	대도시로 나갔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7)	(6)	(5)	(4)	(3)	(2)	(1)	-
67	1-15	주변에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제법 있는 편이다.	(7)	(6)	(5)	(4)	(3)	(2)	(1)	-
68	1-16	지역을 잘 모르는 청년들이 장사하겠다고 오면 걱정된다.	(7)	(6)	(5)	(4)	(3)	(2)	(1)	-
69	2-8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7)	(6)	(5)	(4)	(3)	(2)	(1)	-
70	2-9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이 더 좋아져 타지로 나가지 않으면 좋겠다.	(7)	(6)	(5)	(4)	(3)	(2)	(1)	-
71	1-17	우리 지역은 노인, 청년 모두 살기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7)	(6)	(5)	(4)	(3)	(2)	(1)	-
72	1-18	지역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잘 알고 지내면서 살 수 있는 곳이다.	(7)	(6)	(5)	(4)	(3)	(2)	(1)	-
73	1-19	지역의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지역에 활기를 넣어준다.	(7)	(6)	(5)	(4)	(3)	(2)	(1)	-
74	1-20	지역 중장년층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 주면 좋겠다.	(7)	(6)	(5)	(4)	(3)	(2)	(1)	-
75	2-10	은퇴자들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혜택이 필요하다.	(7)	(6)	(5)	(4)	(3)	(2)	(1)	-
76	3-11	우리 지역에는 도시적 특성(관공서, 상가거리 등)이 있는 중심지가 있다.	(7)	(6)	(5)	(4)	(3)	(2)	(1)	-
77	3-12	지역 산업활동(농/어업, 제조업 등)을 위한 산업시설(공장, 설비, 창고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7)	(6)	(5)	(4)	(3)	(2)	(1)	-
78	4-6	우리 지역에는 대형 마트나 쇼핑몰, 호텔 등 현대적 시설이 더 많아져야 한다.	(7)	(6)	(5)	(4)	(3)	(2)	(1)	-
79	3-13	우리 지역의 산업시설은 인근 지역 대비 더 활성화되어 있다.	(7)	(6)	(5)	(4)	(3)	(2)	(1)	-
80	4-7	우리는 지역 산업을 바탕으로 중심지로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7)	(6)	(5)	(4)	(3)	(2)	(1)	-
81	3-14	지역 산업에 종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편이다.	(7)	(6)	(5)	(4)	(3)	(2)	(1)	-
82	3-15	지역 산업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 큰 역할을 한다.	(7)	(6)	(5)	(4)	(3)	(2)	(1)	-
83	3-16	지역민을 위한 문화(공연장, 미술관 등)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7)	(6)	(5)	(4)	(3)	(2)	(1)	-
84	4-8	지역에 공공, 의료, 문화, 교육 등 생활편의시설이 더 늘어났으면 한다.	(7)	(6)	(5)	(4)	(3)	(2)	(1)	-
85	4-9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인재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7)	(6)	(5)	(4)	(3)	(2)	(1)	-
86	3-17	우리 지역의 대중교통은 산업 및 상업 요지 중심으로 잘 형성되어 있다.	(7)	(6)	(5)	(4)	(3)	(2)	(1)	-
87	3-18	우리 지역의 주요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7)	(6)	(5)	(4)	(3)	(2)	(1)	-
88	3-19	우리 지역은 도내에서 경제사회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7)	(6)	(5)	(4)	(3)	(2)	(1)	-
89	3-20	우리는 외지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7)	(6)	(5)	(4)	(3)	(2)	(1)	-
90	4-10	우리는 지역민들이 함께 협심하여 지역 산업을 더욱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	(7)	(6)	(5)	(4)	(3)	(2)	(1)	-
91	5-11	우리 지역에는 (현재는 쇠퇴했더라도) 대표적인 산업이 있다.	(7)	(6)	(5)	(4)	(3)	(2)	(1)	-
92	5-12	우리 지역의 대표 산업은 다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6)	(5)	(4)	(3)	(2)	(1)	-

No.	Q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조금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응답
93	6-6	우리 지역에 소재한 큰 기업들이 지역 경제의 기반이며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7)	(6)	(5)	(4)	(3)	(2)	(1)	.
94	6-7	우리 지역은 신규 기업의 지속적 유입과 확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7)	(6)	(5)	(4)	(3)	(2)	(1)	.
95	5-13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 구축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7)	(6)	(5)	(4)	(3)	(2)	(1)	.
96	5-14	우리 지역은 특별한 산업(또는 기업)이 있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7)	(6)	(5)	(4)	(3)	(2)	(1)	.
97	6-8	우리 지역 산업은 앞으로 확장을 통해 충분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7)	(6)	(5)	(4)	(3)	(2)	(1)	.
98	6-9	우리 지역 산업(기업)을 더욱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면 좋겠다.	(7)	(6)	(5)	(4)	(3)	(2)	(1)	.
99	5-15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기반 안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7)	(6)	(5)	(4)	(3)	(2)	(1)	.
100	5-16	지역의 산업(기업)은 우리에게 충분한 일자리와 삶의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7)	(6)	(5)	(4)	(3)	(2)	(1)	.
101	5-17	우리 지역의 대표 산업은 계속 성장할 가치가 있어서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7)	(6)	(5)	(4)	(3)	(2)	(1)	.
102	5-18	우리 지역 산업은 우리 지역을 후대에까지 이어지게 할 가치 있는 자산이다.	(7)	(6)	(5)	(4)	(3)	(2)	(1)	.
103	5-19	아직 대표 산업이라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저력 있는 회사나 산업이 지역에 있다	(7)	(6)	(5)	(4)	(3)	(2)	(1)	.
104	5-20	지역 내 경제성장을 위한 공장 개발 등이 내 생활에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된다.	(7)	(6)	(5)	(4)	(3)	(2)	(1)	.
105	6-10	지역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공동체(커뮤니티)가 필요하다.	(7)	(6)	(5)	(4)	(3)	(2)	(1)	.
106	7-11	우리 지역은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거리(시장, 상점가 등)가 있다.	(7)	(6)	(5)	(4)	(3)	(2)	(1)	.
107	7-12	우리 지역은 주요 장소(시장, 상점가)가 경제 거점의 역할을 한다.	(7)	(6)	(5)	(4)	(3)	(2)	(1)	.
108	7-13	외부에서 찾아온 지인들에게 언제라도 구경시켜 줄 만한 지역 대표 장소가 있다.	(7)	(6)	(5)	(4)	(3)	(2)	(1)	.
109	8-6	단발적으로 찾아오는 방문객은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7)	(6)	(5)	(4)	(3)	(2)	(1)	.
110	8-7	갑작스레 이루어진 행사나 축제 등 이벤트는 지역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7)	(6)	(5)	(4)	(3)	(2)	(1)	.
111	7-14	우리 지역은 관광객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7)	(6)	(5)	(4)	(3)	(2)	(1)	.
112	7-15	축제는 단발성 놀이라는 느낌이 강하며 지역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7)	(6)	(5)	(4)	(3)	(2)	(1)	.
113	7-16	우리 지역은 외부 방문객보다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이 더 중요하다.	(7)	(6)	(5)	(4)	(3)	(2)	(1)	.
114	8-8	우리 지역사람들은 연중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직장인, 소상공인 등)이 많다.	(7)	(6)	(5)	(4)	(3)	(2)	(1)	.
115	8-9	우리 지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본적이며 체계적인 산업 활성화가 중요하다.	(7)	(6)	(5)	(4)	(3)	(2)	(1)	.
116	7-17	우리 지역은 특정 관광객을 위한 지원보다 일상적인 생활 지원공간이 더 도움 된다.	(7)	(6)	(5)	(4)	(3)	(2)	(1)	.
117	7-18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이나 거리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7)	(6)	(5)	(4)	(3)	(2)	(1)	.
118	7-19	한 달 살기, 원격근무 같은 지역 체류 사례가 있으며, 우리 지역은 장점이 있다.	(7)	(6)	(5)	(4)	(3)	(2)	(1)	.
119	7-20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곳이 활성화되어 지역민들을 위한 경제가 살아야 한다.	(7)	(6)	(5)	(4)	(3)	(2)	(1)	.
120	8-10	외부 방문자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상점 등이 더 있어야 한다.	(7)	(6)	(5)	(4)	(3)	(2)	(1)	.